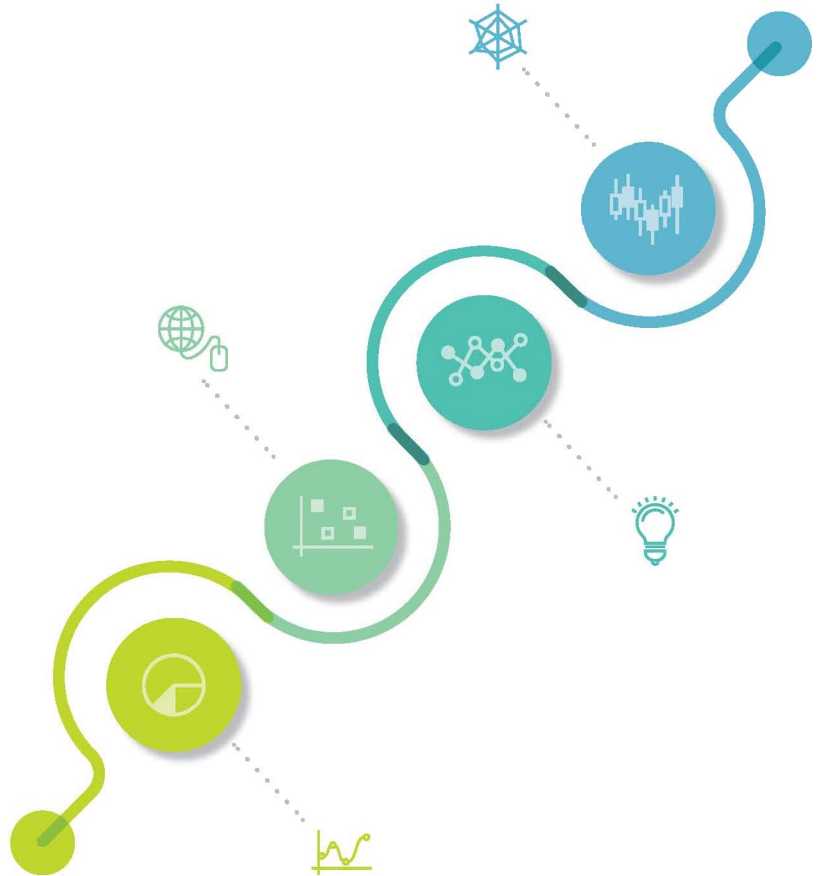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 연구진

강영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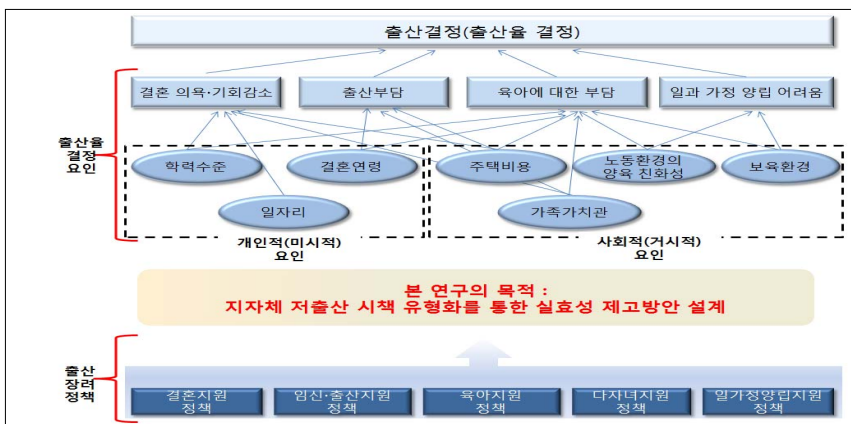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연구 요약

## 1. 연구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중앙 및 지방차원에서 다양한 저출산 관련 시책을 시행해왔으나 정부의 포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 저출산 문제는 인구의 양적 규모를 감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존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관련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저출산 시책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환경에 적합한 시책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
  - 저출산 시책 현황 분석을 위해서 기초지자체 수행 저출산 시책을 정책설계 기준에 의거하여 유형화를 시도하였음
  - 지자체별로 특화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서 정책환경을 유형화하고 환경별 요인을 분석하여 이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모형



## 2. 주요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저출산 시책을 종류별로 정리한 결과, 총 161개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음
  - 저출산 사업 종류별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통사업(27%)보다는 자체사업(73%) 비율이 더 높았으나 예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통사업(2017년 현재 24.1조원, 87%)에 비해 지방정부 자체사업의 예산(2017년 현재 3.46조원, 13%)은 현저히 적은 편임
  - 생애단계별로는 육아지원(39%), 출산지원(36%), 다자녀지원(20%), 결혼지원(5%) 순으로 사업의 종류가 많이 나타남
  - 정책대상별로는 일정소득기준 이하 대상 사업이 26%인데 비해 전체대상 시책이 무려 74%를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주도 공통사업에서 일정소득기준 이하 대상 사업이 50%에 달하는 데 반해 자체사업에서는 15%에 불과함
  - 저출산 시책의 정책수단을 서비스공급, 비용지원, 현금지원, 기타 등으로 구분하였을 때, 비용지원(47%)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서비스공급(41%), 현금지원(10%), 기타(2%) 순으로 나타남
  - 정책내용별로 보면, 임신출산비용지원을 목적으로 한 시책의 종류가 2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외에 보육기관지원(13.4%), 의료비지원(13.4%), 소득보전(10%), 보육서비스이용지원(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저출산 시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생애단계별)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각 지자체 환경에 부합하면서 출산 동기를 부여하는 고유한 정책이 부족하며, 다자녀 출생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미흡함
  - (자체사업 여부)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은 공통사업과 유사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정책적 차별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은 전체계층 또는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접근을 주로 시도하나 한정적 자원 하에서의 보편적 접근이므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정책수단) 대부분의 정책이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음
- (정책목표) 임신출산비용절감이나 의료비 절감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가장 많아 이미 출산한 이후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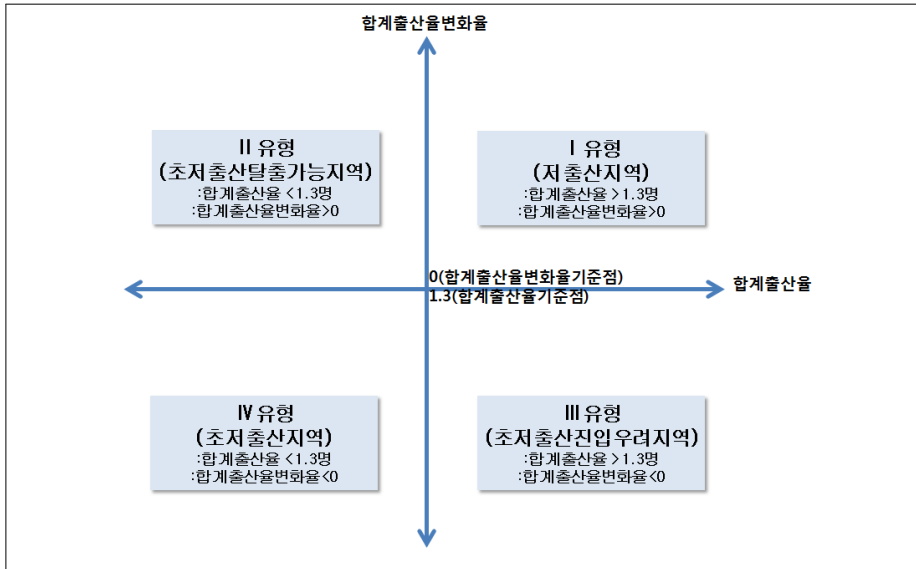
<표 1>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의 특성

구분	내용
자체사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 유사성</li> <li>- 공동사업과 차별화된 특화적 자체사업 미구현</li> </ul>
생애이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 편중</li> <li>- 출산 이전 출산동기 부여 정책 미흡</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접근</li> <li>- 수요 부합성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미비</li> </ul>
정책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 지원 편중</li> <li>-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 미비</li> </ul>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요인 고려 미흡</li> <li>- 지원대상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 적극적 정책 미비</li> </ul>

#### □ 지자체 저출산 환경 유형화 및 요인분석

- 지자체 저출산 환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함
  - 2011~2015년의 5년 간 기초지자체 226개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율 진입값인 1.3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율은 0을 기준으로 <그림 2>의 4가지 유형으로 지자체를 유형화 함
  - 저출산 요인은 인구구조적 특성(가임여성 수, 시군구별 평균 초혼연령), 경제적 요인(지역총생산, 가구평균 주거비), 사회문화적 요인(보육시설 총계, 국공립 어린이집 수)을 선정함

<그림 2> 지역 유형 구분기준



-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임여성 수는 다소 적으나 초혼연령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그러나 경제적 요인 중,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사료됨
  - 보육시설은 오히려 평균에 비해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총량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평균에 비해 적게 설치됨
-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임여성 수가 평균에 비해 많으나 초혼연령이 높음 편임
  - 전유형 평균에 비해 평균 주거비가 다소 높은 편임
  -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보다 많이 설치되어 보육환경이 양호함
-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임여성 수가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나 초혼연령이 낮은 편임
  - 경제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주거비도 적음
  - 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설치수준도 평균에 미치지 못함

-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음
  - 가임여성 수와 초혼 연령 평균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음
  - 지역총생산이 평균보다 높지만 동시에 주거비가 높음
  - 보육시설의 총계는 평균보다 많아 보육환경 수준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표 2>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종합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1유형 평균	2유형 평균	3유형 평균	4유형 평균	전유형 평균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41,888	81,238	31,201	77,221	56,678
	초혼연령	29.15	29.85	29.09	29.88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284,181	4,880,524	3,369,080	6,605,837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9	45	27	54	38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161.49	233.31	132.85	217.44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6.82	12.76	6.33	16.49	10.29

주: 1유형은 저출산지역; 2유형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은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은 초저출산지역

- 각 유형별로 대표적인 지역을 선정하여 저출산 정책의 패키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정책 패키지 간 차별점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앞서 살펴본 전체 저출산 정책 패키지 특성과 유사하며, 각 유형별로도 차별점이 그리 크지 않음
  - 전체 패키지 특성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지원 및 육아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내용도 지역적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음

□ 지자체 저출산 시책 실효성 제고방안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화 핵심 정책에 주력해야 함
  - 공급자 중심의 ‘백화점식’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점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각 지역의 주요 정책대상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저출산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정책 환경 유형화에 따른 요인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 유형에 따른 정책 설계 방안 예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1유형)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다자녀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2유형) 결혼준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결혼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3유형) 결혼 이후 출산준비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임신·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4유형) 결혼준비기에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는 결혼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임신 출산정책을 특화하며,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표 3>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예시)

구분	주요 정책대상	정책강화 분야	관련 정책사례
1유형 :저출산지역	출산이후 양육기	다자녀지원정책 - 양육비 절감 -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교육비 절감  출산·양육지원정책 - 국공립어린이집확대	■ 프랑스 파리지 - 예콜 룡그헤 파리 운영  ■ 스웨덴 - 아기 친화적인 공공장소 조성



구분	주요 정책대상	정책강화 분야	관련 정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맘지원센터</li> </ul> </li> <li>■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ve Children,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li> </ul> </li> </ul>
2유형 :초저출산탈출 가능 지역	결혼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지원</li> <li>- 청년취업 지원</li> <li>- 만남기회제공</li> </ul> </li> <li>■ 임신·출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지원강화</li> <li>- 고위험산모 산전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택수당</li> <li>- 이사특별수당</li> </ul> </li> <li>■ 대구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li> </ul> </li> </ul>
3유형 :초저출산진입 우려 지역	출산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 전반 소득보전</li> <li>- 보육시설인프라 확충</li> <li>- 국공립어린이집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li> </ul> </li> <li>■ 함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5터다지기’</li> </ul> </li> </ul>
4유형 :초저출산지역	결혼 준비기 · 출산이후 양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경감</li> <li>- 만남기회제공</li> </ul> </li> <li>■ 임신·출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지원강화</li> <li>- 고위험산모 산전관리</li> </ul> </li> <li>■ 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 확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택수당</li> <li>- 이사특별수당</li> </ul> </li> <li>■ 일본 후쿠이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매쟁이 프로그램</li> <li>- 환아데이터케어 제공</li> </ul> </li> <li>■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손 프로젝트’</li> </ul> </li> <li>■ 과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나눔터’</li> </ul> </li> <li>■ 횡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아는 횡성에서 책임 진다(요람에서 학교까지)</li> </ul> </li> </ul>



#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6
제3절 연구의 체계	7
제2장 저출산 실태 및 정책 현황	9
제1절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11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1
2.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	13
3. 출생아 수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14
4.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	15
5. 혼인과 이혼의 추이	16
6. 자치단위별 출생아 수 추이	17
제2절 선행연구 검토	21
1.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1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25
3. 소결	29
제3절 저출산 정책의 현황	30
1. 저출산 정책의 의의	30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현황	33

3. 저출산 정책의 한계 .....	41
제4절 분석모형 도출 .....	43
<b>제3장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b>	<b>45</b>
제1절 분석모형 .....	47
1. 분석 목적 .....	47
2. 분석 대상 .....	48
3. 분석 방법 .....	48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 .....	51
1. 결혼 지원 .....	51
2. 임신·출산 지원 .....	52
3. 육아지원 .....	59
4. 다자녀 지원 .....	68
5. 종합 .....	74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	76
1.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결과 .....	76
2.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별 빈도 분석 .....	87
제4절 소결 .....	96
<b>제4장 지자체 저출산 환경 유형화 및 요인분석 .....</b>	<b>99</b>
제1절 분석모형 .....	101
1. 분석 목적 .....	101
2. 분석 대상 .....	102





3. 분석 방법 .....	102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화 .....	109
1. 지자체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현황 .....	109
2.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변화율 기준 유형화 .....	113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	121
1.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	121
2.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시책 분석 .....	125
제4절 소결 .....	130
<b>제5장 지자체 저출산 시책 실효성 제고방안 .....</b>	<b>131</b>
제1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33
제2절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	135
제3절 소결 .....	143
<b>【참고문헌】 .....</b>	<b>144</b>
<b>【부록】 .....</b>	<b>148</b>

# 표 차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표 2-1>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11
<표 2-2>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전국) ..... 13
<표 2-3> 출생아 수에 따른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전국) ..... 14
<표 2-4>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전국) ..... 15
<표 2-5> 혼인 및 이혼 추이(전국) ..... 17
<표 2-6>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 18
<표 2-7> 기초자치단위별 출생아 수 추이 ..... 20
<표 2-8>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 22
<표 2-9>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7
<표 2-10>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 관련) 내용 변천 ..... 31
<표 2-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 34
<표 2-12> 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5
<표 2-13>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5
<표 2-1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 36
<표 2-15> 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 37
<표 2-16> 저출산 분야 중앙부처 시행계획 소요예산 현황 비교(2016-2017년) ..... 38
<표 2-17> 저출산 분야 시도별 자체사업 소요예산 현황 비교(2016-2017년) ..... 39
<표 2-18>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 ..... 41
<표 3-1> 저출산 정책의 유형화 기준 ..... 50
<표 3-2> 지자체 결혼 지원 시책 현황 ..... 51
<표 3-3> 지자체 임신·출산 지원 시책 현황 ..... 52



<표 3-4> 지자체 육아 지원 시책 현황	59
<표 3-5> 지자체 다자녀 지원 시책 현황	68
<표 3-6>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 종합	74
<표 3-7> 결혼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76
<표 3-8> 임신·출산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77
<표 3-9> 육아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81
<표 3-10> 다자녀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85
<표 3-11>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별 빈도 분석	87
<표 3-12>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의 특성	97
<표 4-1> 지역 유형 구분기준 및 인구변화, 특성	104
<표 4-2> 출산율 결정 요인 측정 지표	108
<표 4-3> 합계출산율의 기간별 평균값	109
<표 4-4>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연도별 추이	111
<표 4-5>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기간별 평균값	112
<표 4-6> 유형별 해당 지자체	113
<표 4-7> 유형별 해당 지자체: 시도구분	115
<표 4-8> 유형별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평균	118
<표 4-9> 유형별 인구구조지표 변화 추이	119
<표 4-10>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121
<표 4-11>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122
<표 4-12>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123
<표 4-13>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124
<표 4-14>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종합	124
<표 4-15> 유형별 저출산 시책 분석	125

<표 5-1> 지자체 저출산 시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134

<표 5-2>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예시) 141

<표 A-1> 유형별 지자체 구분: 시도 및 시군구 구분 .. 148

<표 A-2>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 153

<표 A-3>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 153

<표 A-4>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 154

<표 A-5>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 154





## 그림 차례

<그림 1-1>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와 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분석 모형	7
<그림 2-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11
<그림 2-2>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12
<그림 2-3>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전국)	13
<그림 2-4> 출생아 수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전국)	14
<그림 2-5> 시기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변화(전국)	16
<그림 2-6> 혼인 및 이혼 추이(전국)	17
<그림 2-7>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비교(2015년, 2016년)	19
<그림 2-8>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20
<그림 2-9> 출산의사결정 모형	25
<그림 2-10> 본 연구의 분석 모형	44
<그림 3-1> 본 장의 분석 목적	47
<그림 3-2>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빈도) 종합	75
<그림 3-3> 저출산 시책 예산 배분 현황	75
<그림 3-4> 정책 대상 기준 유형별 빈도	90
<그림 3-5> 정책 수단 기준 유형별 빈도	92
<그림 3-6> 정책 목표 기준 유형별 빈도	94
<그림 4-1> 본 장의 분석 목적	101
<그림 4-2> 지역 유형 구분기준	105
<그림 4-3> 합계출산율 평균값의 분포	110

<그림 4-4> 합계출산율변화율 평균값의 분포 ..... 112  
<그림 4-5> 유형별 해당 지자체 ..... 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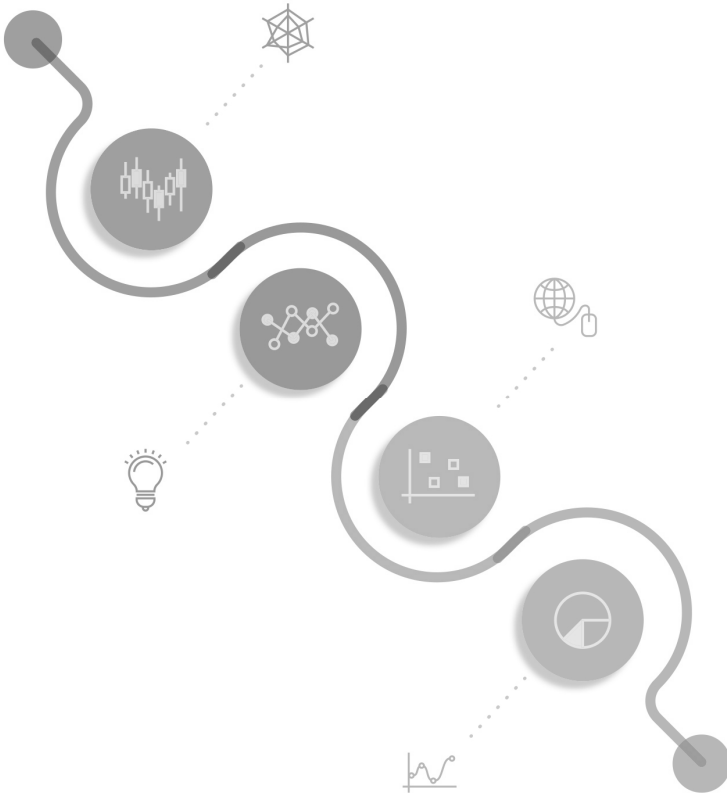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체계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 저출산은 고령화와 더불어 인구구조의 양적 및 질적 특성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구의 양적 규모를 감축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임
  - 고령화가 인구의 질적 특성에 변화를 초래한다면, 저출산은 인구의 양적 특성에 변화를 초래함
  -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구규모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산정책에 변화를 주는 것이 일반적임
  -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출산억제 정책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출산장려 또는 촉진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임
-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중앙차원에서는 2004년부터 시행되었고, 지방차원에서는 지역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증가정책의 하나로서 출산장려 정책을 199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였음
  - 국가차원에서는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3차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왔음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다수의 저출산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전국 243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1만여 개에 달하는 각종 저출산 관련 시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뚜렷한 징후는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부의 포괄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 가임기 여성규모 대비 출생규모로 나타나는 합계출산율이 2016년에는 1.17명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치인 1.27명보다 낮은 것이고 향후의 전망 역시 긍정적이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관련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자체 수행 저출산 대책에 관한 유형화를 시도하고 이에 근거하여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수립된 기초자료를 근거로 저출산 정책 수립과 지자체의 특성별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가. 분석 대상

##### ○ 대상범위

- 연구의 대상범위는 저출산 정책을 현장에서 직접 제공하는 기초자치단체로 국한하여 설정함
- 저출산 정책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 현안정책이나, 행정안전부의 저출산 정책 연계성 및 현장 제공성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함

##### ○ 시간범위

- 연구의 시간범위는 원칙적으로는 2017년 현재를 기점으로 설정
- 이는 2017년 현재 시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각종 저출산 정책을 대상으로 원인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유형별 정책모형을 모색하기 때문임

#### 나. 분석 내용

##### ○ 지자체 저출산 정책의 현황 파악 및 유형화 분석

- 해당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시책 현황 파악 및 분석
- 저출산 시책 유형화를 통한 정책설계 내용 분석

##### ○ 지자체 저출산 정책 환경별 유형화 및 실효성 있는 정책모형 제시

- 저출산의 현황 및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요인들을 기준으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유형별로 구분
- 해당 지자체별 경제적·사회문화적 환경 등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파악
-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모형 재설계

## 2. 연구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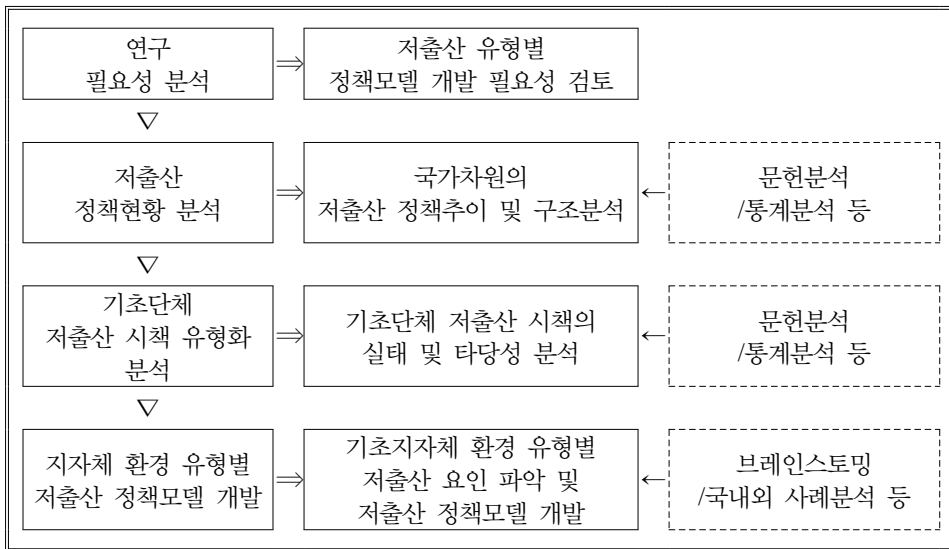
-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양적·질적 연구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음
  - 저출산 시책 유형화 분석에서는 현황 파악과 분석을 위해 문헌 분석과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
  - 저출산 환경 유형화 분석에서는 통계분석 방법을 적용
  - 저출산 환경 유형별 정책모델 설계 부분에서는 브레인스토밍과 국내외 사례분석 등의 방법을 적용



### 제3절 연구의 체계

-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와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정책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의 논리적 구조는 다음과 같음
  - 우선 기초 지자체의 저출산 시책의 현황 파악과 유형화를 통해 전반적인 특성 및 문제점을 파악함
  - 다음으로서는 저출산 시책이 시행되는 지자체의 특성을 저출산 요인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그림 1-1>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와 정책모델 개발을 위한 분석 모형





# 제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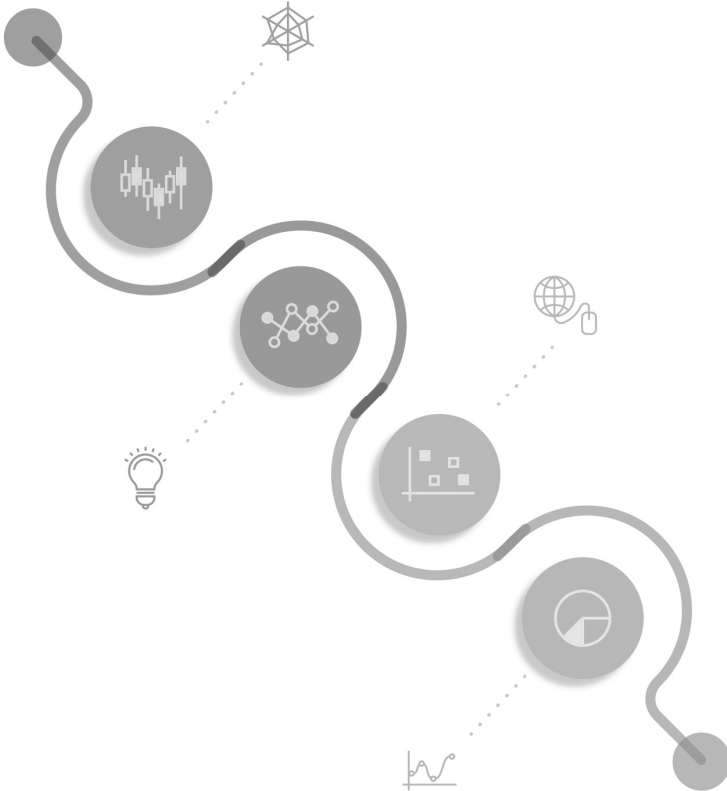
## 저출산 실태 및 정책 현황

제1절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저출산 정책의 현황

제4절 분석모형 도출





## 제 2 장

## 저출산 실태 및 정책 현황

## 제1절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

##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 전국 출생아 수는 2016년 현재 40만 명 선으로 급감하였음
  - 2008년 당시 46만 명을 상회하던 출생아 수는 8년 후인 2016년에는 4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하였음
  -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8년 1.192에서 2012년에 1.297로 증가한 이후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근에도 여전히 초저출산 사회의 기준인 1.3 명을 넘지 못하고 있음('16년 1.172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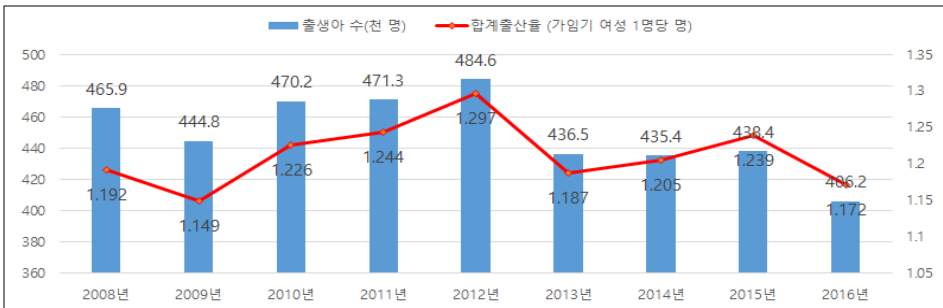
&lt;표 2-1&gt; 우리나라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단위: 천 명,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출생아 수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3
합계출산율	1.192	1.149	1.226	1.244	1.297	1.187	1.205	1.239	1.172

자료: 통계청(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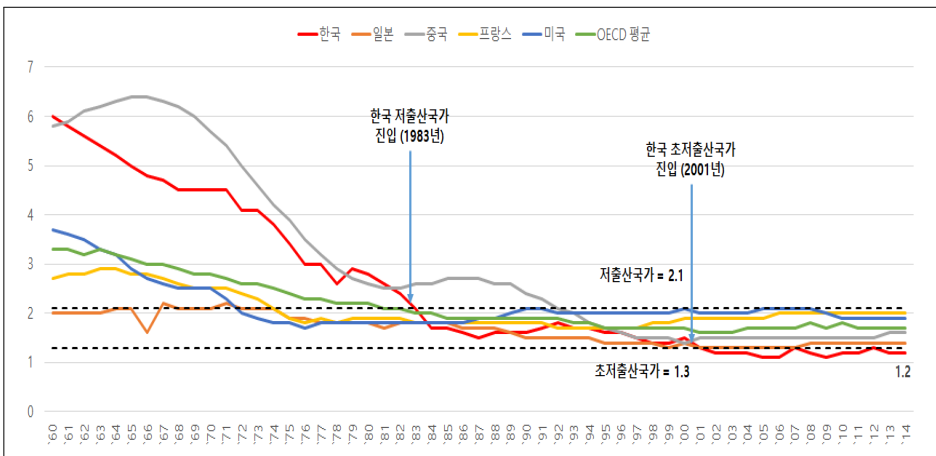
&lt;그림 2-1&gt;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전국)



자료: 통계청(2017)

-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와 비교할 때에도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
  - 저출산국가를 분류하는 기준은 합계출산율이 2.1 이하일 때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1983년 합계출산율이 2.1로 나타나 저출산국에 진입하였음
  - 초저출산국가의 경우 합계출산율 1.3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1년에 해당 수치에 도달하였음
  - 2014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명으로, OECD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그림 2-2> OECD 주요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자료: OECD Fertility Rates Data(2017)

## 2.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

- 한국인의 평균 초혼연령은 매년 증가하여 만혼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평균 초혼연령은 2008년 당시 남편과 아내가 각각 31.38세, 28.32세로 나타났지만 10년 후인 2016년에는 둘 다 증가하여 남편이 32.79세, 아내가 30.11세로 나타남
  - 2008년에는 초혼 남편의 평균 연령이 아내들보다 3.06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차이는 2009~2010년 약 2.9세, 2011~2012년 약 2.7세, 2013~2016년에는 약 2.6세 정도로 좁혀지고 있음
  - 이러한 내용은 성별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초혼의 연령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여성의 만혼 경향이 짙어지고 있음을 시사함

<표 2-2>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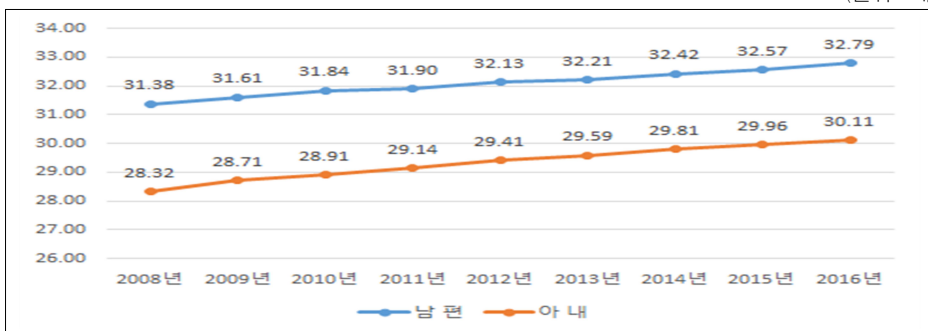
(단위: 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남편	31.38	31.61	31.84	31.90	32.13	32.21	32.42	32.57	32.79
아내	28.32	28.71	28.91	29.14	29.41	29.59	29.81	29.96	30.11

자료 : 통계청(2017)

<그림 2-3> 성별에 따른 평균 초혼연령 추이(전국)

(단위: 세)



자료: 통계청(2017)

### 3. 출생아 수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

- 만혼 경향과 맞물려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도 높아지고 있음
  - 2008년에는 첫 아이를 출산하는 평균 연령이 29.6세였다면, 2010년에는 30세를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31세를 돌파하였음
  - 2008년을 기준으로 모(母)의 출산 시 평균 연령은 둘째 아(31.69), 셋째 아(33.8), 넷째 아 이상(35.66)이었다면, 2016년에는 둘째 아(33.19), 셋째 아(34.7), 넷째 아 이상(36.13)으로 예측되고 있음

<표 2-3> 출생아 수에 따른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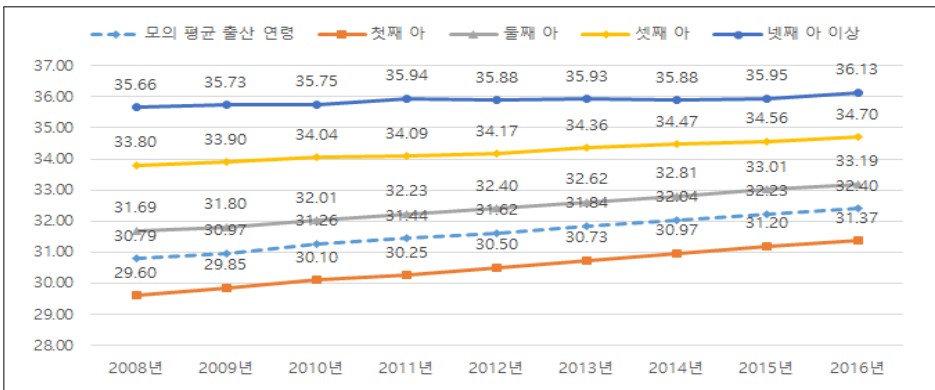
(단위: 세)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전체 평균	30.79	30.97	31.26	31.44	31.62	31.84	32.04	32.23	32.40
첫째 아	29.60	29.85	30.10	30.25	30.50	30.73	30.97	31.20	31.37
둘째 아	31.69	31.80	32.01	32.23	32.40	32.62	32.81	33.01	33.19
셋째 아	33.80	33.90	34.04	34.09	34.17	34.36	34.47	34.56	34.70
넷째 아 이상	35.66	35.73	35.75	35.94	35.88	35.93	35.88	35.95	36.13

자료: 통계청(2016; 2017)

<그림 2-4> 출생아 수별 모(母)의 평균 출산 연령 추이(전국)

(단위: 세)



자료: 통계청(2017)



#### 4.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

- 전체 출생아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 고령산모(35세 이상)에 의한 출생아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 출생아 수는 2012년 약 4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까지 43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에는 40만 명 선으로 급감하였음
  - 전(全) 시기 30-34세의 여성들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출생아 수 규모는 2012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 20만 명 선이 붕괴되었음
  - 25-29세 산모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의 규모는 2015년까지는 두 번째로 많았으나, 2016년에는 35-39세 연령대에 의해 역전이 발생함
  - 고령산모에 의한 출생아 수는 '08년에는 6만 6천 명이었으나, 2016년에는 10만 7천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그 비중은 26.4%에 이름
  - 20-24세 산모의 출생아 수는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44세의 여성들로부터 출생한 아이들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됨

<표 2-4>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추이(전국)

(단위: 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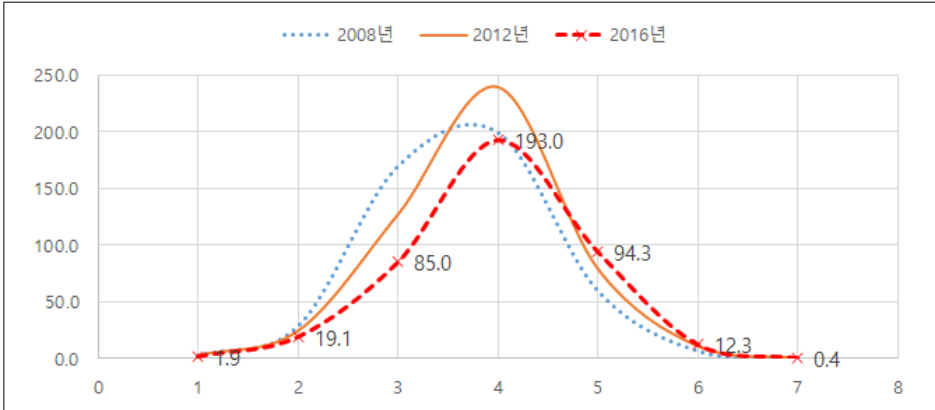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465.1	444.1	469.4	471.0	484.5	436.2	435.1	438.2	406.0
20세 미만	2.8	2.8	2.9	3.0	2.9	2.8	2.5	2.2	1.9
20 - 24세	28.2	24.9	24.5	24.6	24.6	22.1	21.2	20.5	19.1
25 - 29세	168.9	155.9	147.2	137.0	127.2	102.8	96.2	94.6	85.0
30 - 34세	198.7	192.1	214.6	221.4	239.2	220.3	221.1	216.3	193.0
35 - 39세	59.6	60.7	70.8	74.2	79.0	77.2	82.2	92.1	94.3
40 - 44세	6.5	7.3	8.8	10.1	11.1	10.7	11.5	12.1	12.3
45세 이상	0.4	0.4	0.5	0.5	0.4	0.3	0.3	0.3	0.4
고령산모(≥35)	66.5	68.4	80.1	84.9	90.5	88.2	94.1	104.6	107.0
고령산모(%)	14.3	15.4	17.1	18.0	18.7	20.2	21.6	23.9	26.4

주: 모(母) 연령미상은 제외한 수치임

자료: 통계청(2017), 인구동향조사

<그림 2-5> 시기별 모(母)의 연령별 출생아 수 변화(전국)

(단위: 천 명)



주: 1은 20세 미만, 7은 45세 이상임(연령미상 제외)

자료: 통계청(2017), 인구동향조사

## 5. 혼인과 이혼의 추이

- 혼인과 이혼 모두 감소 추세이나, 혼인의 감소가 더욱 가파름
  - 2013년까지는 대체적으로 32만 쌍 이상이 혼인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5년에 들어서는 30만 건, 2016년에는 28만 건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09년에는 약 12만 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폭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점차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16년에는 10만 건으로 감소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
  - 앞서 살펴봤던 합계출산율의 점진적인 하락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으로 혼인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상당히 달라졌다는 점과, 나아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꺼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

&lt;표 2-5&gt; 혼인 및 이혼 추이(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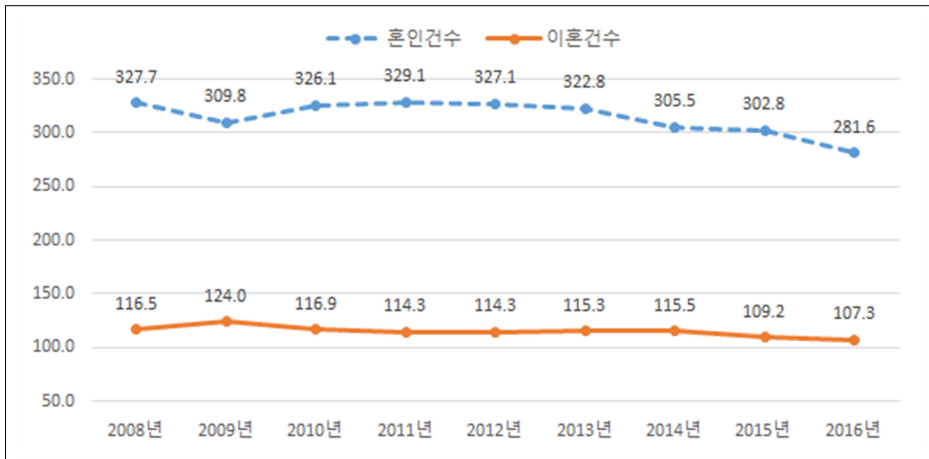
(단위: 천 건)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혼인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이혼	116.5	124.0	116.9	114.3	114.3	115.3	115.5	109.2	107.3

자료: 통계청(2017), 인구동향조사

&lt;그림 2-6&gt; 혼인 및 이혼 추이(전국)

(단위: 천 건)



자료 : 통계청(2016; 2017)

## 6. 자치단위별 출생아 수 추이

### 가.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 최근 전체 출생아 수는 과거보다 훨씬 적은 4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함
  - 출생아 수가 가장 많았던 2012년에 비해 2016년에는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2015년에 들어서면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등의 광역시 단위 출생아 수가 적게는 약 천 명에서 많게는 7천 5백 명까지 감소하였음

- 이러한 출생아 수 감소 경향은 도 단위 전역에서 유사하게 관측됨
- 다만 세종시의 경우 '15년에 비해 '16년 출생아 수가 약 6백 명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은 21.8%p에 이르는데 이는 부처 이전 등의 요인으로 인한 젊은 인구의 유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표 2-6>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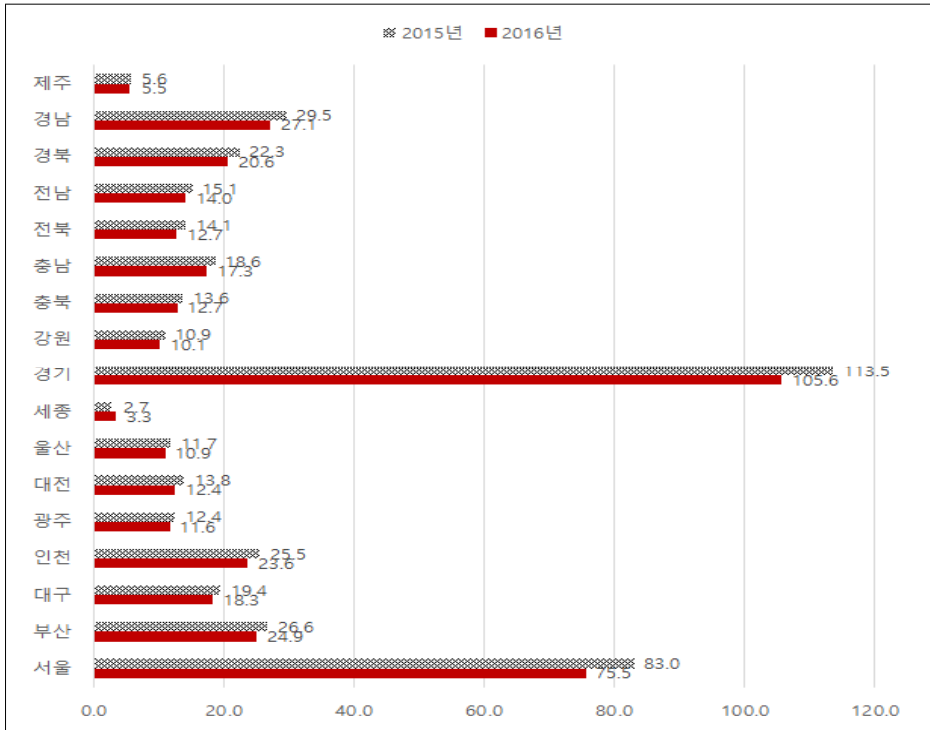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	2016(B)		
									증감 (B-A)	증감 (%)	
전체	465.9	444.8	470.2	471.3	484.6	436.5	435.4	438.4	406.2	-32.2	-7.3
서울	94.7	89.6	93.3	91.5	93.9	84.1	83.7	83.0	75.5	-7.5	-9.0
부산	26.7	25.1	27.4	27.8	28.7	25.8	26.2	26.6	24.9	-1.7	-6.5
대구	20.6	19.4	20.6	20.8	21.5	19.3	19.4	19.4	18.3	-1.1	-5.9
인천	25.4	24.4	25.8	26.1	27.8	25.6	25.8	25.5	23.6	-1.9	-7.4
광주	13.9	13.1	14.0	13.9	14.4	12.7	12.7	12.4	11.6	-0.9	-6.9
대전	14.9	13.9	14.3	14.8	15.3	14.1	14.0	13.8	12.4	-1.3	-9.7
울산	11.4	11.0	11.4	11.5	12.2	11.3	11.6	11.7	10.9	-0.8	-7.0
세종	-	-	-	-	1.1	1.1	1.3	2.7	3.3	0.6	21.8
경기	119.4	113.7	121.8	122.0	124.7	112.1	112.2	113.5	105.6	-7.9	-6.9
강원	12.4	12.1	12.5	12.4	12.4	11.0	10.7	10.9	10.1	-0.9	-8.0
충북	14.1	13.9	14.7	14.8	15.1	13.7	13.4	13.6	12.7	-0.8	-6.1
충남	19.7	19.3	20.2	20.4	20.4	18.6	18.2	18.6	17.3	-1.3	-7.0
전북	15.9	15.2	16.1	16.2	16.2	14.6	14.2	14.1	12.7	-1.4	-9.9
전남	16.4	16.0	16.7	16.6	17.0	15.4	14.8	15.1	14.0	-1.1	-7.2
경북	23.5	22.4	23.7	24.3	24.6	22.2	22.1	22.3	20.6	-1.7	-7.6
경남	31.5	30.3	32.2	32.5	33.2	29.5	29.8	29.5	27.1	-2.4	-8.1
제주	5.6	5.4	5.7	5.6	6.0	5.3	5.5	5.6	5.5	-0.1	-1.9

주: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7월부터 연기군 전체, 공주시, 청원군 일부를 통합하여 출범  
 자료: 통계청(2017)

〈그림 2-7〉 광역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비교(2015년, 2016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17)

#### 나.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출생아 수는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임

- 2012년을 분수령으로 기초단위 전체 출생아 수는 점차 감소하여 2016년 기준 39만 7천 명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시 지역의 출생아 수 또한 해당 시기 이후로 감소하여 21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16년에는 19만 7천 명으로 줄어들음
- 군 지역의 출생아 수는 2010년 3만 9천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이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어 2016년에는 2만 9천 명 정도로 나타남

- 구 지역의 경우 출생아 규모는 '12년 20만 7천 명으로 정점에 도달하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16년 17만 명에 그침

<표 2-7> 기초자치단위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천 명,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A)	2016(B)		
									증감 (B-A)	증감 (%)	
전체	460.4	439.4	464.6	465.6	477.4	430.0	428.5	430.1	397.5	-32.6	-7.6
시	220.1	211.0	224.6	226.7	233.4	210.7	211.0	213.5	197.6	-15.9	-7.5
군	37.9	37.0	39.1	38.3	36.6	32.2	30.5	30.4	29.1	-1.3	-4.2
구	202.4	191.4	200.9	200.6	207.4	187.1	187.0	186.2	170.8	-15.4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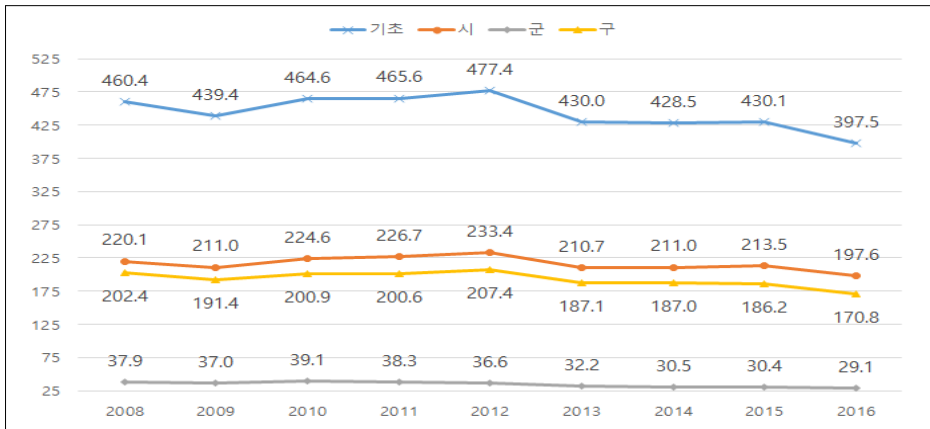
주 1: 광역단체인 제주, 세종은 제외되었으며, 매 년 수치는 행정구역 변동을 감안한 수치임

주 2: 창원시(+마산시·진해시, '10년 합병), 당진시(←당진군, '12년 승격), 여주시(←여주군, '13년 승격), 청주시(+청원군, '14년 합병)

자료: 통계청(2017)

<그림 2-8> 기초자치단체별 출생아 수 추이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2017)

##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1.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저출산의 원인은 학력, 개인의 건강, 소득 등 미시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 가족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 거시적 요인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음
  - 이소영 외(2016)에 의하면, 전후 베이비붐 현상과 함께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산업화와 현대화, 도시화가 급속하게 전개되었고 이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시스템을 변화시켰음
  - 또한, 경제발전으로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향상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보건의료 수준 향상 등의 영향으로 영아사망률이 감소함에 따라 부부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침
  - 높은 교육열로 인해 여성이 고등 교육에 참가할 기회가 증가했으며, 양성평등 의식도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음
  -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개인의 가치관과 선호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점차적으로 결혼을 부담스러운 사회제도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경제적 및 사회적 조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자녀 출산과 양육은 기회비용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음
  - 즉, 사회구조의 변화는 거시적으로 국가의 출산에,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출산의지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연령, 학력, 소득 수준, 사교육비 지출 등 비용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주요 요인들로 보고 있음
  - 연령이 높을수록, 주당 평균 근로시간과 같은 노동의 부담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같은 비용부담이 높을수록 여성의 출산의지나 출산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냄

- 반면, 여성의 학력이 높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에 대한 가치나 가정에서의 남편의 참여도, 결혼만족도와 같은 출산에 대한 개인의 생활이나 인식에 관한 요인이 긍정적일수록 여성의 출산의지나 출산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냄

○ 우리나라 저출산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육아휴직급여, 결혼에 관한 가치관, 일과 가정 양립 부담과 같은 요인들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는 사회 현상은 출산율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증가하였음
- 결혼과 관련한 요인에서는 조혼인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증가했으며, 조이혼율과 남성·여성의 초혼연령은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 그러나 정책적 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음

<표 2-8> 우리나라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구분	연구자	저출산 영향 요인	연구 결과
미시적 요인	서정연·김한곤 (2015)	연령, 소득, 자녀가치, 부모됨가치, 비용부담, 노동부담, 정책지지도, 수혜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 비용부담, 노동부담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부모됨가치와 정책지지도는 정의 영향을 미침</li> <li>- 한 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과 비용부담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자녀가치, 수혜가능성은 정의 영향을 미침</li> <li>- 두 자녀 기혼여성의 경우 연령은 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소득 수준과 자녀가치는 정의 영향을 미침</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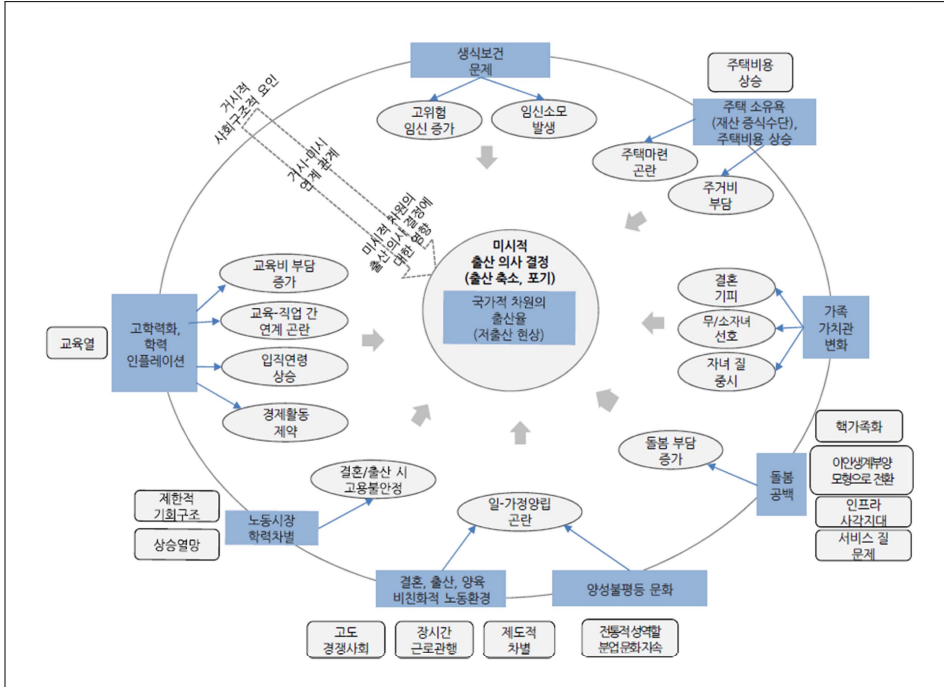


구분	연구자	저출산 영향 요인	연구 결과
	장진희·박성준 (2015)	연령, 교육년수, 교육년수×월평균소득, 근무상 지위, 배우자의 월평균소득, 직장 내 일·가족양립지원제도 마련, 주당 평균 근로시간,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가구 월평균 생활비	- 연령이 낮을수록, 주당 평균 근로 시간이 낮을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높았음 - 교육년수가 많을수록, 직장 내 일· 가족양립지원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을수록, 여성의 지위가 상용직일 수록 여성의 출산율이 높았음 - 교육년수×월평균 소득 배우자의 월평균 소득, 가구 월평균 소득 대 비 가구월평균 생활비는 여성의 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미침
	정은희·최유석 (2013)	연령, 교육수준, 본인의 취업여부, 남편취업여부, 가구상반기소득, 건강상태, 자녀교육 의사결정, 결혼만족도, 가사분담만족도, 사교육비 지출	- 연령이 낮고 전업주부인 여성일수 록 출산율이 높았음 -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 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여성 의 출산율이 높았음 - 사교육비 지출은 여성의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거시적 요인	최은희·조택희 (2016)	지자체별 보육시설수, 육아휴직급여, 여성고용률, 여성총근로시간	- 육아휴직급여는 합계출산율에 정 의 영향을 미침 - 보육시설수와 여성총근로시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침) - 여성고용률의 증가는 합계출산율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효진·곽경희 ·조주연 (2010)	- 사회·경제적 요인: 자녀 에 대한 기회비용부담, 양육비·교육비 부담, 직장·가사 이중부담, 성역할 인식 - 정책적 요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정책, 임신과 출산지원정책, 일과 가 정 양립지원정책, 세제 및 주택마련 지원정책	- 사회·경제적 요인 중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성역할 인식이 높 을수록 여성의 출산의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침 - 일과 가정의 이중부담은 여성의 출산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정책적 요인은 여성의 출산의지에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않음

구분	연구자	저출산 영향 요인	연구 결과
	강경숙·변미희 ·정은미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 관련 요인: 초혼 연령, 조혼인율, 조이혼율</li> <li>- 자녀 관련 요인: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교육비 지출율</li> <li>- 여성 관련 요인: 여학생의 고등학교 진학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li> <li>- 가족정책 관련 요인: 가족계획실천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에 관한 변인의 경우 조혼인율이 낮을수록, 조이혼율과 남성·여성의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음</li> <li>- 자녀와 관련한 요인은 유의하지 않거나 상관관계가 낮음</li> <li>- 여성과 관련한 요인은 여자 고등학교 취학률이 높을수록,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음</li> <li>- 가족계획정책과 관련요인은 가족계획실천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았음</li> </ul>

1) 최은희·조택희(2016)는 이에 대해서 보육시설의 유형을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증가한 보육시설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은 1016개소, 직장어린이집 429개소가 증가한 반면, 민간보육시설은 2053개소, 가정보육시설은 11972개소가 증가하였음. 국공립시설을 전체 보육시설의 5.69%까지 확대하였으나 민간보육시설 증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임. 민간보육시설은 국공립보육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보육비 부담이 높고 보육환경이 더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민간보육시설의 증가가 합계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임. 따라서 합계출산율 증가를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림 2-9> 출산의사결정 모형



자료: 이삼식 외(2016), p.287. ‘거시적 사회구조와 미시적 결혼출산 행태 간의 인과관계도’에서 인용

##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효과에 관한 연구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저출산 정책의 시행이 정책 수혜율이나 국민의 의식 변화, 정책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본 연구와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된 연구로 구분됨
- 출산 정책의 시행이 정책 수혜율이나 국민의 의식 변화, 정책 수용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저출산 정책이 기혼여성의 자녀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 기혼여성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 문화 지원 정책, 모자 건강관리 지원 정책이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침(유계숙, 2009; 정성호, 2012). 세부적으로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을,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유계숙, 2009)
  - 또한, 이미옥·명성준(2015)의 연구에 의하면,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보육 비용지원 정책의 신뢰도가 높았으며,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 보육 비용지원 정책과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
- 저출산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음
- 지자체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로 차별적인 정책집행이 이루어지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정책효과는 연구마다 상이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였음
  -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는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보다 컸으며, 둘째 아이가 셋째 아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수, 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김민곤·천지은, 2016)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이석환, 2014)가 존재함
  - 다만, 허만형·이정철(2011)의 연구에 따르면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가 정책 도입 후 3년간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나타났음

&lt;표 2-9&gt;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	저출산 정책	연구 결과
김민곤·천지은 (2016)	출산장려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정책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혼인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음</li> <li>- 자치구별 소득 수준, 고령인구비율, 이혼율, 조혼인율, 보육시설수준, 의료시설수준 등의 변수들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li> </ul>
이미옥·명성준 (2015)	임신·출산지원 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신생아 의료지원 정책(중앙정부), 보육 비용지원 정책(중앙정부, 지방정부),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경우,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보육 비용지원 정책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li> <li>- 지방정부의 저출산 정책의 경우, 보육 비용지원 정책과 출산장려금, 영유아 양육수당이 높은 신뢰도를 나타냄</li> <li>- 지방정부의 보육 비용지원 정책만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li> </ul>
이석환 (2014)	출산장려금 정책(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와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었음</li> <li>-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에만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둘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li> <li>-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은 둘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셋째아이부터 지원하는 경우보다 출산율 제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남</li> <li>- 기초자치단체의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은 출산력을 제고하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li> <li>-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출산력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은 혼인율, 가임여성 비율, 교육수준, 소득 수준으로 나타남</li> </ul>

연구자	저출산 정책	연구 결과
최상준·이명석 (2013)	출산·양육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역자치단체의 출산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출산지원 정책 중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정책은 보육지원 정책으로 나타남</li> <li>- 일-가정 양립과 관련한 변수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수로 나타남</li> </ul>
정성호 (2012)	경제적 지원 정책,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육아지원시설 확충 정책, 출산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 문화 지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존 자녀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과 양성평등 문화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계획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li> <li>- 무자녀 기혼여성들의 경우, 저출산 정책이 자녀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li> <li>- 기혼여성들의 경우, 경제적 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양성평등 문화 지원 정책이 출산계획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남</li> </ul>
허만형·이정철 (2011)	출산장려금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금 정책효과는 도입 후 3년 간은 정책효과가 나타나지 않다가 4년이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수준이 점증하였음</li> <li>- 기초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의 금액 수준은 다양했지만 그 액수 자체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할 수는 없었음</li> <li>-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은 분할급 방식과 일시급 방식이 혼용방식에 비해 정책효과가 더 높게 나타남</li> </ul>
유계숙 (2009)	보육비·교육비 지원정책,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 보육·교육시설 확충 및 서비스 확대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모자 건강관리 지원정책, 불임부부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 건강관리 지원 및 자녀에 대한 세제혜택은 첫 자녀 출산 가능성을 높여줌</li> <li>- 모자 건강관리 지원과 보육비·교육비 지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나타남</li> <li>- 저출산 대응정책의 중복수혜는 둘째 자녀나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가능성을 높이며, 첫 자녀의 출산은 10.5배 높이는 효과를 나타냄</li> </ul>

### 3. 소결

- 저출산의 원인은 학력, 개인의 건강, 소득 등 미시적 요인과 노동시장 구조, 가족에 관한 가치관 변화와 같은 문화적 요인 등 거시적 요인이 맞물려 작용하고 있음
  - 정책적 요인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중앙정부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임신·출산지원 정책, 보육지원 정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 출산·양육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음
  - 중앙정부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정책 중에서는 보육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큰 효과를 보였음
  -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에 대한 결과는 연구마다 상이했음
- 그러나 2004년 이후부터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추진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
  - 따라서 정책 효과 평가는 이러한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제3절 저출산 정책의 현황

### 1. 저출산 정책의 의의

#### 가. 저출산 정책의 개념

- 저출산 정책, 즉 출산(장려)정책은 출산을 저하를 억제하고 나아가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및 양육에 도움이 되는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의미함(이미옥 외, 2015)
  -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여 부모들의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출산을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임

#### 나. 저출산 정책의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해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국가법령정보센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목적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
  - 저출산 대책은 기본법 제7조~제10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해 기본계획 수립·추진하며,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 복지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지자체 시행계획을 종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



#### 다. 역대 출산 정책 개요

##### ○ 출산억제정책기(1961~1995)

- 1961년 정부 인구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한 때부터 1996년 출산억제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기 전까지의 기간
- 출산억제정책 도입 :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가족계획상담소 설치 및 운영, 가족계획 홍보계몽과 피임보급 등)
-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제·개정, 2자녀까지 소득세면제 등 지원시책 실시

##### ○ 인구자질향상정책기(1996~2003)

- 정부 인구의 자질과 복지 향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구정책 공식 발표한 1996년부터 저출산 대응을 위해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발족(2004.2)되기 직전까지의 기간
- 인구억제정책 폐지 및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한 인구정책으로 전환

##### ○ 출산장려정책기(2004~현재)

-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출산율 회복을 위한 국가 로드맵을 설정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
- 2005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의 법적 근거로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족
-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제3차에 걸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 계획 마련 및 시행

<표 2-10> 우리나라 인구정책(출산 관련) 내용 변천

구 분	정 책
1960년대	△ 출산억제정책 도입 ○ 경제개발5개년계획에 정부가족계획사업 채택('61) ○ 피임기구 수입/국내생산금지법규폐지('61) ○ 가족계획사업 개시('62) - 보건소에 가족계획사업 상담실 설치 및 가족계획요원 배치('62) - 정관수술, 콘돔, 젤리 포함('62) - 가족계획요원 및 정관수술 의사 훈련실시('62), 보건지소에 가족계획요원 배치('64) - 자궁내장치기술 의사 훈련실시 및 자궁내장치기술 도입('64) - 奥·僻地가족계획사업 이동기술반운영('64), 가족계획어머니회 발족('68)

구 분	정 책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법 제정 및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학적 이유의 인공임신중절 합법화를 위한 모자보건법 공포('73)</li> <li>- 여성의 유산상속을 위한 가족법개정('77)</li> </ul> </li> <li>○ 도시가족계획사업 실시('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가족계획사업, 도시저소득층 가족계획사업, 산업체 가족계획사업, 인구 교육사업</li> </ul> </li> <li>○ 피임방법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경조절술 도입('74), 여성복강경수술을 위한 의사훈련실시('75), 여성불임 수술도입('76)</li> </ul> </li> <li>○ 조직 등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보건소 남성가족계획홍보요원 배치('76), 새마을부인회에 가족계획어머니 회 통합('77)</li> <li>- 보건요원의 정규직화('81)</li> </ul> </li> <li>○ 지원시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자녀까지 소득세 면제, 근로자 가족계획경비에 대한 기업세 면제('77)</li> <li>- 2자녀 이하 불임수술 수용자 공공주택분양 우선권 부여, 피임기구 수입세 감면('78)</li> <li>- 공공병원에서 2자녀 출산 후 불임수술 수용자에 대한 출산비용 감면('80)</li> </ul> </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계획사업 지원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임수술, 자궁내장치시술 의료보험적용('82)</li> <li>- 두 자녀 이하의 불임수술 수용자 주택자금/저소득층 생계비 우선 지원('82)</li> <li>- 저소득층 불임수용자 생계비 지원('82)</li> <li>- 두 자녀 이하 불임수용자의 5세 이하 자녀에 대한 1차 무료진료 실시('82)</li> <li>- 자녀교육비 감면대상, 공무원 가족수당/자녀교육비 지급 2자녀로 제한('82)</li> <li>- 의료보험대상 친정부모, 장인·장모 확대('85)</li> </ul> </li> <li>○ 카파-T 보급('83)</li> <li>○ 조직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지역 가족계획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요원 통합('85)</li> <li>- 20대여성 피임보급전략을 불임에서 일시적 피임방법으로 변경('86)</li> <li>- 성감별 행위 금지 및 성감별 의사의 자격 박탈을 위한 의료법 개정('87)</li> <li>- 정부무료피임 보급축소, 의료보험·상업망을 통한 피임수용 확대사업 실시('89)</li> </ul> </li> </ul>
199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감별 의사 처벌강화(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 벌금)를 위한 의료법 개정('94)</li> <li>○ 보건복지부산하 인구정책발전심의위원회 설치('94)</li> <li>△ 인구억제정책 폐지 및 ‘인구자질 및 복지향상’을 강조한 인구정책으로 전환('96)</li> </ul>
200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li> <li>○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05.9 시행)</li> <li>○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설치('05)</li> </ul>

구분	정책
	※ 전신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2004년 초부터 운영 ○ 국무조정실 중심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저출산종합대책 마련('05) ○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수립('06) -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2010년대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1~2015)수립('10)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5)수립('15) - 청년 일자리 주거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자료: 이삼식 외(2005: 72)를 재구성함

## 2.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현황

### 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 2005년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해 9월에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설치되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작성됨.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5년 12월 제3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진행 중임<sup>2)</sup>

2)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2-1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연혁

일시	연혁
2005년 5월	- 노무현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2005년 9월	-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
2006년 8월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2008년 4월	- 이명박 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관 위원회로 조정하여 새 위원회 출범
2010년 9월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2012년 12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시키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본」 발표
2015년 12월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자료: 조흥식(2016: 1-2)

#### 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주요 내용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년) 혹은 ‘새로마지플랜 2010’은 4대 분야에 걸쳐 237개의 과제 추진(<표 2-12> 참조)
- 추진분야 및 과제 규모는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96개),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66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71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4개) 부문 등으로 구성됨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년) 또는 ‘새로마지플랜 2015’는 3대 분야에 걸쳐 231개의 과제 추진 (<표 2-13> 참조)
- 저출산 분야는 일·가정양립 일상화, 결혼 및 출산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으로 대별되며, 95개 과제로 구성됨. 고령사회 분야(78개)는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등으로 세분화되며, 성장동력 분야(58개)는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됨

&lt;표 2-12&gt; 1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야	중점 과제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없는 환경 조성 (총 96개)	영유아 보육·교육비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확충, 양질의 육아 인프라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총 66개)	공적연금 개혁 추진, 퇴직·개인연금 활성화 등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 구축, 요양인프라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총 71개)	여성,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생학습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육성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총 4개)	정부, 기업, 노동 등 사회주체들과 정책 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20.

&lt;표 2-13&gt; 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야	중점 과제	
저출산 분야 (총 95개)	일·가정양립 일상화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등
	결혼, 출산부담 경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난임부부 지원확대,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등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드림스타트 활성화,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등
고령사회 분야 (총 78개)	베이비붐 세대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	임금피크제 활성화, 퇴직연금제도 조기정착, 노후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노인일자리 확대, 농지연금 도입, 노인질병 특성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	고령자용 임대주택 지속 공급, 노인돌봄서비스 확대 등
성장동력 분야 (총 58개)	잠재인력 활용기반구축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외국적 동포 및 외국인력 활용, 직업능력 개발체계 확립 등
	인구구조 변동에 대응한 경제사회제도 개선	교원양성 및 수급계획 재수립,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재정건전성 관리시스템 개선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	고령친화제품 사용성 평가시스템 개발,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단 운영 등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20.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목표 및 주요 내용

- 3차 기본계획(혹은 ‘브릿지 플랜 2020’)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 시도임(대한민국 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p. 37)
- 저출산 대응을 위해 종전 기혼가구 보육 부담 경감에서 일자리, 주거 등 만혼·비혼 대책으로 전환하고, 제도 비용지원 위주에서 실천, 사회인식 변화 중심으로 접근(<표 2-14> 참조)
- 고령사회 대응도 소득·건강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수준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고령사회 전환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산업 등 구조 개편에 주력(<표 2-15> 참조)

<표 2-14>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전	⇒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	
△		
목표	⇒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 합계출산율: (14) 1.21명→(20) 1.5명	⇒ 생산적이고 활기찬 고령사회 노인빈곤율: (14) 49.6%→(20) 39%
△		
추진전략	⇒ 청년 일자리·주거대책 강화 · 청년고용 활성화 ·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 노후 소득보장 강화 · 1인 1국민연금을 위한 사각지대해소 · 주택연금 등 활성화로 노후보장수준 제고
	⇒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현 ·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적 지원확대 · 포용적 가족형태 인식확산	⇒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 간병·치매·호스피스 등 의료·돌봄 강화 · 고령자 교통·생활안전 환경조성
	⇒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 맞춤형 보육·돌봄 확대 · 자녀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개혁	⇒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확대 · 여성·고령친화 고용시스템 전환 · 사회통합적 외국인력 활용
	⇒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 양성이 평등한 일·가정양립 · 중소기업·비정규직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 고령친화경제로의 도약 · 분야별 인구 다운사이징 대비 · 고령친화산업의 발전 생태계 조성
△		
실행기반	⇒ · 민간·지역·정부 협력으로 전사회적 대응체계 강화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문화개선 대대적 확산 ·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 인프라 확립	

&lt;표 2-15&gt; 3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분야		중점 과제
저출산 분야 (총 89개)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고용디딤돌 확대, 정규직 전환,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확대, 임대주택 공급 증대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출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난임치료 보험적용, 아동학대 안전망 구축, 예방접종 및 정신건강 지원 등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맞춤형 보육 정착, 공공보육 확충, 다양한 돌봄서비스 제공, 진로교육 강화, 대입전형 개선 유도 등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유연·재택근무 확산, 공공부문 가족친화인증 의무화, 육아휴직자 및 지원확대, 출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등
고령사회 분야 (총 99개)	노후소득보장 강화	경력단절여성 추후납부, 연금 사각지대 해소,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노후준비서비스 내실화 등
	활기차고 안전한 노후 실현	치매예방수칙·운동법 확산, 치매병동 및 센터 확충, 노인일자리아업 활성화, 임대주택 확대, 교통안전교육 등
	여성, 중·고령자, 외국인력 활용 확대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해외인재 유치 활성화 등
	고령친화 경제로의 도약	원격의료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대학구조개혁, 청년 귀농 지원 활성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
대응 기반 분야 (총 8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 강화	전국적인 저출산 극복운동, 아빠육아 캠페인 추진, 인구통계 주기적 공표, 인구영향평가 기본모델 개발 등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2017: 5-13)을 재구성함

### ○ 제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중앙부처 소요예산 현황

- 저출산 분야의 경우 '17년의 세부분야는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16년 청년일자리·주거대책강화),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16년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16년 맞춤형 돌봄확대·교육개혁),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16년 일·가정양립사각지대해소)의 4개 분야가 이어짐(<표 2-16> 참조)
- '16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에서 저출산 분야의 과제는 81개였으나, '17년에는 이보다 8건 증가한 총 89건으로 나타남. 맞춤형 돌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3개 분야에서의 과제가 모두 증가하였으며, 이 중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부문에 대한 과제가 시행계획 과제 총량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17년 35개, 39.3%)

- 예산 또한 '16년 21.4조원에서 '17년 24.1조원으로 전년 대비 2.6조원(12.6%) 증가하였음. 특히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분야에 소요되는 예산은 15.8조원('16)에 이어 16.2조원('17)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시사함
- 다만, 최근의 증액예산 2.6조 원 중 61%가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부문에 할당되었다는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2-16> 저출산 분야 중앙부처 시행계획 소요예산 현황 비교(2016-2017년)

분야	과제수 (비율)		예산(억원) (비율)			
	'16년	'17년	'16년	'17년	증감	%
총계	81 (100.0)	89 (100.0)	214,173 (100.0)	241,150 (100.0)	26,977 (100.0)	12.6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20 (24.7)	22 (24.7)	36,375 (17.0)	52,826 (21.9)	16,451 (61.0)	45.2
출생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32 (39.5)	35 (39.3)	11,764 (5.5)	14,223 (5.9)	2,459 (9.1)	20.9
맞춤형 돌봄 확대 및 교육개혁	17 (21.0)	17 (19.1)	158,460 (74.0)	162,351 (67.3)	3,891 (14.4)	2.5
일·가정 양립의 일상화	12 (14.8)	15 (16.9)	7,575 (3.5)	11,750 (4.9)	4,175 (15.5)	55.1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2016, 2017)을 재구성함

○ 제3차 기본계획의 저출산 분야 시도별 자체사업 소요예산 현황

- 저출산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과제 수의 규모는 '16년 2,224건에서 '17년 이보다 소폭 감소한 2,135건으로 나타남
- 최근 과제규모로만 보건대, 부산광역시가 278개의 자체사업을 보유하고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224개), 충청남도(212개), 충청북도(194개) 등의 순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울(40개)과 경기(38개)는 적은 편임



- 저출산 분야의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소요예산 규모는 3.2조원('16년), 3.4조원('17)으로 전년 대비 1,635억 원(5.0%) 증가하였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 자체사업의 과제 수 규모는 타 지방정부에 비해 적은 편이나, 자체사업 소요예산은 2개년 모두 가장 큰 규모이며('16년 6,282억 원, '17년 6,731억 원), 증액된 예산 또한 449억 원으로 가장 많음
-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체사업 소요예산은 '16년 1,696억 원에서 '17년 1,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4억 원(15%) 감소하였음

<표 2-17> 저출산 분야 시도별 자체사업 소요예산 현황 비교(2016-2017년)

구분	과제 수		예산(억 원)			
	'16년	'17년	'16년	'17년	증감	%
계	2,224	2,135	32,943	34,578	1,635	5.0
서울특별시	74	40	1,961	2,207	246	12.5
부산광역시	362	278	3,393	3,367	-26	-0.8
대구광역시	49	65	1,776	1,946	170	9.6
인천광역시	100	88	200	239	39	19.7
광주광역시	122	113	597	674	77	12.9
대전광역시	76	92	1,947	1,979	32	1.7
울산광역시	82	88	1,505	1,538	33	2.2
세종특별자치시	56	49	365	413	48	13.2
경기도	42	38	6,282	6,731	449	7.2
강원도	101	141	601	794	193	32.2
충청북도	197	194	2,047	2,152	105	5.1
충청남도	206	212	2,829	2,986	157	5.5
전라북도	105	129	1,899	2,076	177	9.3
전라남도	173	164	1,303	1,279	-24	-1.8
경상북도	234	224	3,903	4,078	175	4.5
경상남도	196	167	640	677	37	5.8
제주특별자치도	49	53	1,696	1,441	-254	-15.0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2016, 2017)을 재구성함

#### 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 정책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인식개선 홍보교육, 기타 지원사업 등의 분야로 파악(보건복지부,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
- 임신 관련 시책
  - 예비부모와 임신부에 대한 의료검진, 의약품 제공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자로도 임신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전, 강원, 전북, 경남에서 타 지역보다 비교적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산 관련 시책
  - 출산장려정책 중 출산과 관련된 시책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출산교실,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용품 지급 등을 주로 시행하고 있음
- 육아 관련 시책
  - 자녀 양육 관련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인프라를 확대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간접적인 시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천, 광주, 충북, 경남 지역이 타 지역보다 비중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국제결혼 이민자 관련 시책
  -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른 세부사업의 지원대상자의 일부로 포함되고 있음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시책
  - 양육비 지원, 공과금 감면, 공공시설물 이용에 대한 혜택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 인식개선 홍보교육 시책
  - 대구, 대전을 비롯한 광역시 지역에서는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나, 충남을 제외한 도 지역에서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lt;표 2-18&gt; 지방자치단체 추진 주요 출산장려정책

구 분	세 부 사 업 내 용
결 혼	미혼남녀 만남의 장, 결혼식장 무료(할인)대여, 예비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 베이비플랜교육 등
임 신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고위험 임산부 특별관리, 임신기초검사 지원, 임산부 산전관리, 난임부부 한약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지원, 기형아 진단(풍진), 산부인과 지원, 청소년 산모지원, 임산부 할인
출 산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출산용품 지원, 모유수유 클리닉, 유축기 등 임산부용품 대여, 출산준비(임산부/건강)교실,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 출산축하카드 발송, 신생아 앨범제작 지원, 출산기념통장 지원, 지역 소식지 게재, 작명, 산후조리, 출산도우미 지원, 건강관리사 지원
육 아	양육지원금 지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장난감 무료대여, 아빠 육아교실, 예비할머니 교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육아용품 베품시장, 의료비지원(예방접종 등), 유아의자 지원, 차량시트 지원, 유모차 지원, 의약품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베이비시터 지원, 육아체험, 영유아 관련 사업, 청력검사
국제결혼 이민자 지원	다문화가족 임산부 건강교실, 다문화가정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의료시설 이용시 통역서비스 지원 등
인식개선 교육·홍보	출산장려 교양강좌, 출산장려정책 홍보물 제작·배포, 임산부의 날, 저출산 인식개선 홍보, 모유수유, 축제 및 음악회, 출산장려서비스 지원, 공모전
기 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농가도우미 지원, 수도요금 감면, 다둥이 모임, 셋째(중등, 고등교육) 교육비지원, 정관/난관 복원시술, 공무원 사회 제도 개선, 다자녀가정 우대, 어린이집 지원(식자재, 교육비, 연료비 등)

자료: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사례집(보건복지부)

### 3. 저출산 정책의 한계

- 1·2차 기본계획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을 고려할 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p. 8)
-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저출산 대책 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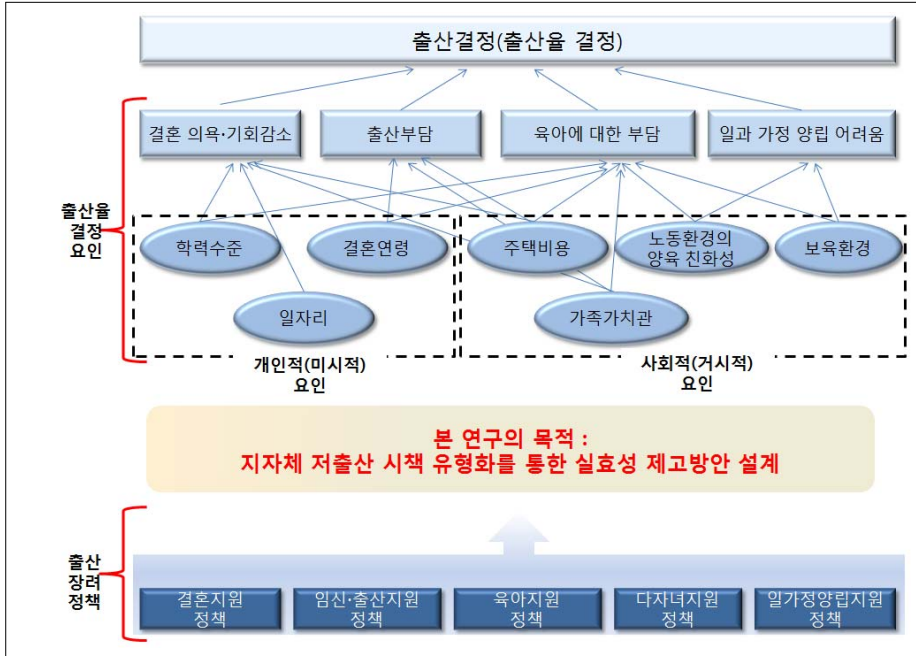
- 인구정책의 특성상 근시안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적어도 한 세대(20~30년)를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시야 필요
- 인구정책의 기준이 된 ‘출산율 제고’라는 목표, 즉 ‘출산율 회복 = 인구증가’라는 인식하에 추진한 정책의 한계(국정기획자문위원회 브리핑, 매일경제 2017.6.8.)
  -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출산율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나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인구수가 줄어들면 의미 없음
  - 즉, 출산 가능한 가임여성이 줄면 출산율을 회복하더라도 절대적인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음
  - 출산율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는 정책이 시급함
- 제3차 저출산 대책도 출산율을 제고하자는 출산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출산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음(노승용 외, 2016: 121)
  -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가족수당, 양육수당을 좀 더 강화하거나 보육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정책 제시가 제한적임
  - 또한, 고용불안은 젊은 층이 출산을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함

## 제4절 분석모형 도출

- 앞에서 살펴 본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현재 개략적인 저출산 정책의 내용을 토대로 분석 모형을 도출한 바는 다음과 같음<sup>3)</sup>
  - 출산율은 집합적 변수이나 각 개인의 출산결정의 합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거시적 요인들이 궁극적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개략적인 출산요인을 제시해 볼 수 있는데, 저출산 정책은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런데 저출산 정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서는 저출산 정책과 출산율 결정 요인과의 부합성이 높아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을 유형화하여 출산율 결정 요인과의 부합성을 살펴보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3) 아래의 분석 모형은 Joëlle, E. S.(2003: 34)의 모형을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하게 수정한 것임

<그림 2-10> 본 연구의 분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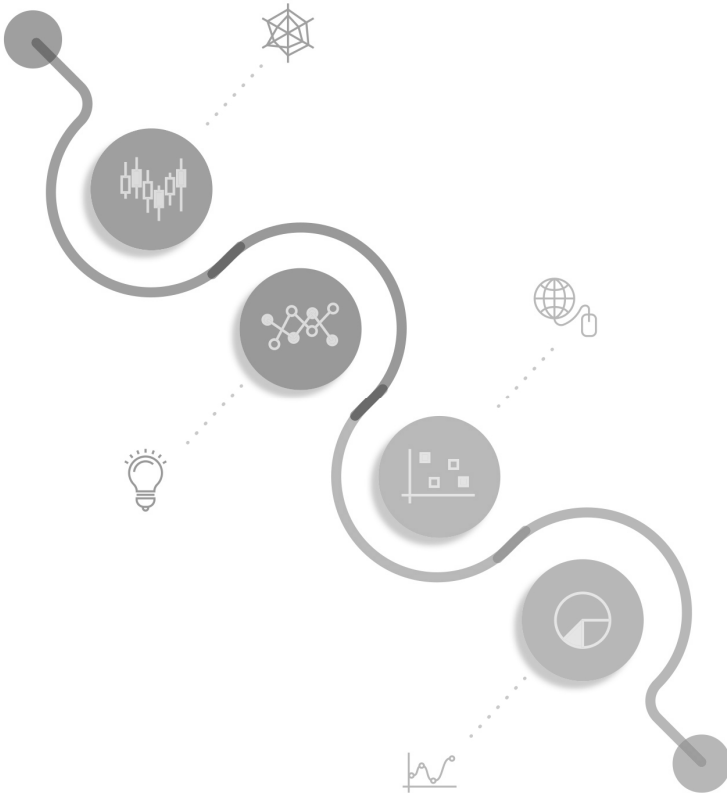
# 제3장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제4절 소결







## 제 3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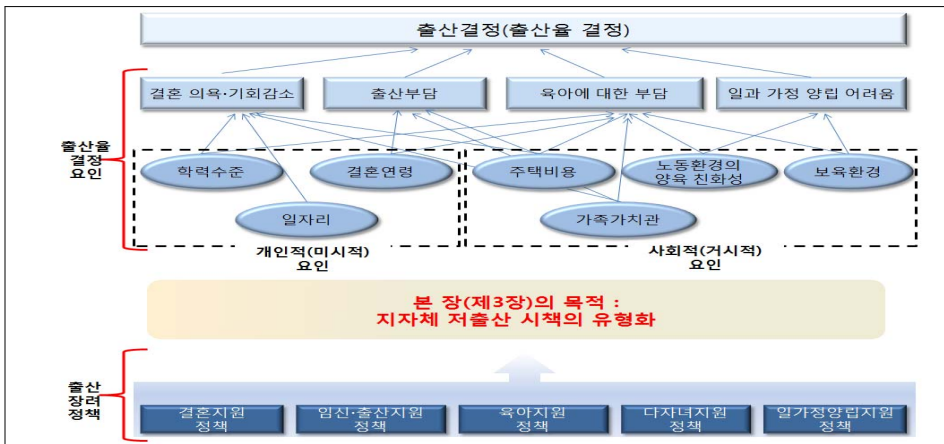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유형화

### 제1절 분석모형

#### 1. 분석 목적

- 본 장의 목적은 지자체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수많은 저출산 시책을 유형화하여 이후 실효성 제고 방안 설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개수는 8천여 개가 넘으며 유사한 사업끼리 분류하여도 수백 개에 달함
-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출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결정 요인과 저출산 정책의 부합성이 중요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좀 더 세부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음
  - 선행연구에서의 저출산 정책 유형화는 정책 수단과 정책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유형화에 해당하여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그림 3-1> 본 장의 분석 목적



## 2. 분석 대상

- 저출산 시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 대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출산장려사업 전체임
  -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공통사업과 지자체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체사업을 모두 포함함
  - 출산장려사업은 일자리 지원 정책, 주거 지원 정책, 교육 정책, 저소득층 지원 정책 등과 교차되는 부분이 있어 어디까지를 출산장려사업으로 볼 지 한 정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다만, 본 연구에서는 주요 정책 목적이 출산 장려보다는 다른 데 있거나-예를 들어, 교육 정책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지원 성격이 강한 정책-예를 들어, 장애아동 지원 등-들은 제외하였음
- 분석 자료로는 지자체의 저출산 시책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는 여러 다양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음
  - ‘지자체 공공서비스 제공 목록(정부 3.0 사이트 제공)’ 자료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자료,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등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저출산 시책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분석하였음

## 3. 분석 방법

### 가. 저출산 정책의 유형화 기준

- 저출산 정책의 유형화는 보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설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기준을 적용함
  - 우선,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인지를 구분하는 자체사업 여부 기준 적용
  - 다음으로는 생애주기별로 결혼 단계에서의 지원 사업인지, 임신·출산 단계

- 에서의 지원 사업인지, 육아 단계에서의 지원인지, 그리고 다자녀 출산 및 육아를 위한 지원인지에 따른 생애이행단계별 기준 적용
- 이러한 현황 자료를 토대로 정책설계의 3요소에 해당하는 정책 대상(누구에게), 정책 목표(무엇을), 정책 수단(어떻게)을 기준으로 유형화 적용<sup>4)</sup>
  - 정책 대상 기준 유형화는 소득 기준별로 일정 집단에게 한정되는지 전체 집단에게 모두 적용되는지 여부를 파악
  - 정책 수단 기준 유형화는 정부가 직접 또는 민간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비용을 환급해 주는 것인지 현금 보조를 하는 지원인지, 홍보 등 정책 수단별 분류 기준 적용
  - 정책 목표 기준 유형화는 사업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내용을 분석하여 파악

#### 나. 유형화 단계

- 저출산 시책을 유형화하기 위해 위의 유형화 기준을 단계별로 적용함
  - 1단계: 저출산 관련 시책 전부를 생애이행단계별로 구분하고 공통사업인지 자체사업인지 여부로 분류한 목록을 작성하고 각 사업별 현황을 간략히 정리
  - 2단계: 각 시책별로 정책 대상, 정책 수단, 정책 목표를 기준으로 한 최종 유형화 완료

4) 김영록 외(2016)는 저출산 정책의 정책 수단 유형 분류 기준으로 직접생산, 공기업, 사회규제, 경제규제, 민간위탁, 보조금 조세지출, 바우처, 사회보험, 사용자, 직접대출, 대출보증, 손해책입법 등의 Salamon(2002) 기준이나, 강제성과 직접성을 기준으로 9가지 유형화한 전영한(2007)의 기준은 적절치 않다고 보았음. 저출산 정책은 추진 주체가 정부이지만 출산을 결정하는 주체가 부부이므로 강제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임. 저출산 정책의 목적이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직접성’과 ‘보편성’ 기준을 제시함. 직접성은 저출산 정책이 집행되어 정책대상 집단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결혼, 출산, 자녀 양육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급여를 제공하는 정도를 의미함. 우리 연구의 유형화 기준 중 정책대상 기준은 ‘보편성’ 기준과 부합하고, 정책수단 기준은 ‘직접성’ 기준과 부합한다고 할 수 있음

<표 3-1> 저출산 정책의 유형화 기준

단계	기준	구분	내용
1단계: 현황 정리 단계	자체사업 여부	공통사업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며, 국비 지원, 지방비 매칭 사업
		자체사업	지방자치단체 자체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비예산 사업 포함)
	생애이행 단계별	결혼 지원 (가족 형성 지원)	결혼 시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임신·출산 지원	임신과 출산 시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육아 지원	육아 시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다자녀 지원	쌍생아 및 둘째 아 이상 자녀 양육 시 필요한 서비스 및 비용 경감을 위한 지원 사업	
2단계: 유형화 단계	정책대상 (누구에게)	전체 대상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전체 집단 대상
		일정소득기준 이하 대상	저소득층 또는 일정 소득 이하 집단 대상
	정책수단 (어떻게)	서비스 공급	정부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시장을 통해 서비스 또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비용지원	일정 조건 충족 시 비용을 절감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격할인 또는 비용일부환급 등)
		현금지원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	홍보, 캠페인 등
	정책목표 (무엇을)	내용분석을 통해 16개 유형 도출	해당 사업들의 내용 분석을 통해 저출산의 어떤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유형 도출 (행정편의, 소득보전, 생활비절감, 자녀교육지원, 일가정양립지원, 보육서비스이용지원, 보육기관지원, 출산육아용품지원, 출산축하선물, 임신출산비용절감, 출산육아정보제공, 임산부배려, 출산캠페인, 결혼기회지원, 주거지원, 의료비절감)

##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

### 1. 결혼 지원

- 저출산 시책 중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결혼 지원 시책 현황은 공통사업 및 자체사업 별로 다음과 같음
  - 결혼 지원 시책은 결혼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며, 공통사업 1개와 자체사업 7개를 포함하여 총 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2> 지자체 결혼 지원 시책 현황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통사업	신혼부부 전세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li> <li>•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li> </ul>	
자체사업	미혼남녀 만남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li> <li>• 관내 거주 미혼남녀</li> </ul>	서울 서초구 등
	건강한 결혼문화 장려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맞춤형 결혼전략 설명회, 결혼장려 캠페인, 매칭프로그램 운영, 싱글 커뮤니티 운영 등</li> </ul>	대구 달서구 등
	결혼예식장 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예식장 지원 장려금 지원</li> <li>• 관내 결혼식장 이용 결혼당사자</li> </ul>	충북 괴산군 등
	합동결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식장, 결혼예복 등 결혼식 진행비 지원</li> </ul>	강원 속초시 등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병행서비스 지원</li> </ul>	대전 동구, 경기 하남시 등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항공료, 체재비, 맞선비용 등 최소 3백만원에서 최대 6백만원 지원</li> <li>• 관내 거주 농촌총각</li> </ul>	군단위 다수 지자체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결혼이민자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친정방문 지원, 요리교실 수강 지원, 출산용품지원 등 제공</li> <li>•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li> </ul>	군단위 다수 지자체

## 2. 임신·출산 지원

- 저출산 시책 중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임신·출산 지원 시책 현황은 공통사업 및 자체사업 별로 다음과 같음
  - 임신·출산 지원 시책은 임신과 출산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며, 공통사업 10개와 자체사업 48개를 포함하여 총 5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3> 지자체 임신·출산 지원 시책 현황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통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난임 가정(여성 만 44세 이하)에 체외수정 시술비를 1회당 190만원 범위에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00만원) 신선배아, 동결배아를 구분하여 최대 6회까지 지원, 인공수정 시술을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지원</li> <li>• 난임부부의 정신적·심리적 고통 해소를 위한 심리 및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15.7월, 시범사업)</li> </ul>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금액 상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임신부에 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체크/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구. 고온맘 카드) 형태로 1인당 50만원 지원(다태아 임신부는 20만원 추가 지원)</li> </ul>	• 지자체별 지원 기준 및 금액 상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 장애인여성(1~6급)이 출산이나 유산 또는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을 했을 경우에 지원</li> <li>•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00만원을 지원</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신 20주 이후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신부의 진료비 중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 중위소득 180%(790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가구 대상,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li> </ul>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에 등록된 모든 임신부에게 전국 보건소에서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li> <li>- 지원기준 : 철분제(임신 5개월부터 분만 전까지, 1인당 최대 5개월분), 엽산제(임신일로부터 임신 3개월까지, 1인당 최대 3개월분)</li> <li>* 단,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에는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요구되는 추가수량을 지원 가능하도록 함</li> </ul>	
	해산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에 해산급여를 지급(1인당 60만원, 쌍생아 120만원)</li> <li>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3%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시</li> </ul>	
	긴급복지 해산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기 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중 가구 구성원이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경우 해산비로 60만원(쌍둥이는 120만원)을 지원</li> <li>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li> </ul>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저생계비 200%미만(334만원, 4인가구 기준) 임산부와 영유아(만 6세 미만)를 대상으로 영양평가를 실시하여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최대 1년) 영양교육 및 상담(월 1회 이상) 실시 및 보충식품 제공</li> </ul>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주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관련 돌봄 표준서비스 지원(산모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보조 및 건강관리, 감염예방 관리 등)</li> <li>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유·사산 포함), 쌍생아</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산모는 3주(15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4주(20일)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방접종, 각종 검진, 검사, 양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위한 산모수첩 및 어린이건강수첩을 제공</li> <li>임신부 또는 출생사실이 확인 된 영유아 중 보건소에 등록된 자</li> </ul>	
자체 사업	임신·출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모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 출산준비, 모유수유 교육, 아기 마사지, 산후우울증 예방교육 등</li> </ul>	대전 동구, 경기 의왕시 등
	맘스든든 건강부모 교육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 미혼자, 기혼자 또는 조부모 대상 건강한 육아를 위한 부모준비 교육 제공</li> </ul>	서울 서초구 등
	임산부의 날 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 출산부 교육 및 출산축하 행사 운영</li> </ul>	전남 해남군, 충북 청주시 등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모성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액검사 또는 풍진항체검사 등 임신 관련 검사(보건소 직접 검사 또는 쿠폰 발급)</li> <li>가임기 여성 또는 임산부 대상</li> </ul>	부산 금정구, 강원 춘천시, 홍천군 등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 검사</li> <li>관내 거주 신혼(예비)부부</li> </ul>	서울시 동작구·양천구, 대전 동구, 경기 파주시·연천군, 경북 김천시, 경남 사천시, 전남 해남군 등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산부 산전 진료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전 진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산부인과 이동진료</li> <li>관내 임산부</li> </ul>	전남 함평군 등
	임산부 구강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부 구강검진 및 구강보건교육 실시</li> <li>관내 거주 임산부, 관내 직장 소속 임산부</li> </ul>	서울 금천구 등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li> <li>관내 거주 가정</li> </ul>	전남 함평군 등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난임부부 대상 엽산제 지원</li> </ul>	강원 강릉시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방 진료 및 첩약 지원(비용 지원)</li> <li>• 난임 부부로서 보건복지부의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시술 종료 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부인 연령 기준 다양)</li> </ul>	울산 동구, 충북 제천시, 충남 천안시, 경남 합천군, 전북 익산시 등
	고위험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형아 검사 및 임신성 당뇨 검사 무료쿠폰 발급</li> </ul>	서울 동작구 등
	임산부 말기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말기 임신성 당뇨검사</li> <li>• 관내 거주 임신 말기 임산부</li> </ul>	경기 과천시 등
	임산부 280건강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 1회당 26만원 지원</li> <li>• 임신 24주 이상 분만 후 6개월 이내</li> </ul>	전북 익산시 등
	임산부자동차 스티커 발급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중이용시설시 차량 이용 편의</li> </ul>	대전 동구, 광주 광산구, 충남 홍성군, 전남 광양시 등
	임산부 표시 홍보물 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용 임산부 표시 스티커, 임산부 엠블럼이 있는 홍보물 배부</li> </ul>	서울 구로구 등
	임산부 초음파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산부 초음파 검진 의료비 지원(6만원 이내)</li> <li>• 관내 거주 임산부</li> </ul>	전남 강진군, 경남 의령군 등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발급 또는 검사비 지원 또는 보건소 신청 검사 실시</li> <li>• 16~20주인 임산부</li> </ul>	서울 관악구·동대문구, 대구 달서구·달성군, 부산 서구, 울산 북구,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경기 안양시·광주시, 충남 보령시·부여군, 전북 정읍시·남원시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수유 교육(보건소 운영, 교육 쿠폰 지급)</li> <li>• 관내 임신부 및 수유부</li> </ul>	서울특별시, 광주 북구, 경기 안산시·남양주시, 강원 영월군, 전북 남원시, 충남 당진시, 경남 사천시 등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 착유기 및 부속품 대여</li> </ul>	전남 여수시, 경남 사천시·의령군, 경북 포항시 등
	모유수유시설 설치기관 물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유수유시설을 설치하고 물품 신청 한 기관 대상 임신부 방식 등 물품 지원</li> </ul>	충남 아산시 등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취약지역으로 산부인과 진료 시 이송비</li> <li>• 관내 의료원 임신부 등록자로서 출산부</li> </ul>	전북 순창군·전북 완주군 등
	출산축하 기념사진 촬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진촬영권 쿠폰지원(가족사진 1매, 아기사진 1매)</li> <li>• 중평군 관내에서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li> </ul>	충북 증평군, 경북 영주시 등
	출산준비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 산욕기관리, 모유수유, 태교, 신생아관리, 애착형성을 위한 부모역할 등 교육(정보 제공)</li> </ul>	
	베이비 마사지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베이비 마사지 교육 및 실습</li> <li>• 출생 후 3개월 부터 12개월 미만 영아</li> </ul>	경기 군포시, 충북 청주 등
	엄마랑 아기랑 놀이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각발달 및 음악체험놀이, 성장발달 평가 및 건강상담, 이유식 및 영양교육</li> <li>•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6~30개월 영유아</li> </ul>	충북 증평군 등
	엄마 튼튼, 아가 튼튼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건강관리 사업 (임산부 등록 및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여성, 아동 통합교육 프로그램(모유수유교실, 성교육 등), 음식점 임신부 할인 우대 및 공영주차장 할인, 출산육아 정보제공 등</li> <li>• 관내 임신부 및 가임기 여성</li> </ul>	대전 서구 등
	임산부(예비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등록관리 및 건강 상담, 건강강좌</li> </ul>	서울시 송파구,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건강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거주 임신부</li> </ul>	광주 서구, 전남 고흥군, 경기 오산시 등
	영유아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요가교실, 영양교육, 건강강좌, 출산체험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li> <li>• 관내 거주 임신부</li> </ul>	강원 횡성군 등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간호사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건강간호사가 출산가정으로 방문하여 임신부 산전후관리 및 신생아 발달단계 확인, 상담 및 교육제공(보편방문 1회, 지속방문~만2세까지 방문)</li> <li>• 관내 임신부(출산 후 4주 이내)</li> </ul>	서울시
	신생아 작명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료작명서비스(재능기부자 연계)</li> <li>• 둘째이상 출생아 또는 다문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의 출생아</li> </ul>	충남 천안시, 전북 김제시 등
	한방 육아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혈마사지, 오감발달 놀이, 이유식 교육</li> <li>• 관내 거주 영아</li> </ul>	경기 양주시, 충남 금산군 등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정부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다자녀 출산과 관련한 전기, 가스 등 요금 감면 지원 통합 신청,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를 임신 전(혼인신고 등 포함)부터 선제적으로 안내)</li> <li>• 관내 거주 산모 및 출생자</li> </ul>	인천 서구, 경남 함양군 등
	임신축하기넵폼 (축하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들에게 임신 축하기넵폼(또는 현금)을 지급</li> <li>• 관내 거주 가정</li> </ul>	경기 군포시, 강원 영월군, 충북 충주시, 경남 함양군·거창군 등
	출산축하 통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이름으로 통장 개설, 1인당 1만원 입금</li> </ul>	경기 이천시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후조리원 이용 또는 다른 장소에서 산후조리시(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급 비용 차액 지급)</li> <li>•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li> </ul>	충남 서산시, 전남 신안군, 경기 파주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거주 산모, 신생아 주민등록 시</li> </ul>	전남 영광군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li> <li>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3급 장애인 등</li> </ul>	강원 삼척시, 전남 여수시·목포시, 나주시, 장성군, 영양군 등
	산후돌봄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지원, 소득별, 태아유형별, 출생순위별 5일~25일 차등지원</li> <li>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li> </ul>	강원 고성군 등
	출산양육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첫째 자녀, 둘째 이상 자녀 차등 지원</li> <li>관내 거주 출생아 가정</li> </ul>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순천시·강진군·구례군·함평군·진도군 강원 삼척시 등
	출산육아용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용품 교환권 지급</li> <li>관내 거주 출산가정</li> </ul>	충남 당진시, 충북 괴산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고흥군·진도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산용품(유아용 다용도 손자수 손수건), 미아 방지 목걸이 지원, 출산축하 케이크 증정 등</li> </ul>	대전 유성구, 경기 고양시·화성시 등
	산후영양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부, 수유부종합비타민(2통 지원),</li> <li>종합영양제 지원</li> </ul>	강원 홍천군, 경남 진주시 등
	출산여성 한약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 한약 지원 등</li> <li>관내 출산 산모</li> </ul>	전남 담양군 등
	영유아 영양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영양제 지원, 설사, 아토피 등 문제 영유아 우선 지원</li> <li>관내 주민등록 및 실거주 4~36개월 영유아</li> </ul>	경북 성주군 등
	산후 우울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소 내소 산모 대상으로 무료 산후우울 검사 실시</li> <li>관내 거주 산모</li> </ul>	전남 나주시, 경기 수원시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무원 출산장려금	• 음성군 소속의 출산공무원 1인 연 100,000원(1회) 지급	충북 음성군 등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매월 일정금액(예, 3만원 이하) 일정기간 지원(예, 5년 지원)	경북 청도군 등
	결혼이민자 임신부 건강관리	• 임신초기와 중기 전문강사와 코디네이터가 동시에 방문하여 임신부 관리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 지원	• 출산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미혼모 가족 돌봄도우미 파견사업, 미혼모가족 직업훈련비, 미혼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또는 출산미혼모	경상남도
	미혼 한부모 추가양육비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 지급	대전 대덕구 등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 출산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영농 및 가사작업 대행 도우미 지원(비용 지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전북 김제시·익산시·무주군·진안군, 경북 청도군 등

### 3. 육아지원

- 저출산 시책 중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육아 지원 시책 현황은 공통사업 및 자체사업별로 다음과 같음
  - 육아 지원 시책은 육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며, 공통사업 26개와 자체사업 36개를 포함하여 총 62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4> 지자체 육아 지원 시책 현황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통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저귀 및 조제분유(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의 구매비용 지원</li> <li>• 기준 중위소득 40%(176만원, 4인가구 기준) 이하 영아(0~12개월미만) 가정 대상</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신생아를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 6종 검사 실시(의료기관) 및 검사 후 발견된 환아에 대해 검진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특수조제분유 지원 등(보건소)</li> </ul>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청각 선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난청조기 진단 실시(보건소에서 쿠폰 발행)</li> <li>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보장가구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 이하 가정 대상</li> </ul>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하여 최고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보건소)</li> <li>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774만원, 4인 가구 기준) 이하 가정 대상</li> </ul>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12세 이하 어린이 대상 BCG(결핵, 피내용), B형간염, 폴리오(IPV), 폐렴구균 등 14종 백신을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본인부담폐지)</li> </ul>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영유아는 만 6세가 될 때까지 건강검진 7회(생후 4, 9, 18, 30, 42, 54, 66개월) 및 구강검진 3회(2·4·5세)를 건강검진기관(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에서 조회 가능)에서 무료로 이용</li> <li>만 7세(또는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 수급권자)</li> </ul>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정밀 평가필요”로 통보된 대상자에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li> <li>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하위 30% 이하</li> </ul>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등록 장애아는 만 12세 이하) 순 계층에 보육료 지원 (월 220천원~438천원)</li> </ul>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2세 보육료,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전) 지원 아동 대상으로 야간 보육료, 24시간 보육료 지원</li> <li>영 유아 중 법정 저소득층 및 장애 아동에 한해 지원</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시간차등형(시간제)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제 근로자 등 정기적, 단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보육료 지원</li> <li>보육료(종일제어린이집) 및 유아학비(유치원) 등을 지원받지 않는 양육수당 수급 가정 중 6~36개월 미만 아동</li> </ul>	
	시간 연장 어린이집 운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간연장 보육에 따른 운영비 보조(냉·난방비, 전기, 수도료, 간식비, 시간연장 보육 교사 수당 등)</li> </ul>	
	만0~5세아 급식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보육통합정보시스템 이용)</li> </ul>	
	가정양육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계층 가정양육아동에 게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 지급</li> </ul>	지원대상 기준 지자체별 차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양육비(월12만원, 추가아동 1인당 월5만원), 학용품비(1인당 연5만4,100원), 생활보조금(가구당 월5만원) 지원</li> <li>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li> </ul>	
	누리과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5세의 모든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li> </ul>	
	방과 후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li> <li>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li> </ul>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종합지원 서비스 제공(어린이집 지원, 가정양육 지원)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홈페이지 관리, 정보제공, 운영비 지원 등)</li> <li>관내 영유아 및 부모 대상</li> </ul>	전국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 참고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아동 학습을 지도</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들이 함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육아돌봄 공간제공, 육아정보교류, 공동육아 품앗이 그룹구성, 물품나눔터 공간을 제공하고 가족이 가진 여러 가지 자원을 품앗이 형태로 나누는 활동 지원</li> <li>●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공동육아 나눔터 방문</li> </ul>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드림스타트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와 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 계층 아동 및 가족(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의 경우 지원) 대상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li> <li>*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 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 교육, 응급처치 교육, 아동 권리 교육,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 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총 8종)</li> <li>*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 (총 2종)</li> <li>*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li> <li>●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li> </ul>	
	지역아동센터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급식을 제공</li> <li>●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지역사회의 방과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li> </ul>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구강질환치료</li> <li>● 초등학교4학년생 및 지역아동센터 아동</li> </ul>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확진을 위한 진단 검사비용, 외래치료비용, 상담기관 치료 및 개인프로그램 참여 비용 지원)</li> <li>●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li> </ul>	
	아이돌보미 지원(아이돌봄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지정기관에서 3개월~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파견(소득 수준에 따라 파견비용 차등 지원)</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보육 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운영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 법인 및 취약보육담당 어린이집(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li> <li>• 보육통합 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신청</li> </ul>	
	자녀장려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부합산 총소득 4천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연 최대 50만원 지급</li> </ul>	
자 체 사 업	양육지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생아 양육비 지원(지자체별 금액 상이)</li> <li>•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li> </ul>	전라남도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대상 아동이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하는 차액 중 일부를 지원</li> <li>• 관내 부모1명 이상, 보육 아동 주민등록 시</li> </ul>	경기도 시군구, 인천 강화군 등
	민간차액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시설 대비 미지원시설의 보육료 차액을 지원</li> <li>•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이용하는 관내 주민등록 만3~5세 아동</li> </ul>	서울 구로구·양천구·성동구, 강원 속초시 등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또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의 보육료 차액 지원</li> </ul>	충남 논산시 등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저소득층 아동 중 민간어린이집(또는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차액을 지원</li> <li>• 아이사랑카드 적용 지원</li> </ul>	충남 서천군·태안군 등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시설의 저소득층 아동에게 입소료를 지원</li> <li>• 법정저소득층아동, 한부모, 다문화 가정 아동 등</li> </ul>	강원 고성군, 경기 오산시 등
	어린이집 안전 공제 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안전공제회 2,500원(1인, 연) 가입비 지원</li> <li>• 관내 어린이집 재원아동</li> </ul>	경북 경주시·봉화군·예천군, 경남 거제시·진주시, 충북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옥천군·증평군, 전북 전주시, 광주 동구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 시설이 없는 농촌지역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보육교사 교통비, 보육교사 자기개발비, 어린이집 냉, 난방비, 교재교구비, 프로그램개발비 등)</li> <li>• 보육시설(민간·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li> </ul>	충남 공주시 등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아동 조기 진단 및 검진비 20만원 한도 내 지원</li> <li>• 일반어린이집에 입소한 영유아 중 장애 의심 영유아</li> </ul>	경북 경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영양군·봉화군·울릉군 등
	보육아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저소득층아동 민간시설 이용차액 보조</li> </ul>	인천 계양구·강화군 등
	0세아 전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세아 전용 지정 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li> <li>•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정원 21인 이하)을 대상으로 하되 시간연장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li> </ul>	경기도 등
	공립 어린이집 설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지원(식자재, 교육비, 연료비, 개보수 비용 등)</li> <li>• 차량운영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 등 지원</li> </ul>	서울 마포구, 경기 평택시, 경남 합천군, 전남 순천시 등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내 보육시설(어린이집) : 신규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li> </ul>	충북 괴산군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를 감면</li> <li>•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자</li> </ul>	부산 연제구·남구, 강원 태백시·원주시 등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운영 신고 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li> <li>• 민간어린이집 연료비 지원</li> <li>• 교재교구비</li> </ul>	경기 안성시·포천시, 경북 경주시, 경남 합천군 등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인증 유도를 위해 운영비·인건비 등 지원</li> <li>• 평가인증 어린이집 대상</li> </ul>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운영비와 교사들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li> <li>•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누리과정 담당교사를 대상</li> </ul>	서울 강동구, 부산 사상구 등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 및 지원</li> <li>• 서울형 어린이집 50개소</li> </ul>	서울시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형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대상 운영비 지원</li> </ul>	대전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 충남 공주시, 전남 해남군 등
	보육교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근속수당 지원</li> <li>• 특수교사에 대한 후생복지비 지원</li> <li>• 어린이집 영아반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li> <li>• 동지역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매월 수당 지원</li> <li>•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 교통비 지원</li> </ul>	경기도 구리시·포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천군,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직원 교육 및 행사 지원</li> </ul>	경남 진주시 등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담당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누리과정 담당교사</li> </ul>	
	민간·가정 보육교직원 교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 생활 보장수급자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 신입생 자녀들에게 교복비를 지원</li> <li>• 보육통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li> </ul>	서울 송파구, 경기 시흥시·군 포시 등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보육교사 월정액 지원</li> </ul>	광주 광산구, 경기 여주시, 경북 예천군 등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부담 경감</li> </ul>	인천 옹진군, 충남 서천군 등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출산 및 육아 경험이 있거나 2년 이상의 보육실무경력이 있는 보육교사가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1:1로 보육(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신청)</li> <li>• 24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관내 거주 맞벌이 가정</li> </ul>	경기도 시군구 등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을 모니터링, 어린이집 모니터링 완료 후 활동비 지급</li> <li>• 부모 및 보육전문가</li> </ul>	충남 서천군, 경북 청송군 등
	가정위탁 아동 보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위탁아동들의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양육보조금, 직업훈련비 등)</li> <li>• 가정보호아동 세대 제수비 지원</li> </ul>	서울 금천구, 경남 함양군 등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도담도담 장난감 월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난감 무료 대여</li> <li>• 장난감 전시실, 비디오 감상실, 체험장, 놀이실 등 운영</li> </ul>	서울시, 인천광역시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대여</li> <li>만 3세 이하 자녀를 둔 모든 가정</li> </ul>	서울 송파구 등
	보육정보센터(영유아 플라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5세 미만 영유아와 부모 및 보육교직원 에 대한 보육 토틸 서비스 제공(체육놀이, 부모교육 등)</li> <li>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li> </ul>	대구 동구, 서울 서대문구 등
영유아 및 부모 도서관 운영	육아누리 도서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 및 양육 관련 도서 운영</li> <li>취학 전·후 아동 및 부모</li> </ul>	서울 강동구 등
	동화나라 책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아들의 독서습관 정착</li> <li>유아 및 어린이(5~7세)</li> </ul>	부산 북구
	생애 첫 도서관 이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책 꾸러미(책가방, 책 1권), 동아리 지원</li> <li>영유아 및 부모</li> </ul>	경기 안양시, 경남 진주시, 전북 전주시 등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혼모 아동 양육을 위한 병원비·양육용품, 등 지원</li> <li>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li> </ul>	전남 강진군 등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동 독서 지도, 부모 대상 독서지도 상담</li> <li>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만 2세~만 6세 이하의 아동</li> </ul>	서울 동대문구 등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모와 아동이 함께 설문지를 작성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는 부모가 어린이집 교사에게 통보, 이후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안과 사전감사 및 수술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함</li> </ul>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심학교 운영(환아선별, 등록, 지원, 교육, 홍보) 및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아토피 보습제 지원</li> <li>취약계층 아동 대상(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별 상이)</li> </ul>	
	아동 치아 불소도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내초등학교 및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등</li> </ul>	서울 중구·양천구 등

#### 4. 다자녀 지원

- 저출산 시책 중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자녀 지원 시책 현황은 공통사업 및 자체사업 별로 다음과 같음
  - 다자녀 지원 시책은 다자녀의 출산 및 육아 장려를 목적으로 하는 시책이며, 공통사업 7개와 자체사업 26여 개를 포함하여 총 33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3-5> 지자체 다자녀 지원 시책 현황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공통 사업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상 미성년인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10% 주택 특별·우선 공급</li> <li>• 3자녀 이상 저소득 무주택가구에게는 일반가구에 비해 대출한도 상향 및 우대금리 적용</li> </ul>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전기요금 20%(12,000원 한도) 할인</li> </ul>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사 및 사용용도에 따라 월 130원~6,000원 할인</li> </ul>	
	3자녀 이상 가구 지역난방요금 정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 4천원 지원</li> </ul>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 아이 이상 1~2학년 대학생에게 연 450만원 범위 내 지원</li> </ul>	
	자녀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 자녀 한 명당 15만원 세액공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30만원(2인)+2명 초과 1명당 15만원 세액공제</li> </ul>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08년 이후 둘째아 출산 시 1년, 셋째아 이상 출산시 1년 6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 보험료를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li> </ul>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세 미만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경감</li> </ul>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양수수료 전액 지원 및 만 0~15세 미만 입양아 양육수당(월15만원) 지원</li> <li>장애아 입양가정 양육수당(중증 627천원, 경증 551천원) 및 의료비(연간 2,600천원) 추가 지원</li> </ul>		
자체 사업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다동이 행복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용카드 : GS칼텍스 주유비 할인, 영화 할인, 대중교통비 할인, 공영주차장 할인, 주요놀이공원 할인, 패밀리리조트랑 할인 등/ 체크카드 : 영화 할인, 놀이공원 할인, 자유적금 금리 우대 등/ 신분확인용카드 : 다동이 매점 할인(신용카드, 체크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서비스혜택은 제공하지 않음)</li> <li>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 13세 이하</li> </ul>	서울 자치구
		행복플러스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8개분야 공공시설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안산시 관내 공영주차장(안산도 시공사 운영), 어촌민속박물관, 누애 섬 등대전망대 이용료 등</li> <li>안산시 거주 세자녀이상 가정</li> </ul>	경기 안산시
		가족사랑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안대로 통행료면제, 공영주차장 50%할인(시, 구군), 도시철도요금할인 50%(상인요금 기준), 공공시설 이용료 등 감면, 참여업체별 할인</li> <li>부산시 거주,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이 되는 가정의 부모, 자녀, 조부모(주민등록등본 기준)</li> </ul>	부산 자치구
		아이모아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금융기관, 대출금리, 수수료 우대 또는 면제(학원, 대형음식점, 이 미용실, 목욕요금 할인,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제품구매 시 할인, 영화관, 박물관, 공연 등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li> <li>인천 시민으로서 3자녀이상 가정(막내가 2002년 1월1일 이후 출생)</li> </ul>	인천 부평구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꿈나무 사랑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품구입 및 시설이용 시 할인 혜택, 지하철요금 면제, 공영주차장 50% 할인, 취득세 1대 감면</li> <li>• 대전광역시 거주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li> </ul>	대전 중구
	다사랑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협/BC카드사 및 가맹업체와 협약 체결, 가맹업체의 물품 구매 또는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li> <li>•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가 만 12세 이하인 가정</li> </ul>	충청남도
	다복가정 희망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혜택으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li> <li>• 도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li> </ul>	경북 칠곡군, 예천군, 구미시
	I 다누리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 협약내용의 약정에 의한 할인, 우대 제공(교육, 출산육아, 건강의료, 공공시설, 금융 등 무료~50% 할인혜택 부여, 영화, 쇼핑, 주유 등 할인 혜택)</li> <li>• 경상남도 거주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만13세 이하 (현재 셋째아 임신부 포함)</li> </ul>	경남 창원시, 하동군
	해피! 다둥이 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주동물원 입장료 면제(부모와 자녀 모두), 전주자연생태박물관 입장료 면제(부모와 자녀 모두)</li> <li>• 만 18세이하의 자녀를 세명이상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2000년 이후에 태어난 가정에 한함</li> </ul>	전주시
	주차요금 감면 차량용스티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 스티커</li> <li>• 셋째아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li> </ul>	경기 오산시, 부산 자치구 등
	통장개설 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개설축하금 3만원(출생아별 1회 지급)</li> <li>• 관내 둘째이상 출생아(첫째아가 쌍생아 이상으로 출생 시 첫째아도 지원)</li> </ul>	대구 동구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수도요금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수도 요금 중 월 2,000원 감면(또는 5톤 또는 3제곱미터)</li> <li>만 19세(또는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인 가정</li> </ul>	경기 오산시·부천시, 전북 익산시, 충남 천안시 등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집 이용시 비용 일부 지원</li> <li>세자녀 이상 가정</li> </ul>	대전광역시, 경기 수원시 등
	셋째(중등, 고등교육) 교육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자금 지원</li> <li>세자녀 이상 가정</li> </ul>	경북 의성군, 경남 거창군, 강원도 등
	출산장려금(또는 출산축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출생 시 양육지원금 지급(첫째 자녀 출산 시부터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지자체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지급하거나 셋째 또는 넷째 자녀부터 지급)</li> <li>지원비 역시 지자체 별로 다양함</li> </ul>	
	자녀 양육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5세까지 월별 일정금액</li> <li>다자녀가정의 셋째(둘째) 이상 자녀</li> </ul>	경기 안산시, 경북 의성군·합천군, 경남 남해군, 충북 청주시, 전북 김제시·완주군 대전 중구 등
	출산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용품 구입비 지원</li> <li>넷째아 이상 가정</li> </ul>	전북 군산시·익산시·전주시·완주군, 전남 광양시 등
	출산육아용품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육아용품(육아용 카시트, 기저귀, 딸랑이세트 등) 지원</li> <li>넷째아(둘째, 셋째아) 이상 가정</li> </ul>	전북 순창군, 경북 영주시·의성군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축기 젓병소독기 등 대여</li> <li>다문화가정 셋째 이상 출생아</li> </ul>	경북 안동시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자녀 이상 출산세대 매월 100L이내의 종량제 봉투 지원</li> </ul>	경기 광명시 등
	한약첩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첩약지원</li> <li>다자녀 가정</li> </ul>	경북 영천시 등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생아 및 입양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li> <li>셋째아(또는 둘째아) 이상 신생아(입양아는 전체 대상, 자녀수 무관)</li> </ul>	부산 기장군, 인천 부평구·남동구, 경북 안동시·포항시·예천군·봉화군, 경남 함양군, 경기 양주시, 강원 인제군·춘천시, 전북 부안군 등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험지원 : 5년 납입 10년 보장, 질병·재해로 인한 수술·입원·진단비 등</li> <li>보호자(부 또는 모)와 함께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해당연도에 출생한 셋째 자녀 이상의 영아</li> </ul>	서울 강북구 등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 보험료 30,000원 이내 복지보험료 지원</li> <li>부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셋째아이 이상 지원</li> </ul>	경남 사천시 등
	가족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 자녀 이상 가족이 공공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진료 시 본인부담금 지원(진료 시 의료기관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li> <li>관내 주소지를 둔 세자녀 이상 가족 전원(기준 다양)</li> </ul>	경북 안동시·포항시·경산군·예천군, 경기 이천시 등

구분	사업	정책 내용	비고
	출산산모 무료골밀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자녀이상 출산한 관내 임신부의 무료골밀도검사</li> </ul>	경기 의왕시 등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자녀 임신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li> <li>다자녀 임신부</li> </ul>	경북 성주군 등
	신생아 병원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둘째 아이 이상 24개월까지 본인 부담 진료비 지원</li> <li>연간 50만원 한도(2년간 지원) - 총 100만원</li> </ul>	광주 광산구 등
	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둘째아 이상 병원비 지원(2년간 100만원 지원, 출생일로부터 1년간 50만원, 그 후 1년간 50만원)</li> <li>전국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 세대</li> </ul>	광주 남구 등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산모 식사, 세탁, 신생아 목욕, 산모 방 청소, 산모 건강관리 등)</li> <li>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li> </ul>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복지부 시행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li> <li>셋째아 이상 출산가정</li> </ul>	서울 은평구 등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방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원</li> <li>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상인 셋째아 이상, 쌍생아 출산가정</li> </ul>	울산 동구 등
	산후조리비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후조리비용 지원</li> <li>다자녀 가정</li> </ul>	경남 함양군, 강원 춘천시 등
	가정 돌보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이돌보미 파견</li> <li>1년 이상 거주 두 자녀 이상 가정</li> </ul>	서울 서초구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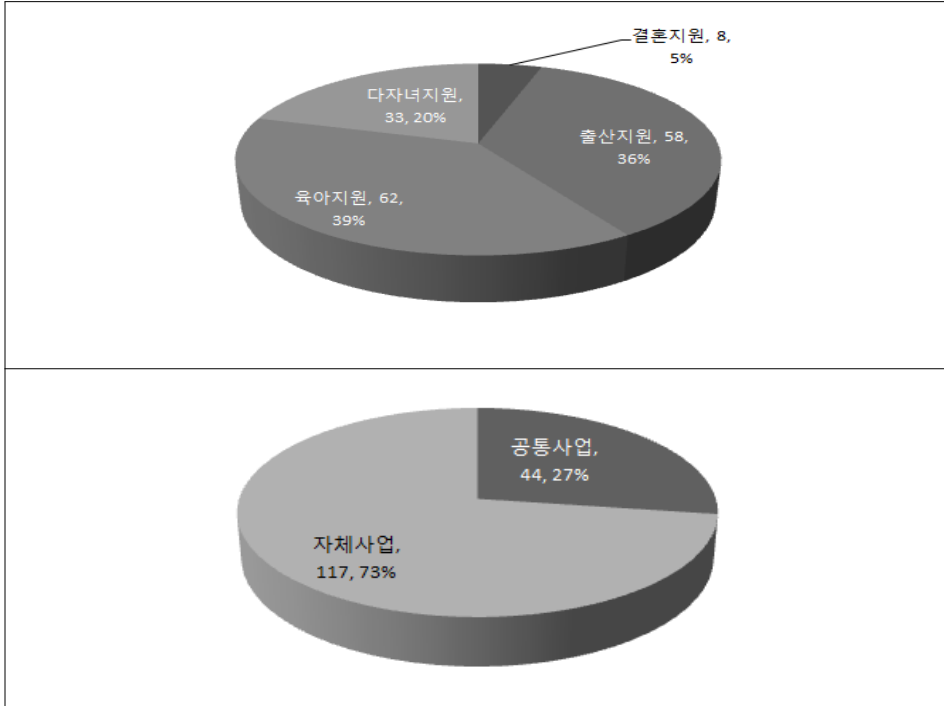
## 5. 종합

-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애단계별 기준과 자체사업 여부로 구분하여 시책을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생애단계별로는 육아지원(39%), 출산지원(36%), 다자녀지원(20%), 결혼지원(5%) 순으로 사업의 종류가 많이 나타남
  - 전체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시책을 정리해보면 사업 개수 측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공통사업(27%)보다는 자체사업(73%) 비율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저출산 시책에 투입되는 예산을 비교해보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저출산 시책에 투입되는 예산은 24.1조원(87%)이고, 지자체에서 투입하는 예산의 총합은 3.46조(13%)로 중앙정부 투입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6>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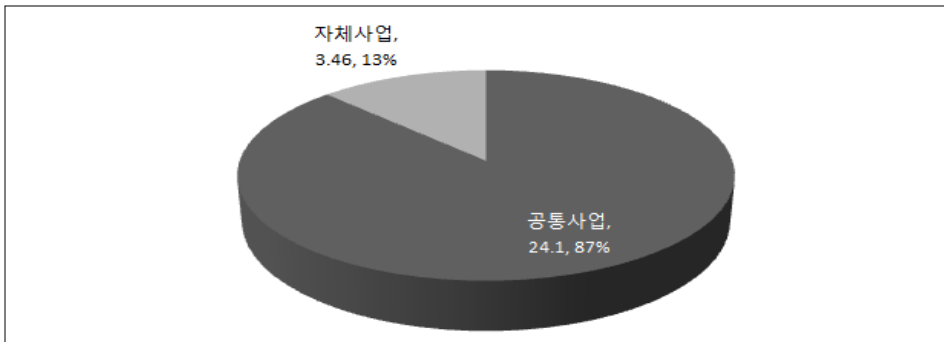
생애단계별구분	자체사업여부	사업개수(%)	
		유형별	전체
결혼지원	공통사업	1(0.6%)	8 (5.0%)
	자체사업	7(4.3%)	
출산지원	공통사업	10(6.2%)	58 (36.0%)
	자체사업	48(29.8%)	
육아지원	공통사업	26(16.1%)	62 (38.5%)
	자체사업	36(23.3%)	
다자녀지원	공통사업	7(4.3%)	33 (20.5%)
	자체사업	26(16.1%)	
합계		161(100%)	

<그림 3-2> 지자체 저출산 시책 현황(빈도) 종합



<그림 3-3> 저출산 시책 예산 배분 현황

(단위: 조원)



자료: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 p.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p.3

###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 1.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화 결과

##### 가. 결혼 지원 시책

- 결혼 지원 시책을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결혼지원시책에는 총 8개의 유형이 존재함. 우선, 일정 소득기준 이하의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 사업이 공통사업에 해당함
  - 자체사업으로는 7개가 존재하는데, 행정편의를 위한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책 모두가 결혼기회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합동결혼식’만 소득기준에 제한을 두고 있음

<표 3-7> 결혼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결혼지원 (8)	공통사업 (1)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비용지원	주거지원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체사업 (7)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결혼기회지원	미혼남녀 만남의 장
				행정편의	건강한 결혼문화 장려 사업
			비용지원	결혼예식장비용 지원	혼인신고 원스톱 서비스
		결혼기회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결혼이민자 지원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비용지원	결혼기회지원	합동결혼식	

## 나. 임신·출산 지원 시책

- 임신·출산 지원 시책을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67개의 임신·출산 지원 시책 중 공통사업은 12개이며, 대부분이 비용지원을 정책목표로 두고 있음
  - 다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및 배부’와 같은 시책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도 정보제공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이 외에도 ‘해산급여’나 ‘긴급복지 해산비’ 등과 같이 소득보전을 목표로 일정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원 시책이 존재함
  - 자체사업에는 나머지 55개 시책이 해당하며, 대다수가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이 중 정보제공, 비용지원, 선물이나 용품지원, 행정편의 등 서비스 공급에 방점을 둔 시책들이 다수임

〈표 3-8〉 임신·출산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출산지원 (67)	공통사업 (12)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출산육아 정보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임신출산 비용절감	임산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일부지자체 전체대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일부지자체 전체대상)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 비용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현금지원	소득보전	임산출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맘스든든 건강부모 교육 프로젝트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출산준비교실						
					베이비 마사지 교실						
	자체사업 (55)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출산육아 정보제공		엄마랑 아기랑 놀이교실					
						엄마튼튼 아가튼튼 사업(교육)					
						임산부(예비맘) 건강교실					
						영유아 임신부 건강교실 운영					
						한방육아 교실					
						임신출산 비용절감					임산부 구강 관리
											가임기 여성 건강검진
											신혼(예비) 부부 건강검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임신부 산전 진료 검사
											고위험 임신부 산전검사비 지원
임산부 말기 검사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결혼이민자 임신부 건강관리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임산부 이송 지원 사업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간호사 방문)	
					산후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영유아 영양제 지원	
					산후우울관리	
				출산축하 선물	출산축하 기념사진 촬영 지원(쿠폰)	
					신생아 작명 서비스	
					임신축하기념품(축하금) 지급	
					출산축하 통장 지원	
				출산용품 지원	모유수유 유축기 대여	
					모유수유시설 설치기관 물품 지원	
					출산육아용품 지원	
				행정편의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정관 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 의료비 지원 사업
						태아 기형아 검사 지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생활비 절감	엄마튼튼 아가튼튼 사업(주차요금할인)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		
				의료비 절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금지원	소득보전	출산양육지원금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공무원 출산장려금		
					임신축하기기념품(축하금) 지급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홍보	임산부 배려	임산부자동차 스티커 발급
						출산 캠페인	임산부 표시 홍보물 배부
							임산부의 날 행사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 비용절감	산후돌봄지원사업 (공통사업 확대)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지원(돌봄도우미파견)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공공산후 조리원 이용료 지원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산후조리비용)		
			현금지원	소득보전	미혼 한부모 추가양육비		
					미혼모 및 미혼모가족 자활 지원 (생활보조비, 직업훈련비)		

다. 육아 지원 시책

- 육아 지원 시책을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68개의 육아지원 시책 중 공통사업은 32개를 차지하며, 약 절반의 시책이 전체대상으로 나타남

- 서비스 공급과 비용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는 소득기준에 제한을 둔 경우에도 양자가 대동소이함
- 36개 자체사업 시책의 주를 이루는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의료비, 보육기관 운영, 보육서비스 이용에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들임
- 특히, 이 중 보육기관 운영지원 시책에는 ‘농어촌 법인어린이집 지원’, ‘0세 아 전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등을 포함한 총 13개 시책이 해당함

<표 3-9> 육아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육아지원 (68)	공통사업 (32)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의료비 절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육기관 운영지원	보육 돌봄 서비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탁)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위탁)
					농촌 보육정보센터 운영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누리과정 지원
					보육료 지원
					만0~5세 급식비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시간차등형(시간제) 보육료 지원
		현금지원	소득보전	가정양육수당 지원	
		일정소득 기준이하	서비스공급	의료비 절감	신생아 난천진단 의료비 지원(청각 선별 검사,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대상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쿠폰발행)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일가정양립 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사업)	
					지역아동센터 지원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신생아 난천진단 의료비 지원(청각 선별 검사)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비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출산육아 용품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일가정양립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비용지원	현금지원	소득보전	자녀 장려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자체사업 (36)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보육기관 운영지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						
농촌 공동 아이돌봄센터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공립 어린이집 설치 지원	
					보육정보센터 (영유아플라자) 운영	
					출산육아 용품지원	장난감 대여센터 운영
					아기사랑나눔센터 운영	
					자녀교육 지원	영유아 및 부모 도서관 운영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아동 치아 불소도포 지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보육기관 운영지원	농어촌 법인이린이집 지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민간가정 보육교직원 교육비 지원		
				0세아 전용 어린이집(보육시설) 지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수수료 지원		
				민간보육시설(어린이집)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 지원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지원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지방세 감면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해당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민간차액보육료 지원(정부미지원어린이집)	
					어린이집 안전 공제 회비 지원	
			현금지원	소득보전	양육지원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 보호 지원	
		일정소득기 준이하대상	서비스공급	자녀교육 지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	
				생활비 절감	권역별 미혼모 부자 거점기관 운영	
			비용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의료비 절감	아토피 및 천식 예방관리 사업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지원	
					법정 저소득층 차액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보육아동 지원(민간어린이집이용)				

#### 라. 다자녀 지원 시책

- 다자녀 지원 시책을 정책 대상, 정책 목표, 정책 수단 기준으로 유형화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다자녀 지원 시책(36개)의 경우 자체사업(25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중 전체를 대상으로 비용이나 서비스, 현금 등을 지원하는 시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이 중에서 임신출산비, 의료비, 보육서비스 이용, 자녀교육, 생활비 등의 비용지원 시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

&lt;표 3-10&gt; 다자녀 지원 시책 유형화 결과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 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다자녀 지원 (36)	공통사업 (11)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주거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
				비용지원	의료비 절감
			자녀교육 지원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생활비 절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3자녀 이상 가구 지역난방요금 정액 지원	
				다자녀 가정 자동차 취득세 감면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감액		
		3자녀 이상 가구 도시가스요금 정액 할인			
		현금지원	소득보전	자녀세액공제	
				입양아 및 장애아 가정 지원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비용지원	주거지원	다자녀 가정 주거안정 지원(우대금리)	
	자체사업 (25)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 비용절감	출산산모 무료골밀도 검사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출산육아 용품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사업
					출산육아용품 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가정 돌보미 지원	
			생활비절감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임산부 초음파 검사비 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한약첨약 지원				

생애 단계별 구분	자체 사업 여부	유형화 기준			저출산 시책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의료비 절감	신생아 병원비 지원	
					가족진료비 지원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다둥이 안심보험 지원	
				보육서비스 이용지원	보육료 지원	
				자녀교육 지원	셋째(중등,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생활비 절감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출산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수도요금 감면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이용 할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발급, 주차요금 감면 차량용 스티커 발급)	
				현금지원	소득보전	통장개설 축하금
						출산장려금(또는 출산축하금)
		자녀양육비 지원				
		일정소득 기준이하 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 비용절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비용지원	임신출산 비용절감	둘째야 이상 병원비 지원 다둥이 가정 산후 건강관리 지원 사업	



## 2.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별 빈도 분석

### 가. 전체 대상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을 각 유형별로 빈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하나의 시책에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중복 코딩되는 경우를 포함하면 유형별 빈도 합계는 총 179개임(실제 사업 개수는 161개)
  -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육아지원 시책이 68개로 가장 많고, 출산지원(67개), 다자녀지원(36개)의 순으로 나타나며 결혼지원(8개)이 가장 빈도가 낮음

<표 3-11>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유형별 빈도 분석

생애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시책 유형별 빈도 (중복)
결혼지원 (8)	공통사업 (1)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비용지원	주거지원	1
	자체사업 (7)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결혼기회지원	2
				행정편의	1
		비용지원	결혼기회지원	3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비용지원	결혼기회지원	1
출산지원 (67)	공통사업 (12)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출산육아정보제공	1
				임신출산비용절감	1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절감	3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비용절감	2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절감	3
			현금지원	소득보전	2
	자체사업 (55)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출산육아정보제공	10
				임신출산비용절감	14
				출산축하선물	4
				출산용품지원	3

생애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시책 유형별 빈도 (중복)	
			비용지원	행정편의	1	
				임신출산비용절감	5	
				생활비절감	2	
				의료비절감	1	
			현금지원	소득보전	4	
				임산부배려	2	
			홍보	출산캠페인	1	
				서비스공급	임신출산비용절감	2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절감	4
				현금지원	소득보전	2
육아지원 (68)	공통사업 (32)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의료비지원	2	
				보육기관운영지원	4	
			비용지원	의료비절감	1	
				보육서비스이용지원	4	
				일가정양립지원	1	
			현금지원	소득보전	1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서비스공급	의료비절감	5	
				보육기관운영지원	2	
				일가정양립지원	1	
			비용지원	의료비절감	6	
				보육서비스이용지원	1	
				출산육아용품지원	1	
	현금지원	일가정양립지원	1			
		소득보전	2			
	자체사업 (36)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보육기관운영지원	5	
				출산육아용품지원	2	
자녀교육지원				1		
비용지원			의료비절감	3		
			보육기관운영지원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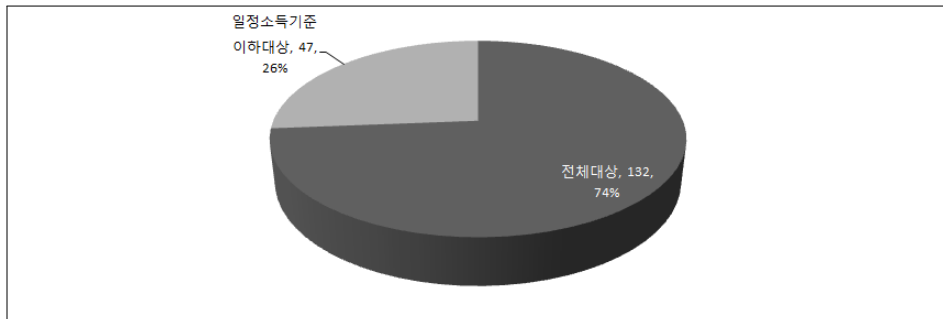
생애단계별 구분	자체사업 여부	정책대상	정책수단	정책목표	시책 유형별 빈도 (중복)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보육서비스이용지원	3		
			현금지원	소득보전	2		
			서비스공급	자녀교육지원	1		
				생활비절감	1		
			비용지원	의료비절감	1		
				보육서비스이용지원	4		
		다자녀지원 (36)	공통사업 (11)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주거지원	1
					비용지원	의료비절감	1
						자녀교육지원	1
						생활비절감	5
현금지원	소득보전			2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비용지원		주거지원	1			
자체사업 (25)	전체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비용절감	2		
				출산육아용품지원	2		
				보육서비스이용지원	1		
				생활비절감	1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절감	3			
			의료비절감	4			
			보육서비스이용지원	1			
			자녀교육지원	1			
			생활비절감	4			
			현금지원	소득보전	3		
일정소득기준 이하대상	서비스공급	임신출산비용절감	1				
	비용지원	임신출산비용절감	2				
합계					179*		

주: ( )은 해당유형 사업개수; \* 중복코딩합계(실제 합계는 161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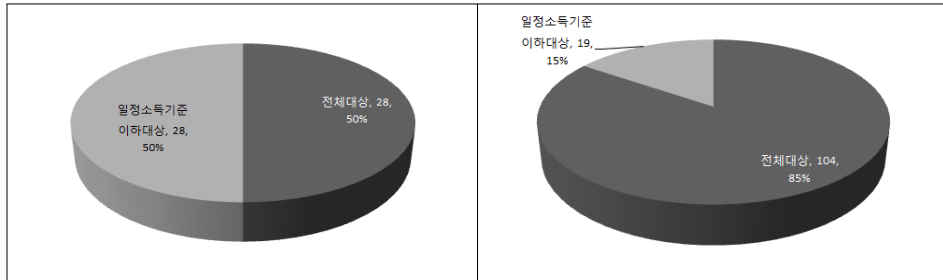
## 나. 정책 대상

- 전체 사업 및 유형별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대상 유형 빈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총 179개 시책 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책은 전체의 74%(132개)를 차지하는 반면, 소득에 제한을 둔 경우는 26%(47개)로 적은 편임
  - 공통사업의 경우 소득제한 여부에 따른 시책의 규모는 동일한 반면, 자체사업에서는 전체대상 시책이 무려 85%(104개)를 차지함
  -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한 네 가지 사업 모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책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결혼지원사업 75%, 출산지원사업 78%, 육아지원사업 62%, 다자녀지원사업 89%)

<그림 3-4> 정책 대상 기준 유형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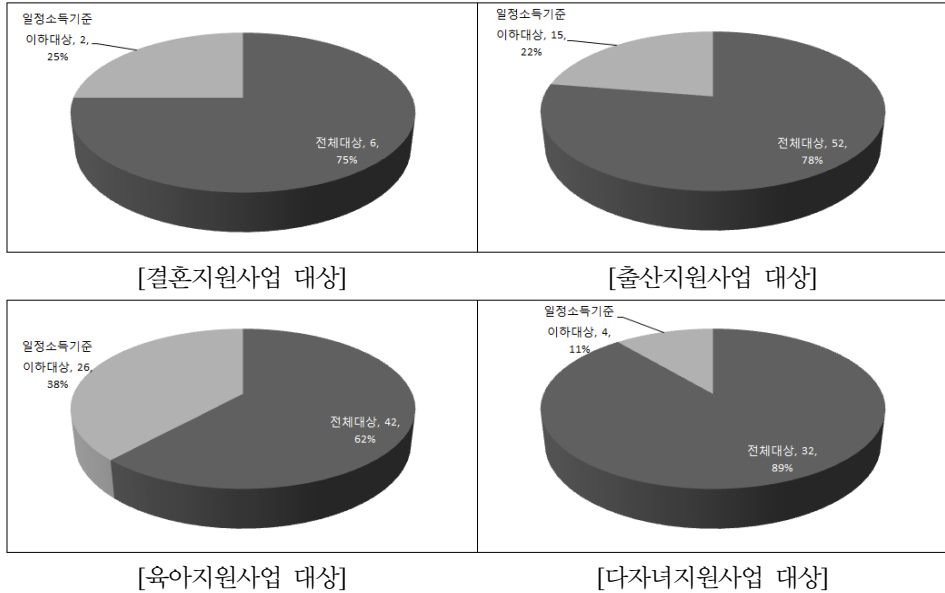


[전체사업 대상]



[공통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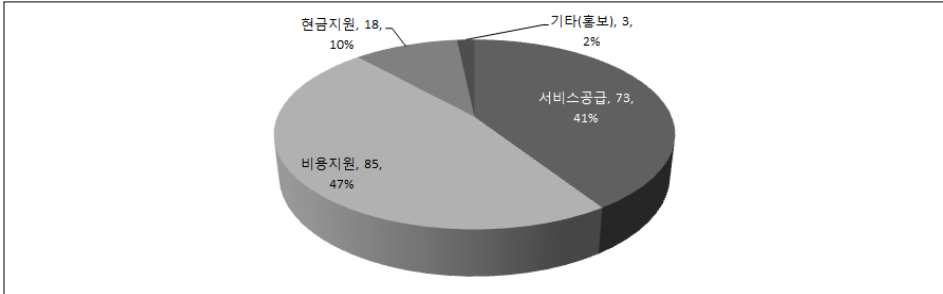
[자체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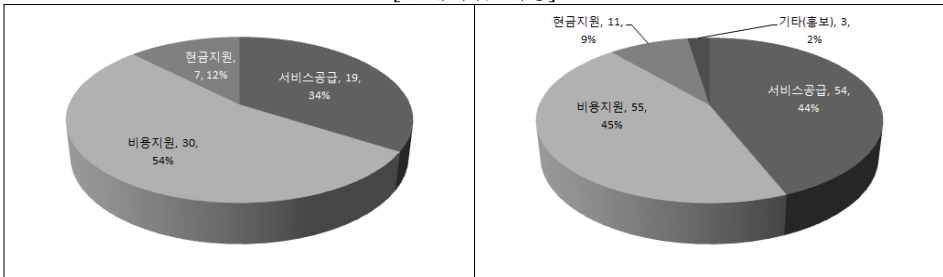
#### 다. 정책 수단

- 전체 사업 및 유형별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수단 유형 빈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체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수단은 비용지원(85건, 47%)이며, 서비스공급이 그 뒤를 잇고 있음(73개, 41%)
  - 그 외에 현금지원(18개, 10%)이나 기타(3건, 2%) 등이 존재함
  - 비용지원은 공통사업과 자체사업 모두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함. 다만, 후자의 경우 서비스공급이 44%(54개)로 나타나, 비용지원과는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생애주기별 분류에서도 비용지원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예를 들어, 결혼지원사업(5개, 63%), 육아지원사업(39개, 57%), 다자녀지원사업(23개, 64%)에서 비용지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반면, 출산지원사업에서는 비용지원이 27%(18건)이고, 서비스공급 방식이 57%(38개)로 나타남

<그림 3-5> 정책 수단 기준 유형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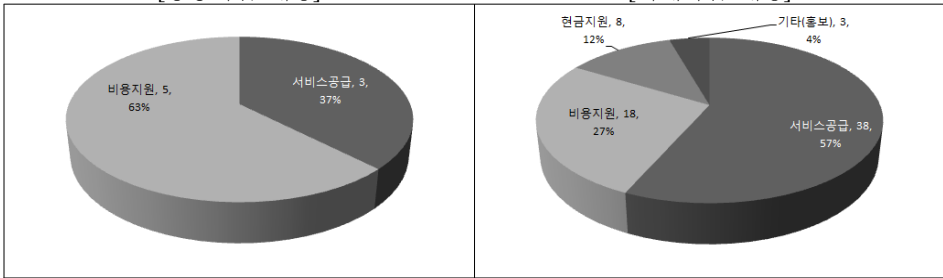


[전체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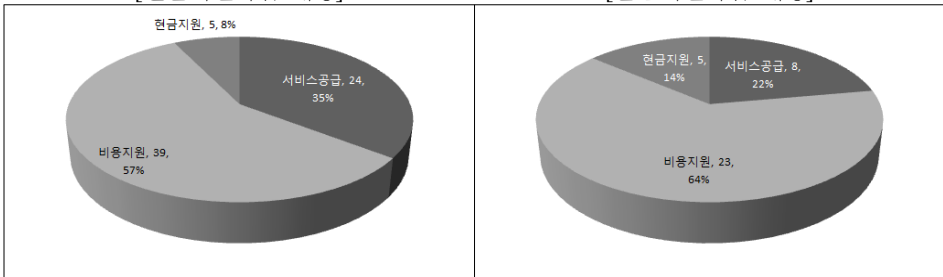
[공통사업 대상]

[자체사업 대상]



[결혼지원사업 대상]

[출산지원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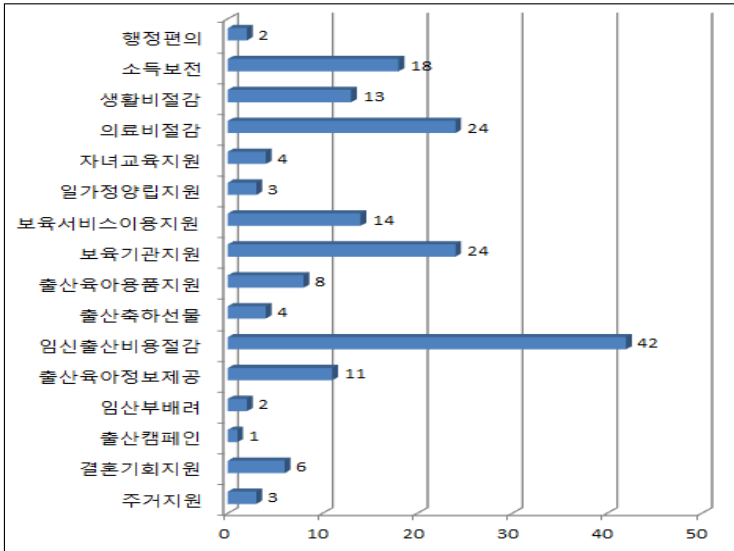
[육아지원사업 대상]

[다자녀지원사업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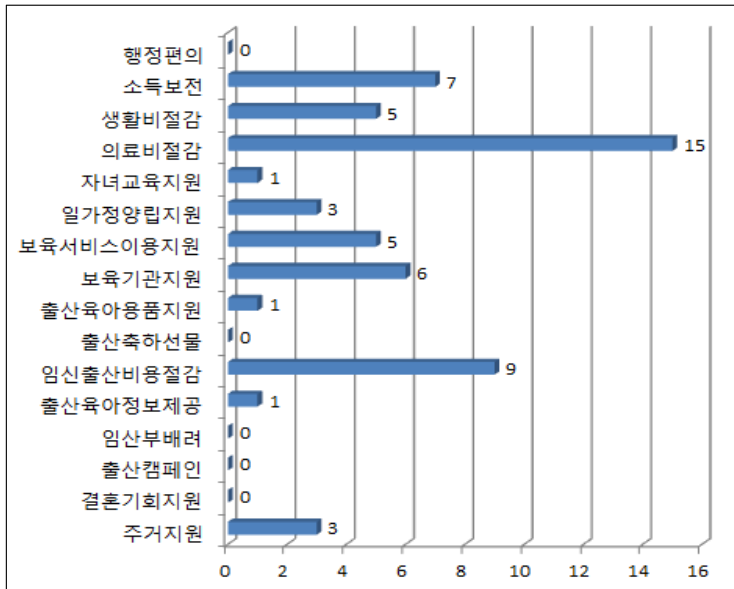
## 라. 정책 목표

- 전체 사업 및 유형별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목표 유형 빈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전체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정책목표는 임신출산비용절감으로 42개(23.4%)로 나타남
  - 의료비절감과 보육기관지원에 해당하는 시책은 각각 24개(13.4%)로 동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득보전(18개, 10.0%), 보육서비스이용지원(14개, 7.8%), 생활비절감(13개, 7.2%), 출산육아정보제공(11개, 6.14%)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공통사업 중에서 의료비절감에 방점을 둔 시책은 15건(26.8%)으로 가장 많고 임신출산비용절감(9개, 16.1%), 소득보전(7개, 12.5%), 보육기관지원(6개, 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자체사업에서는 임신출산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 시책이 33건(26.8%)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 이 외에 보육기관지원(18개, 14.6%), 소득보전(11개, 8.9%), 출산육아정보제공(10개, 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6> 정책 목표 기준 유형별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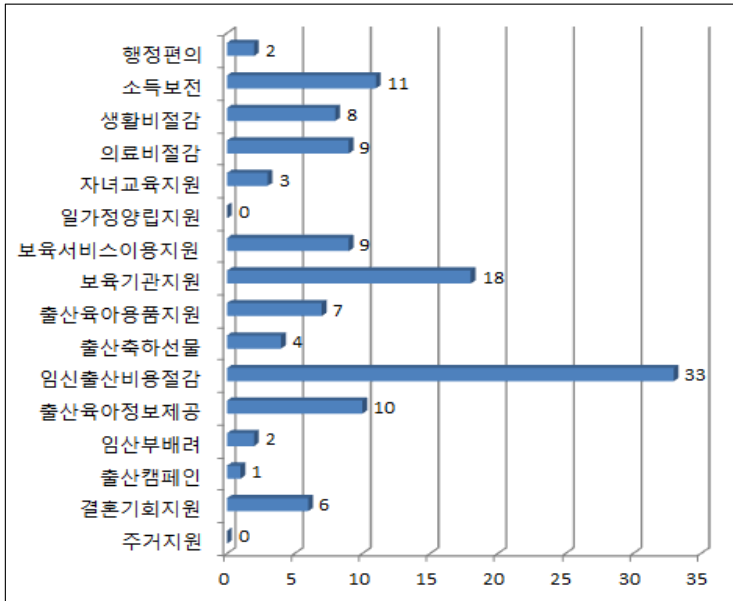


[전체사업 대상]



[공통사업 대상]





[자체사업 대상]

## 제4절 소결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당해시책의 특성을 규정하는 일정한 분류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 저출산 시책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 분류요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자체사업 여부와 생애단계, 정책대상, 정책수단 및 정책목표 등으로 제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자체사업 여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저출산 시책의 공통사업은 인프라구축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은 특화사업에 비중을 두는 차별적 원리가 적용될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은 공통사업과 유사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정책적 차별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생애단계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출산과 관련된 생애단계를 결혼지원, 임신·출산지원, 다자녀 지원 등으로 구분할 경우 현재의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은 출산지원과 보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각 지자체 환경에 부합하면서 출산 동기를 부여하는 고유한 정책이 부족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정책대상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중앙부처가 시행하는 공통사업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선택적 접근을 하고 있음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은 전체계층 또는 전체주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접근을 주로 시도하나 한정적 자원 하에서의 보편적 접근이므로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대부분의 정책이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직접적인 지원정책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으나 대부분은 둘째 또는 셋째 이상 자녀부터 지원하고 있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시책에 대한 정책목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음
  - 임신출산비용절감이나 의료비 절감에 대한 고려가 여전히 가장 많아 이미 출산한 이후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다소 소극적인 측면이 있음
  - 출산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거비 경감이나 일가정양립부담과 같은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미미함

&lt;표 3-12&gt;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시책의 특성

구분	내용
자체사업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사업 유사성</li> <li>- 공동사업과 차별화된 특화적 자체사업 미구현</li> </ul>
생애이행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보육 편중</li> <li>- 출산 이전 출산동기 부여 정책 미흡</li> </ul>
정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편적 접근</li> <li>- 수요 부합성에 기초한 전략적 접근 미비</li> </ul>
정책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적 지원 편중</li> <li>-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경제적 지원 정책 미비</li> </ul>
정책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심요인 고려 미흡</li> <li>- 지원대상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한 적극적 정책 미비</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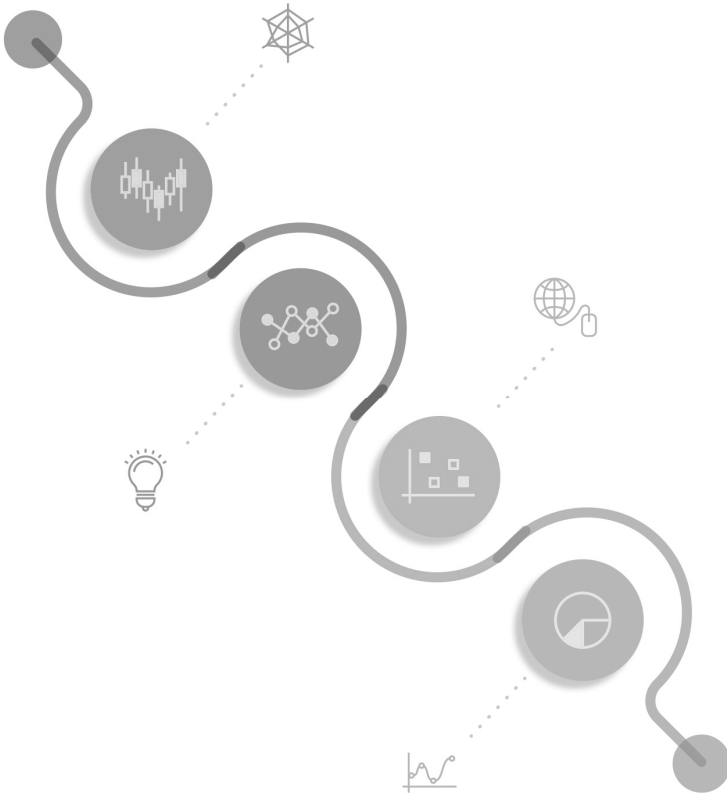
# 제4장 지자체 저출산 환경 유형화 및 요인분석

제1절 분석모형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화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제4절 소결





##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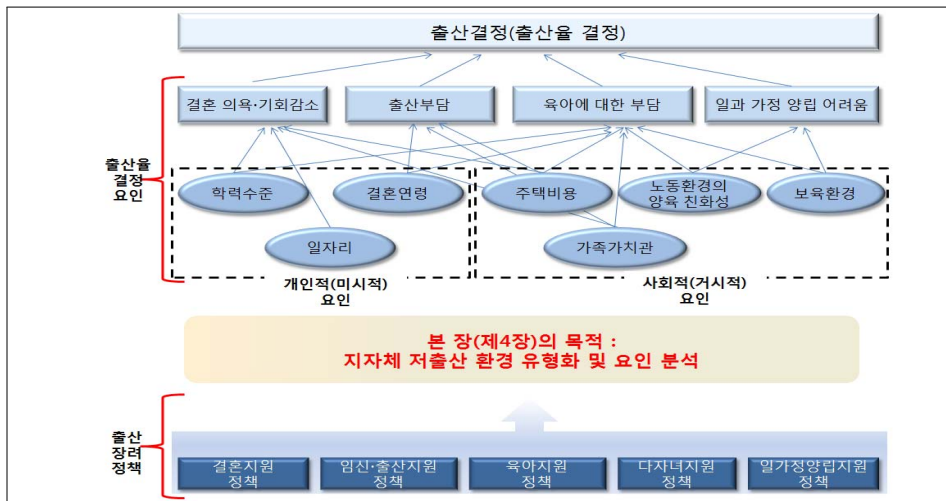
## 지자체 저출산 환경 유형화 및 요인분석

## 제1절 분석모형

## 1. 분석 목적

- 본 장에서는 지자체 저출산 환경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임
- 저출산 현상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맥락에 의해 좌우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개인 수준 이상의 분석 단위에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함
-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와 확산에는 근린효과가 있으므로 지역공동체 단위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정수열, 2013)
- 또한, 그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접근법처럼 개별적 측면이 아닌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장승희, 2014)

〈그림 4-1〉 본 장의 분석 목적



## 2. 분석 대상

- 본 연구는 2011~2015년의 5년 간 우리나라 226개(2015년 기준) 기초지자체를 분석대상으로 삼음
  - 분석단위를 기초지자체로 좁히는 경우, 동일한 정치제도, 문화의 맥락 내에 속하기 때문에 저출산 정책 외 환경적 변수들의 변이가 작다는 장점이 있음
  - 또한, 통계분석에 있어서 관측치를 높임으로써 실증 분석의 적합성을 높이는 데 유용함

## 3. 분석 방법

### 가.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화

#### 1) 지역 유형화(regional typology)의 필요성과 방식

- 지역을 유형화하여 해당 지역의 출산율이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던 원인을 규명한다면 타 지역의 출산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적합함
  - 지자체의 출산율 현황을 아무런 준거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제시하는 경우, 제도설계를 위한 유의미한 함의를 도출하기 쉽지 않음
  - 저출산 정책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율의 패턴을 유형화하고, 해당 유형화에 따른 출산요인의 비교추이를 구분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출산 장려정책 수단을 제시하는 것임
- 여기에서 지역(region)은 어떠한 의도에 따라 사용되는가에 따라 그 정의가 달라짐. 행정학 연구들의 일반적인 지역 유형화 방식은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됨
  - 첫째, 도시지역, 도농복합지역(혹은 중소도시), 농촌지역, 또는 도시와 농촌 지역으로 구분한 접근임. 인구와 삶의 방식, 지역 인프라 차이를 모두 포괄하는 동시에, 직관적으로도 개념적 차이를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가장 널



리 사용됨<sup>5)</sup>

- 둘째, 특정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해당 정책이 도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하는 경우임<sup>6)</sup>
  - 셋째, 지역 내 특성을 포착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취합하여 통계기법에 의해 유사한 군집으로 사후적으로 분류하는 것임<sup>7)</sup>
  - 넷째, 지방정부의 속성에 따른 분류로, 행정구역의 수준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하기도 하며, 기초지방정부를 특정 기준에 따라 유형화하기도 함<sup>8)</sup>
- 각 유형화의 장단점을 고려한 결과, 본 연구는 유형화의 기준을 객관적 통계수치에 근거하는 동시에, 유형화에 따른 차별적 정책지향점을 제시(세 번째와 네 번째 지역 유형화 방식의 결합)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음

## 2) 본 연구의 유형화 기준

-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은 초저출산율 진입값인 1.3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 변화율은 0을 기준으로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지자체를 유형화 함
- 1유형 지역(저출산지역)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초저출산율을 상회하고 있는 지역인 동시에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2유형 지역(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은 현재의 출산율 수준은 초저출산율에 접어들었지만 출산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경험하고 있는 초저출

---

5) 보편성과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류 기준이 자의적인 경우 유형화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존재함

6)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같은 혁신적 제도 도입으로 인한 지방정부의 성과 차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유사·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는 연구들이 여기에 속함

7) 주로 계층적 분류에 의한 상위유형으로 구분한 뒤, 이를 중심으로 군집분석(cluster-analysis)을 통한 계량적 유형화를 거치나, 다만 군집화가 지나치게 지역 내 고유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지방정부의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에 제약이 따름

8) 이때 기준은 연구목적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정되는 경우 많기 때문에 자의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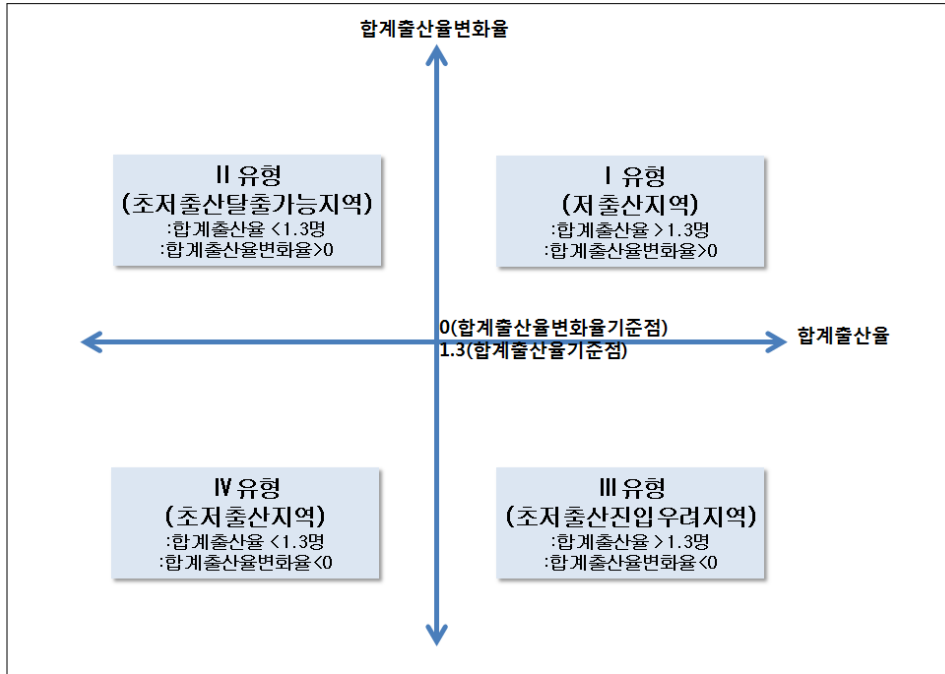
산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임

- 3유형 지역(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은 현재 출산율은 초저출산율을 상회하지만, 출산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추후 저출산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
  - 4유형 지역(초저출산지역)은 현재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에 접어든 동시에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특단의 출산율 제고정책이 요구되는 지역임
-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경우, 현 지자체의 저출산 수준뿐만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예측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에 보다 적합함

<표 4-1> 지역 유형 구분기준 및 인구변화, 특성

유형	기준	인구변화	특성
1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	초저출산율을 상회하며 출산율 증가	저출산지역
2유형	합계출산율은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	초저출산율에 진입했지만 출산율 증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초저출산율을 상회하고 있지만 추후 출산율이 감소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	합계출산율이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	초저출산율에 진입했으며 출산율도 감소	초저출산지역

&lt;그림 4-2&gt; 지역 유형 구분기준



## 나. 저출산 영향 요인의 선정

### 1) 선정 배경

- 저출산 영향요인의 선정을 위해 출산율 영향요인 규명을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국내외 연구들을 분석함
  - 초저출산율 지자체의 주요 분류기준으로 두고 있으므로 초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본격적으로 점화된 2005년 이후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
  - 다만, 연구의 분석수준은 지자체 및 지역단위이기 때문에 개인의 출산여부를 다룬 연구들은 분석에서 제함
- 출산율 결정 요인들을 구분하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인구구조적 특성,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들이 출산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

은 출산력에 대해 미시적(개인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거시적인 지역특성을 결정지음

- 이와 같은 지역 단위의 특성은 기회구조(opportunity-structure)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회구조 속에서 개인들은 그들 자신의 특성에 따라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특수한 생활환경의 제약에 따라서 행동함
- 출산 행동과 관련해서 기회구조는 주로 경제적 기회 또는 제약을 말하기도 하고, 임신 또는 임신과 관련된 실천적 요인 그리고 지역 인구 등과 관련됨

## 2) 인구 구조적 특성: 결혼의욕·기회감소

- 저출산을 야기하는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학자들은 ① 가임여성의 수 감소, ② 여성의 고학력화로 인한 결혼연령의 상승과 그로 인한 출산시기 지연(김승권, 2003, 은기수, 2005), ③ 여성경제활동의 증가(장지연, 2005) 등을 주요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 첫째, 가임여성수의 규모는 한 지역의 출산력을 직접적으로 결정지음
  - 지역 내 출산력을 결정짓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요인은 가임력(fecundity)이라 불리는 지역 내 여성의 신체 상태에 관한 지표임
  - 통계청 인구추계에 의하면 현재의 출산현상 지속 시, 인구는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가 출산연령을 끝낼 때쯤에는 인구가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됨
- 둘째, 평균 초혼연령 증가는 출산력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
  - 초혼 연령 증가는 학력수준 상승과 관련이 높음
  - 높은 학력을 성취하기 위해선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보상을 회수하기 위해 취업을 선택하게 되므로, 이는 결혼시기를 늦추는 원인이 됨

3) 경제적 요인<sup>9)</sup>: 결혼의욕·기회감소, 출산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 첫째, 지역 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은 낮아짐
  - 거시적인 관점에서 국가별 1인당 국내총생산과 조출생률을 분석하면 반비례 관계가 나타나 국가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
  - 우리나라의 1980년에서 2004년의 1인당 국내총생산과 출산력의 추이를 살펴봐도 반비례 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오유진·박성준, 2008)
  - 시계열적으로도 소득 수준이 향상될수록 출산력은 감소함
- 둘째, 높은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정 문제는 출산율을 저하의 원인임
  - 수도권 지역의 합계출산율과 주거소비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과 주거지역 평균 지가가 가장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에서도 미혼남녀의 결혼기피 원인으로 ‘집장만 등 결혼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라는 설문에 87%가 찬성응답을 하고 있음

## 4) 사회문화적 요인: 육아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 양립 어려움

-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보육환경과 지역 내 사회자본 수준을 예로 들 수 있음
  - 보육부담이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적되어옴
  -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근접성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원하는 부모들을 충족시켜 줄 만한 수준의 보육시설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임
  - 2016년 0~5세 아동의 월평균 양육비를 조사했더니 가구당 94만 4천 원으로 소득(월평균 488만 원)의 19.3%에 달함

---

9) 관련 문헌 리스트는 “국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쟁점: 지리학적 접근을 위한 소고”에서 활용

- 양육비 부담으로 가구의 빈곤화가 진행되고 출산 기피가 심화돼 결국은 인구절벽 현상을 초래한 것임
-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들의 사회 경제활동은 증가되었으나, 이에 대한 출산과 육아 문제가 순조롭게 연결되지 못했음
- 그리하여 여성취업이 M자형의 단절곡선을 이루었고 유능한 젊은 여성 인력들이 가정으로 복귀하여 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함

#### 다. 변수의 측정

- 각 지역별 변수에 관한 정보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토교통부 주택실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보하였으며 일부 변수의 경우, 해당 정보를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공함

<표 4-2> 출산을 결정 요인 측정 지표

저출산요인	측정 지표	출처	요인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국가통계포털 KOSIS	결혼의욕·기회감소
	시군구별 평균 초혼연령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GRDP)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재가공	결혼의욕·기회감소 출산부담 육아에 대한 부담
	가구평균 주거비 <sup>10)</sup>	국토교통부 내부 자료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 총계 (가임여성 10만명당)	보육통계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육아에 대한 부담 일과 가정 양립어려움
	국공립 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명당)		

10)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거래의 데이터를 시군구별로 수집하여 이용하였으며, 신혼 부부가 주로 이용하는 소형아파트의 매매, 전월세 등의 평균 거래가를 대상으로 산출하였음

## 제2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화

### 1. 지자체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현황

#### 가. 합계출산율(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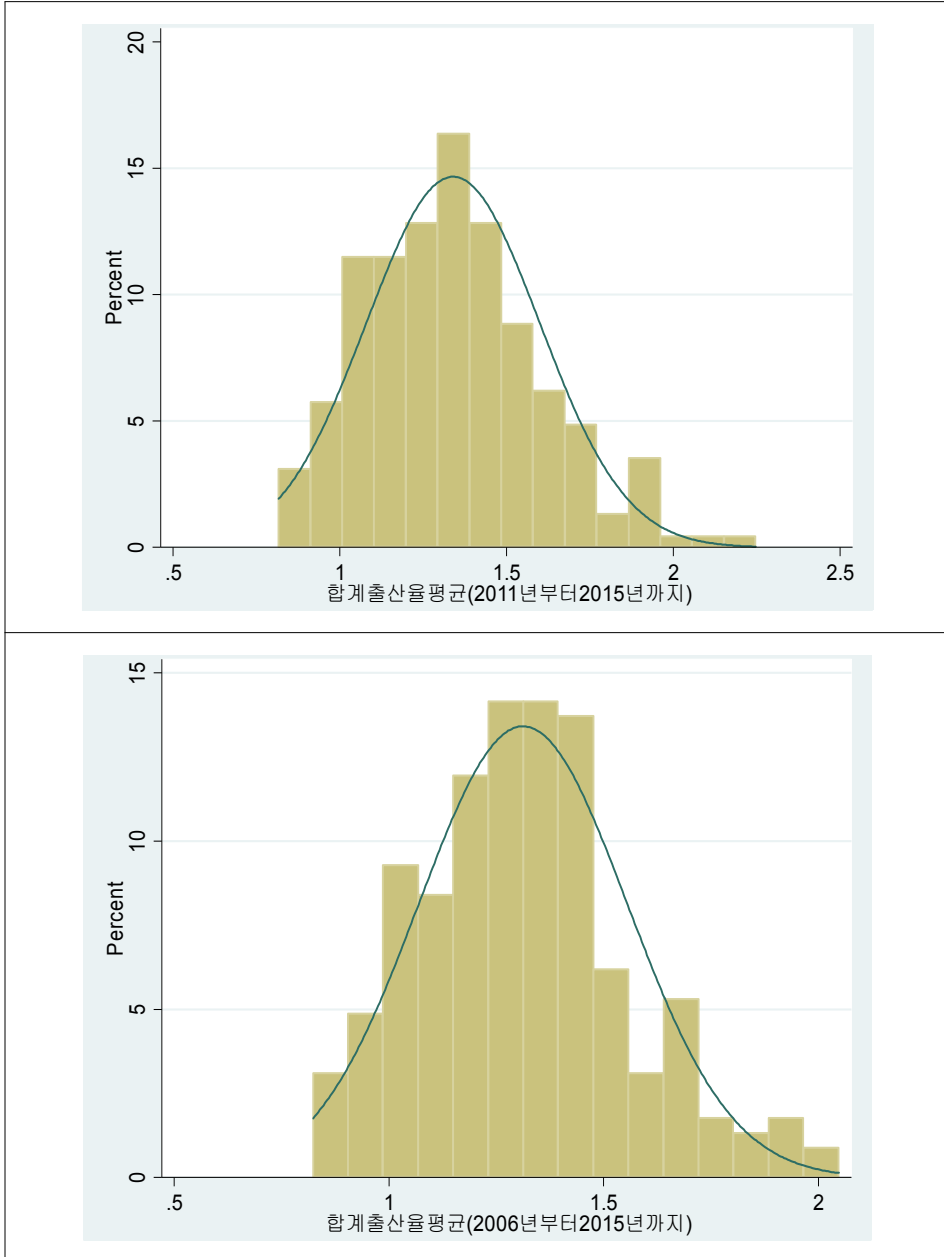
- 합계출산율의 기간별 평균값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340명으로 나타남
  - 한편, 10년('06~'15년) 간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312명으로 위 경우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임
  - 이 외에도 10년 동안의 평균 합계출산율의 중위수, 표준편차가 5년 동안의 수치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4-3> 합계출산율의 기간별 평균값

연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치 평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치 평균
평균	1.340	1.312
중위수	1.322	1.309
표준편차	0.260	0.243
n	226	226

자료: 내고장알리미

<그림 4-3> 합계출산율 평균값의 분포





## 나. 합계출산율 변화율(%)

### ○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연도별 추이

-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증가세는 최근 들어 점차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03년부터 '15년까지 약 3차례의 부침(浮沈)을 경험하였음. 예를 들어 '05년에는 전년 대비 평균 합계출산율이 4.90% 감소하였으나, '06년 4.213% 반등한데 이어 '07년 무려 13.34%나 증가하였음. '08년에 이어 '09년까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12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감
- 주지할 점은 앞선 두 번의 등락과는 달리, 전년 대비 '13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무려 8.52%나 급락하였으나 최근 2개년도의 합계출산율 변화율도 2%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임

<표 4-4>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연도별 추이

연도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평균	-1.36	-4.90	4.213	13.34	-4.73	-2.26	6.614	1.867	4.189	-8.52	2.026	2.145
중위수	-2.25	-6.35	4.228	11.63	-4.96	-3.46	5.935	1.329	4.407	-8.57	1.921	2.053
표준 편차	7.107	7.671	6.427	8.207	5.941	6.208	7.638	7.350	7.694	5.627	6.674	6.998
n	224	224	224	224	224	224	224	225	225	226	226	226

자료: 내고장알리미

### ○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기간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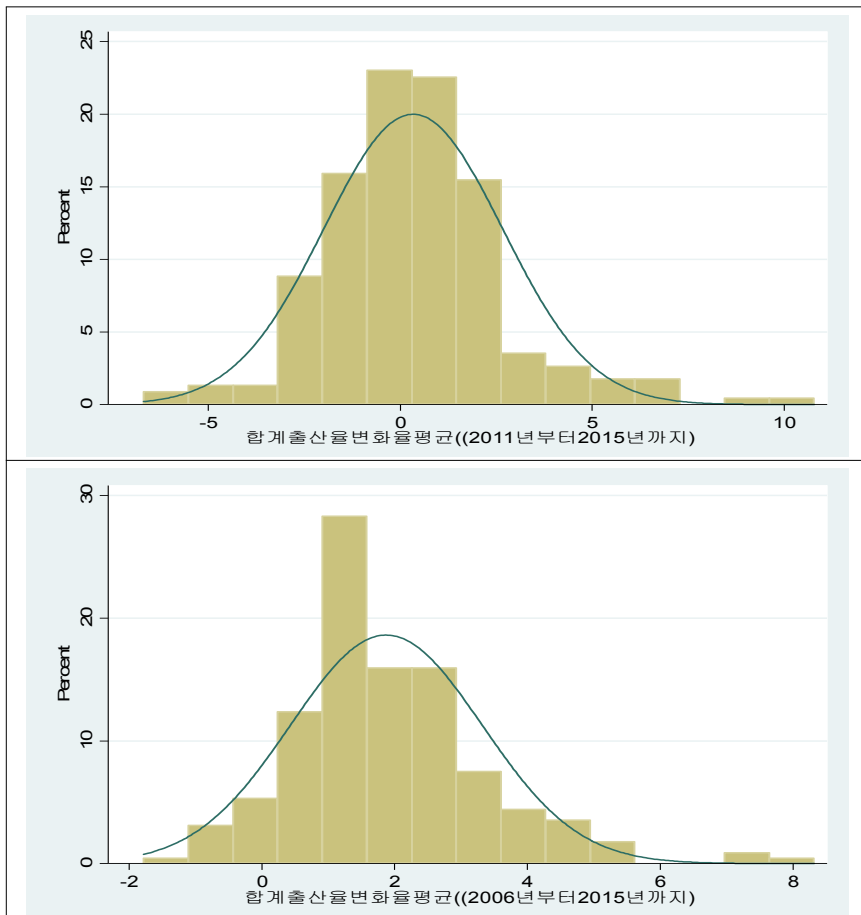
- 최근 5년 동안의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0.3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을 시 226개 기초지방정부의 합계출산율은 평균적으로 1.8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위수 또한 1.592%로 앞선 경우(0.176%)에 비해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최근 들어 합계출산율의 증가세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음

<표 4-5> 합계출산율 변화율의 기간별 평균값

연도	2011-2015년(5년치) 평균	2006-2015년(10년치) 평균
평균	0.336	1.874
중위수	0.176	1.592
표준편차	2.320	1.442
n	226	226

자료: 내고장알리미

<그림 4-4> 합계출산율변화율 평균값의 분포



## 2.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 변화율 기준 유형화

가. 각각 최근 5년치(2011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값 대상 유형 구분 및 해당 지자체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기초지자체 226개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다음의 표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음
- 합계출산율이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는 1유형: 저출산지역
- 합계출산율은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큰 경우는 2유형: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 합계출산율과 1.3보다 크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는 3유형: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 합계출산율과 1.3보다 작고,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0보다 작은 경우는 4유형: 초저출산지역

<표 4-6> 유형별 해당 지자체

구분	지자체
1유형 (71개) :저출산 지역	부산강서구, 인천중구, 인천서구, 대전유성구, 울산남구, 울산동구, 울산북구, 경기평택시, 경기이천시, 경기김포시, 경기광주시, 경기포천시, 경기여주시, 강원동해시, 강원속초시, 강원삼척시, 충북청주시, 충남천안시, 충남서산시, 충남논산시, 충남당진시, 전북군산시, 전북익산시, 전남여수시, 전남순천시, 전남나주시, 경북포항시, 경북김천시, 경북안동시, 경북구미시, 경북영주시, 경북영천시, 경북문경시, 경북경산시, 경남창원시, 경남사천시, 경남김해시, 경남거제시, 경남양산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경기연천군, 강원홍천군, 강원철원군, 강원화천군, 강원양구군, 강원인제군, 강원고성군, 충북보은군, 충북진천군, 충북증평군, 충남태안군, 전남담양군, 전남곡성군, 전남구례군, 전남해남군, 전남함평군, 전남장성군, 전남진도군, 경북군위군, 경북의성군, 경북청송군, 경북영양군, 경북영덕군, 경북고령군, 경북성주군, 경북예천군, 경북울진군, 경남창녕군, 경남산청군

구분	지자체
2유형 (53개) :초저출산 탈출가능 지역	서울성동구, 서울동대문구, 서울중랑구, 서울노원구, 서울마포구, 서울양천구, 서울강서구, 서울금천구, 서울동작구, 부산서구, 부산동구, 부산부산진구, 부산동래구, 부산북구, 부산해운대구, 부산사하구, 부산금정구, 부산연제구, 부산수영구, 부산사상구, 대구중구, 대구동구, 대구서구, 대구남구, 대구북구, 대구수성구, 대구달서구, 인천동구, 인천연수구, 인천남동구, 인천부평구, 광주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대전동구, 대전중구, 대전서구, 울산중구, 경기수원시, 경기고양시, 강원강릉시, 전북전주시, 경북경주시, 경남진주시, 경남밀양시, 충북옥천군, 충북단양군, 충남부여군, 충남홍성군, 경북청도군, 경북울릉군, 경남남해군, 경남하동군
3유형 (51개) :초저출산진입 우려지역	광주광산구, 경기동두천시, 경기오산시, 경기시흥시, 경기군포시, 경기용인시, 경기파주시, 경기안성시, 경기화성시, 경기양주시, 강원태백시, 충북제천시, 충남보령시, 충남아산시, 충남계룡시, 전북정읍시, 전북남원시, 전북김제시, 전남목포시, 전남광양시, 경북상주시, 경남통영시, 인천옹진군, 충북음성군, 충남금산군, 충남서천군, 충남청양군, 전북완주군, 전북진안군, 전북무주군, 전북장수군, 전북임실군, 전북순창군, 전북고창군, 전북부안군, 전남보성군, 전남화순군, 전남장흥군, 전남강진군, 전남영암군, 전남무안군, 전남영광군, 전남완도군, 전남신안군, 경북칠곡군, 경북봉화군, 경남의령군, 경남합안군, 경남고성군, 경남함양군, 경남거창군
4유형 (51개) :초저출산 지역	서울종로구, 서울중구, 서울용산구, 서울광진구,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서울도봉구, 서울은평구, 서울서대문구, 서울구로구, 서울영등포구, 서울관악구, 서울서초구, 서울강남구, 서울송파구, 서울강동구, 부산중구, 부산영도구, 부산남구, 인천남구, 인천계양구, 광주서구, 대전대덕구, 경기성남시, 경기의정부시, 경기안양시, 경기부천시, 경기광명시, 경기안산시, 경기과천시, 경기구리시, 경기남양주시, 경기의왕시, 경기하남시, 강원춘천시, 강원원주시, 충북충주시, 충남공주시, 인천강화군, 경기도가평군, 경기도양평군, 강원횡성군, 강원영월군, 강원평창군, 강원정선군, 강원양양군, 충북영동군, 충북괴산군, 충남예산군, 전남고흥군, 경남합천군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11)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 아니나 본 연구의 유형에 포함시켜 보면, 세종특별자치시는 1유형에 속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3유형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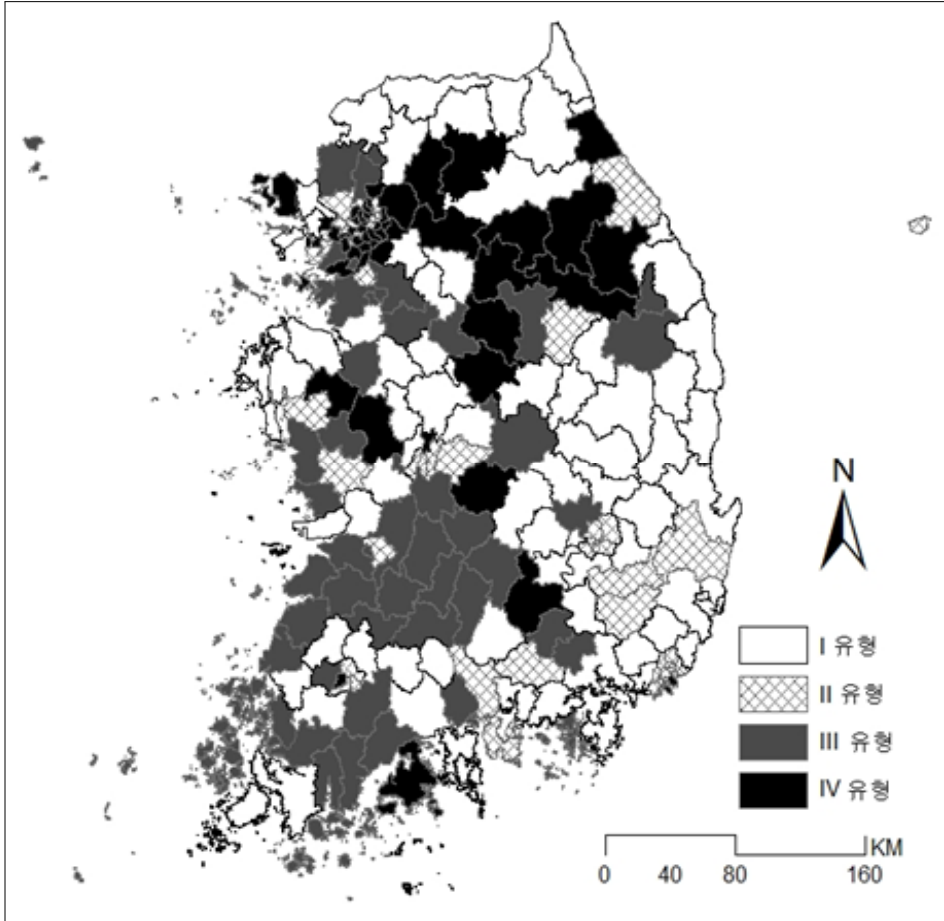
&lt;표 4-7&gt; 유형별 해당 지자체: 시도구분

구분	1유형 (저출산 지역)	2유형 (초저출산 탈출가능지역)	3유형 (초저출산 진입우려지역)	4유형 (초저출산 지역)
	71개	53개	51개	51개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강서구, 기장군	서구, 동구, 부산진구,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중구, 영도구, 남구
대구	달성군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인천	중구, 서구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용진군	남구, 계양구, 강화군
광주		동구, 광주남구, 광주북구	광산구	서구
대전	유성구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울산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중구		
경기	평택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수원시, 고양시	동두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왕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구분	1유형 (저출산 지역)	2유형 (초저출산 탈출가능지역)	3유형 (초저출산 진입우려지역)	4유형 (초저출산 지역)
	71개	53개	51개	51개
강원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릉시	태백시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충북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음성군	충주시, 영동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부여군, 홍성군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목포시, 광양시,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고흥군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주시, 청도군, 울릉군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경남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산청군	진주시, 밀양시,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sup>1)</sup>

&lt;그림 4-5&gt; 유형별 해당 지자체



주: 1유형은 저출산지역; 2유형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은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은 초저출산지역

#### 나. 유형별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현황

##### ○ 유형별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평균

- 1유형에 해당하는 71개 기초지방정부의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1.528명으로 기준치인 1.3명보다는 많은 반면, 2유형에 해당하는 53개 지역의 평균은

- 1.124명으로 이보다는 적음
- 합계출산율의 변화율 또한 1유형이 평균 2.017%p의 증가율을 보여, 평균 1.606%p 증가한 2유형에 비해 높음
- 4유형에 속하는 51개 지역은 합계출산율이 평균 1.118명으로 비교적 낮은 편인 반면, 3유형에 해당하는 51개 지역은 해당 수치가 1.523명으로 높은 편임
- 다만 3유형은 합계출산율의 평균 변화율이 -1.820%p로 나타나, 평균적으로 1.166%p 감소한 4유형에 비해 초저출산 현상이 불거질 우려가 있음을 암시함

<표 4-8> 유형별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평균

유형		1유형 :저출산 지역	2유형 :초저출산 탈출가능지역	3유형 :초저출산 진입우려지역	4유형 :초저출산 지역
합계 출산율 (명)	평균	1.528	1.124	1.523	1.118
	중위수	1.474	1.152	1.461	1.148
	표준편차	0.186	0.119	0.198	0.129
합계 출산율 변화율 (%)	평균	2.017	1.606	-1.820	-1.166
	중위수	1.577	1.216	-1.553	-1.036
	표준편차	2.010	1.592	1.495	0.970
n		71	53	51	51

주: 합계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변화율 평균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평균

○ 유형별 인구구조지표 변화 추이

- 1유형의 연도별 합계출산율 평균은 최저 1.475명('13년)에서 최고 1.587명('12년)에 이르고 있음
- 합계출산율은 '13년에 접어들면서 전년 대비 6.958%p 감소하였으나, 이후 점차 상승하고 있음
- 해마다 약 1%p에 수렴하는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인구소멸지수가 점점 작아진다는 점(작을수록 위험)에서 인구쇠퇴를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유형의 경우 연도별 합계출산율이 평균 1.3명에 미치지 못하며, 가장 낮은 경우는 1.072명('13년)임
- 이 지역들 역시 1유형과 마찬가지로 '13년에 들어 합계출산율이 무려 평균 8.327%p나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세를 보임
- 다만 해마다 전반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지수의 크기는 앞선 유형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인구쇠퇴의 진행 속도는 훨씬 빠름
- 3유형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최소 1.448명에서 최대 1.626명으로 나타나,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다만 합계출산율은 격년마다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다, '13년에는 이 수치가 무려 10.068%p나 감소하였음
- 특히 연도별 인구소멸지수의 평균치가 타 유형에 비해 상당히 낮은데다, 해당 수치가 인구소멸 위험 기준을 나타내는 0.5 수준에 근접해가고 있음
- 4유형의 연도별 합계출산율의 평균은 대개 앞선 2유형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나 5년간의 합계출산율은 평균 1.166%p 감소한데다, 인구증가율 또한 전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함
- 특히, 인구소멸지수의 경우 나머지 유형에 비해 그 감소세가 가장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9> 유형별 인구구조지표 변화 추이

구분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 평균
1유형	합계 출산율(명)	1.489	1.587	1.475	1.515	1.568	1.527
	합계출산율 변화율(%)	4.040	6.580	-6.958	2.861	3.676	2.021
	인구 증가율(%)	0.831	0.683	1.219	1.124	1.080	0.990
	인구 소멸지수	0.942	0.900	0.857	0.825	0.790	0.863

구분	지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5년 평균
2유형	합계 출산율(명)	1.120	1.170	1.072	1.102	1.158	1.124
	합계출산율 변화율(%)	3.412	4.664	-8.327	2.913	5.366	1.606
	인구 증가율(%)	-0.107	-0.544	-0.338	-0.069	-0.205	-0.253
	인구 소멸지수	1.260	1.177	1.094	1.022	0.964	1.104
3유형	합계 출산율(명)	1.612	1.626	1.459	1.472	1.448	1.523
	합계출산율 변화율(%)	-0.117	1.224	-10.068	1.285	-1.422	-1.820
	인구 증가율(%)	0.472	-0.091	0.286	0.347	0.294	0.261
	인구 소멸지수	0.826	0.781	0.736	0.696	0.663	0.740
4유형	합계 출산율(명)	1.155	1.191	1.078	1.081	1.082	1.118
	합계출산율 변화율(%)	-0.738	3.381	-9.390	0.682	0.236	-1.166
	인구 증가율(%)	-0.030	-0.436	-0.286	-0.322	-0.276	-0.270
	인구 소멸지수	1.292	1.206	1.124	1.050	0.990	1.132

주: 1유형은 저출산지역; 2유형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은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은 초저출산지역

### 제3절 지자체 저출산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 1.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 가. 1유형(저출산지역)

○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sup>12)</sup>

- 가임여성 수는 다소 적으나 초혼연령은 평균에 비해 낮게 나타남<sup>13)</sup>
- 그러나 경제적 요인 중, 주거비 부담이 크지 않은 지역으로 사료됨
- 보육시설은 오히려 평균에 비해 적게 설치되어 있는데, 총량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시설도 평균에 비해 적게 설치됨

<표 4-10>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1유형			전유형 평균
		평균	최대	최소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41,888	293,553	2,506	56,678
	초혼연령	29.15	30.93	27.42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284,181	25,300,000	155,573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9	74	13	36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161.49	1094.00	4.00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6.82	35.00	0.00	10.29

12) 각 유형 내에서 시군구별 요인 분석 결과는 부록 <표 A-2>에서 <표 A-5> 참고

13) 인구대비 가임여성 비율 값은 부록 <표 A-2>에서 <표 A-5> 참고

나. 2유형(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임여성 수가 평균에 비해 많으나 초혼연령이 높음 편임
  - 전유형 평균에 비해 평균 주거비가 다소 높은 편인데, 가구 1인당 평균 가구비 지출금액이 평균에 비해 6만 원 가량 높은 수준임
  - 보육시설의 수가 많음.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의 평균보다 많이 설치되어 보육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표 4-11>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2유형			전유형 평균
		평균	최대	최소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81,238	330,441	1,750	56,678
	초혼연령	29.85	31.07	28.19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880,524	18,100,000	151,033	4,753,332
	월평균 주거비	42	99	15	36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233.31	1311.00	2.00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12.76	61.00	0.00	10.29

다. 3유형(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임여성 수가 평균에 비해 적은 편이나 초혼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편임
  - 경제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낮으며 주거비도 적음
  - 보육시설의 전체적인 설치수준도 평균에 미치지 못함

&lt;표 4-12&gt;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3유형			전유형 평균
		평균	최대	최소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31,201	261,755	3,127	56,678
	초혼연령	29.09	31.16	27.49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3,369,080	23,200,000	280,873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7	62	7	36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132.85	1166.00	5.00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6.33	31.00	0.00	10.29

#### 라. 4유형(초저출산지역)

○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임여성 수는 평균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나 초혼 연령의 평균도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총생산도 평균보다 높아 지역 내 경제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시에 주거비가 높음
- 보육시설의 총계는 평균보다 많아 보육환경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그러나 주거비의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지역 전체의 출산율이 낮으며, 향후 낮을 것으로 예상됨<sup>14)</sup>

14) 보육시설 구축으로 인한 출산의 긍정적 효과를 주거비가 상승함으로써 지역 내 출산율을 낮추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4-13>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4유형			전유형 평균
		평균	최대	최소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77,221	277,538	4,624	56,678
	초혼연령	29.88	31.62	27.66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6,605,837	39,900,000	560,300	4,753,332
	월평균 주거비	48	154	12	36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217.44	777.00	10.00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16.49	57.00	1.00	10.29

마. 유형별 비교

○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종합

- 앞의 표에서 유형별 평균값만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4-14> 유형별 저출산 요인 분석 종합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1유형 평균	2유형 평균	3유형 평균	4유형 평균	전유형 평균
인구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41,888	81,238	31,201	77,221	56,678
	초혼연령	29.15	29.85	29.09	29.88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284,181	4,880,524	3,369,080	6,605,837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9	45	27	54	38
사회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 명당)	161.49	233.31	132.85	217.44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 명당)	6.82	12.76	6.33	16.49	10.29

주: 1유형은 저출산지역; 2유형은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은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은 초저출산지역

## 2. 정책환경 유형별 저출산 시책 분석

- 각 유형에서 대표 지자체를 선정하여 저출산 시책 패키지를 비교 분석하고 자 함
  -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변화율 지표의 평균값과 가장 가까운 지자체를 대표 지자체로 선정함
  - 1유형에서는 경북 문경시, 2·3·4유형에서는 각각 대전 서구, 경기 의정부시, 전북 남원시가 선정되었음
- 각 유형별 대표 지자체의 정책 패키지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전체 저출산 정책 패키지 특성과 유사하며, 각 유형별로도 차별점이 그리 크지 않음
  - 전체 패키지 특성과 마찬가지로 임신출산지원 및 육아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각 내용도 지역적 차별성이 부각되고 있지 않음

<표 4-15> 유형별 저출산 시책 분석

구분	대표 지자체	저출산 시책	
1유형 :저출산 지역	경북 문경시	임신출산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임산부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부검사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신규)
			영유아영양제지원
			영양플러스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임부 검사 지원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구분	대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육아지원	출산축하선물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교육비)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보육 돌봄 서비스(어린이집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아이 돌봄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도비]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다자녀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건강보험료지원(셋째아부터)			
2유형 :초저출산 탈출가능 지역	대전 서구	결혼지원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프로그램
		임신출산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엄마 튼튼, 아가 튼튼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신혼부부(예비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건강검진(산전관리) 서비스
			임산부 출산 준비교실 운영
			공영주차장 이용 임산부 주차요금 할인
			임산부 우대사업 소개책자 제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구분	대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육아지원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시비)
			시간차등형 보육료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국비)
			어린이집 지원(구비)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교육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바우처)
			어린이집 지원(시비)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누리과정 보육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사업
			영유아 건강검진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사업
			복스타트
		베이비시터 및 산모돌보미 양성과정 운영	
		출산장려금 지원(둘째아 이상)	
		둘째아 이상 출산 축하 기프트카드 지급	
		셋째아 보육료	
		셋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지원	
		한 자녀 더 갖기 가족기능 강화 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3유형 :초저출산	전북 남원시	임신출산지원	예비부부 및 임신부 선전검사

구분	대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진입우려 지역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등 영유아 의료비 지원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임산부 철분제 지원
			전동유축기 대여
			모유수유 클리닉
			기형아 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엽산제 지원
			한방난임시술비지원
		육아지원	유아학비 지원(만 3~5세 교육비)
			영유아보호용 차량보조시트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 무상보육료 전액 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의료비 지원			
다자녀지원	영유아건강검진		
4유형 :초저출산 지역	경기 의정부시	임신출산지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작 배부 서비스
			임산부 건강검진(산전관리) 서비스

구분	대표 지자체	저출산 시책		
			임산부 출산준비교실 운영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 및 풍진 검사 지원	
			임산부 철분제 지원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영양 플러스 사업	
			예비부부 및 신혼부부 건강검진 서비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육아지원	경기육아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료 지원(바우처)	
			다문화보육료지원	
			장애아보육료 지원	
			평가인증 참여시설 교사 수당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시간 연장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만 0~5세 보육료 지원 사업	
			법정 저소득층 아동 차액 보육료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	
			가정 보육교사 제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	
			어린이집 지원	
			다자녀지원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
				출산장려 지원사업(출산장려금, 키움수당)

## 제4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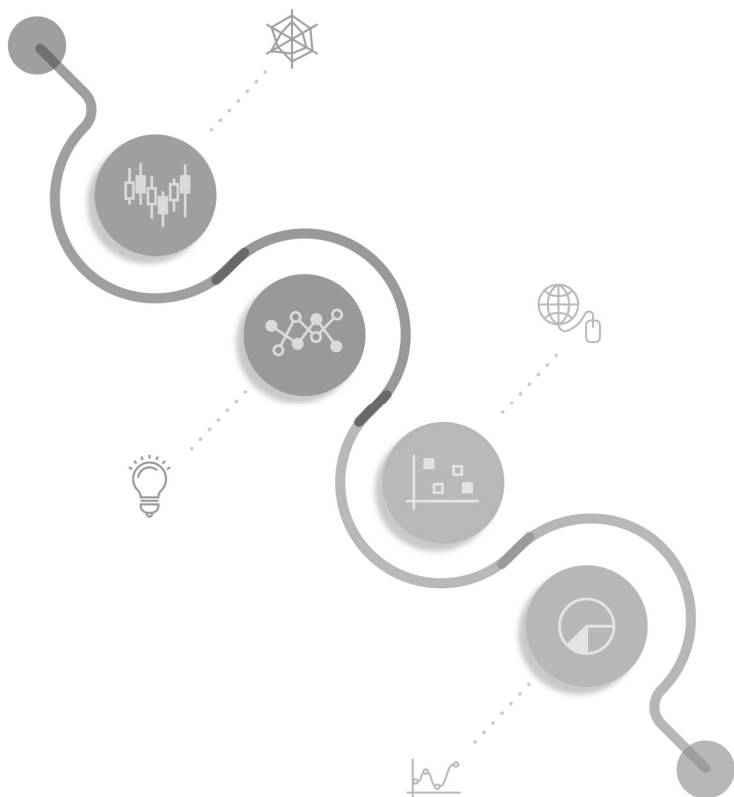
- 각 유형별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은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형 구분에 따른 요인별 지표들의 값은 유형별로 차이가 있음
  - 이러한 요인들은 저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저출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각 지자체별로 이러한 요인들이 다르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반면, 이들 유형별로 시행되고 있는 저출산 정책의 패키지는 차별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중앙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통사업과 차별성이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각 지역의 특성에 특화된 고유한 정책의 개발은 여전히 미진한 상황임
- 이는 각 지자체에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독자적으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 하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에 집중해야 함
  - 자원의 한계뿐만 아니라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개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장기적 관점에서 권한 이양하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해야 함이 자명함

# 제5장 지자체 저출산 시책 실효성 제고방안

제1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제2절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제3절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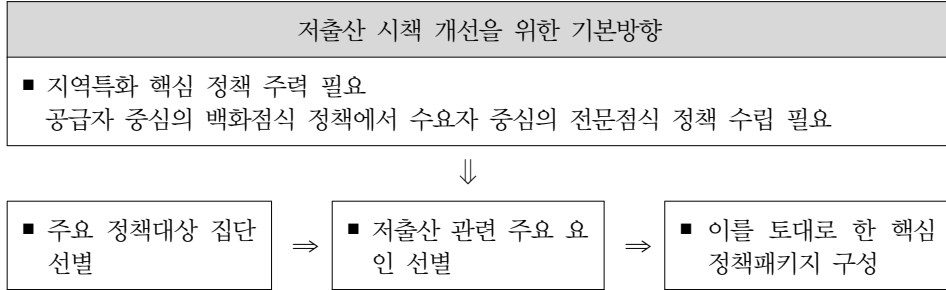
## 제 5 장

## 지자체 저출산 시책 실효성 제고방안

## 제1절 지자체 저출산 시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저출산 환경을 고려한 지역특화 핵심 정책에 주력해야 함
  - 1·2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저출산 시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의 시책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이는 공급자 중심의 ‘백화점식’ 정책에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점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함
- 앞 장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주요 정책대상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저출산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이는 선택과 집중을 위한 우선순위의 의미일 뿐 여타의 정책 대상이나 정책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
-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동기 부여’를 위하여 ‘정책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정책 설계자’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함
  - 공공재의 배분의 주체가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기초 지자체의 저출산 시책 방안 설계에 제약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 즉, 궁극적으로는 지자체가 스스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의 확대가 필요할 것임

<표 5-1> 지자체 저출산 시책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 제2절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은 앞에서 분석한 저출산 환경 관련 주요 요인을 바탕으로 주요 정책 대상과 정책 방향을 제시함
  - 지역에 따라 결혼 준비기와 출산 준비기에 속한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출산을 회피하는 요인들이 보육환경 문제인지, 일가정양립의 문제인지를 파악하여 관련 핵심 요인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 아래에서 제시하는 바는 각 유형별로 ‘예시적’인 정책 설계 방향일 뿐, 각 유형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는 의미는 아님
  - 각 유형 안에서도 지자체별로 주요 정책 대상과 관련 주요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지가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를 해야 할 것임
- 1유형에서는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자녀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1유형에서는 평균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고(1.53명) 합계출산율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상승하였음(2.02% 상승)
  - 가임여성수가 적은 편임(41,888명)에도 불구하고 초혼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나타나는 것(29.15세)으로 보아 결혼으로의 이행과 출산으로의 이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다자녀 출산과 양육을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평균 주거비 수준이 낮은 편(월평균 29만원)이나 지역총생산 수준이 낮아 (4,880,524만원)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지원에 집중할 수 있음
- 특히, 기혼여성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공교육 확대를 통한 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하며 또한, 보육시설총계, 국공립어린이집 개수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인프라 확대를 추진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 파리의 ‘에콜 롱그헤 파리(Ecole Longues Paris)’ 시설 운영 사례, 스웨덴의 ‘아기 친화적인 공공장소 조성’ 사례,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 청주시 ‘Active Children,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sup>15)</sup>
- 파리는 교육적 측면과 유아 지원을 위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도서관과 실내놀이공간이 한 건물에 위치하여 이동 편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각 나이 대(3세~5세)에 따라 다양한 교육 제공
- 스웨덴은 아이를 양육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장소와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도시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둬. 예를 들어, 스웨덴 일부 도시에서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부모와 자녀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버스 중간의 대형 문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지불하느라 유모차를 뒤에 방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배려한 것임<sup>16)</sup>
- 천안시 직장맘지원센터에서는 일·가정 양립사업의 일환으로 직장맘 고충상담 고문노무사를 위촉 운영, 기업체 방문을 통한 직장맘, 대다 인식변화 교육, 직장맘 서포터즈 활용한 자녀학습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청주시는 ‘Active Children,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 프로젝트를 통해 전문가와 함께 1:1 부모멘토링 ‘내 짝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지 사가지대에

15) 프랑스 정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annuaire/75-paris/paris-13e/etab/ecole-maternelle-publique-longues-raies.html>

16) 스웨덴 연구소(Swedish Institute) 홈페이지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있는 0~6세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2유형에서는 결혼준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결혼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2유형의 합계출산율은 5년 평균 1.12명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최근 5년간 다소 상승하였음
  - 가임여성수가 많은(81,238명)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초혼연령이 높은 편(29.85세)이어서 결혼으로의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결혼준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결혼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주거비가 평균에 비해 높은 편(월평균 45만원)이나 3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역총생산은 3유형에 비해 낮아(4,880,524만원) 경제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과 청년취업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에 주력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서는 프랑스 가족주택수당·이사특별수당과 대구중구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출생했거나 출생 예정인 아이들이 있는 경우 혹은 40세 이전에 결혼을 한 5년 미만의 기혼자에게 가족주택수당을 제공하며 가족 수가 늘어나서 이사를 하게 되는 3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이사 실비를 지급함<sup>17)18)</sup>
  - 또한 대구중구의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는 청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창업활동부를 지원하고 컨설팅하는 사업임

17)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132>

18) 프랑스 가족수당 공단 ([www.caf.fr](http://www.caf.fr))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connaitre-vos-droits-selon-votre-situation/vous-louez-ou-vous-achetez-un-logement/vous-demenagez>

- 3유형에서는 결혼 이후 출산 이전의 출산준비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3유형에서는 합계출산율이 2011년에는 가장 높은 지역(1.61명)이었으나 최근 5년간 가장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2015년 현재 1.45명, 5년 평균 1.82%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음
- 가임여성수가 적은 편이나(31,201명) 초혼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고(29.09세) 평균 합계출산율도 1유형을 제외하고는 높은 편으로 나타나 결혼으로의 이행이 다른 유형에 비해 쉽게 이루어지는데 비해 출산으로의 이행이 더디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이 유형에 해당하는 지역의 출산 장려를 위해서는 결혼 이후 출산 이전의 출산준비기에 있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임신·출산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월평균 주거비 수준(27만원)과 지역총생산(3,369,080만원)이 다른 유형과 비교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주거비 수준이 낮아 결혼으로의 이행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낮은 연령에서 이루어졌으나 취업 기회와 소득 수준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양육 비용을 대폭 낮춰줄 수 있음
- 특히 보육시설 인프라 수준(132.9개소)이 가장 열악하여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대와 양육 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아동수당, 호주 빅토리아주가 운영하는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프로그램과 함평군의 ‘출산5터다지기’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영국에서는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이나 대학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16세 이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 아동수당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할 수 있음<sup>19)20)</sup>

- 또한 호주 빅토리아주가 운영하는 ‘건강한 산모, 건강한 아기’ 프로그램<sup>21)</sup>에서는 의료서비스에 산모가 접근하기 힘든 지역을 주 대상으로 산모에게 먼저 접근하여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러한 서비스는 출생 후 최대 4~6주까지 제공됨
- 함평군은 ‘출산 5터 다지기’ 사업을 통해 지역내 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일 자리를 창출하는 ‘일터’ 제공, LH행복마을 임대주택 조성하는 ‘집터’ 제공, 거점고, 통합중 조성 등 ‘키움터’ 제공, 임신출산교실 등 ‘분위기터’ 제공, 양육지원금 등 ‘지원터’를 제공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있음
- 4유형에서는 결혼준비기와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할 수 있음. 결혼준비기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결혼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정책을 특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 4유형에서는 5년 평균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고(1.12명)합계출산율도 최근 5년간 하락 추세임(연평균 1.17% 하락)
- 초혼연령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은 편이고(29.88세) 가임여성수가 비교적 많은(77,221명) 인구구조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보아 결혼으로의 이행이 가장 더딘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결혼준비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결혼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임신출산정책을 특화하는 방향-예를 들어,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고, 출산이후 양육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육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음

19)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overview>

20) 우리나라 전북 완주군·순창군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21)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2.health.vic.gov.au/primary-and-community-health/community-health/population-groups/children-youth-and-families/healthy-mothers-healthy-babies>

- 특히, 주거비(월평균 54만원)가 타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비 지원에 주력해야 함
- 또한, 이 지역은 경제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 일가정양립을 위한 시책-예를 들어, 직장보육시설 확충-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일본 후쿠이현 사례, 부천시 ‘엄마손 프로젝트’, 과천시 ‘마을돌봄나눔터’ 사례, 횡성군의 ‘요람에서 학교까지’ 정책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음
- 일본 후쿠이현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결혼 장려를 위하여 “지역중매쟁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복지협의회에 소속한 지역중매쟁이 200명이 현 내 12개 지구에서 정례상담과 미혼남녀 만남의 기회를 창출하는 일을 하고 있음<sup>22)</sup>
- 뿐만 아니라 일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가 병치료 중인 경우에도 일을 쉴 수 없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아이를 맡아주는 ‘환아 데이케어’를 제공하고 있음<sup>23)</sup>
- 부천시에서도 ‘엄마손 프로젝트’를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sup>24)</sup>
- 또한 과천시의 돌봄공동체 ‘마을돌봄나눔터’는 과천의 마을, 아파트 단위 유희 및 공용공간에 조성한 초등 방과 후 돌봄터로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절실한 아동을 마을 공동체에서 케어하는 사업임
- 횡성군은 ‘셋째아는 요람에서 학교까지 횡성이 책임진다’는 기조로 다자녀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보건소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과 주민복지지원과의 셋째아 이상 자녀 학습비 지원 사업을 통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음

22) 후쿠이 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fukui.jp/doc/joseikatuyaku/marriage/kekconsoudan.html>

23) 후쿠이 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fukui.lg.jp/doc/kodomo/byouji/byouji.html>

24) 가사관리사가 주 1회 4시간 가정 방문하며, 맞벌이와 한부모 워킹맘 가정을 대상으로 함(저소득층 우선 선발)

&lt;표 5-2&gt; 지자체 유형별 저출산 시책 개선방안 (예시)

구분	주요 정책대상	정책강화 분야	관련 정책사례
1유형 :저출산지역	출산이후 양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자녀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비 절감</li> <li>- 공교육활성화를 통한 교육비 절감</li> </ul> </li> <li>■ 출산·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공립어린이집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콜 룡그헤 파리 운영</li> </ul> </li> <li>■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기 친화적인 공공장소 조성</li> </ul> </li> <li>■ 천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장맘지원센터</li> </ul> </li> <li>■ 청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ctive Children,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li> </ul> </li> </ul>
2유형 :초저출산탈출 가능 지역	결혼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 지원</li> <li>- 청년취업 지원</li> <li>- 만남기회제공</li> </ul> </li> <li>■ 임신·출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지원강화</li> <li>- 고위험산모 산전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택수당</li> <li>- 이사특별수당</li> </ul> </li> <li>■ 대구중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청년창업 프로젝트</li> </ul> </li> </ul>
3유형 :초저출산진입 우려 지역	출산 준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양육 전반 소득보전</li> <li>- 보육시설인프라 확충</li> <li>- 국공립어린이집확대</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수당</li> </ul> </li> <li>■ 함평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산5터다지기’</li> </ul> </li> </ul>
4유형 :초저출산지역	결혼 준비기 · 출산이후 양육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혼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거비경감</li> <li>- 만남기회제공</li> </ul> </li> <li>■ 임신·출산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임부부지원강화</li> <li>- 고위험산모 산전관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주택수당</li> <li>- 이사특별수당</li> </ul> </li> <li>■ 일본 후쿠이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중매쟁이 프로그램</li> <li>- 환아테이커어 제공</li> </ul> </li> </ul>

구분	주요 정책대상	정책강화 분야	관련 정책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지원정책</li> <li>- 일가정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엄마손 프로젝트’</li> </ul> </li> <li>■ 과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돌봄나눔터’</li> </ul> </li> <li>■ 횡성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셋째야는 횡성에서 책임진다(요람에서 학교까지)</li> </ul> </li> </ul>



### 제3절 소결

- 본 장에서는 정책 환경 유형화에 따른 요인별 분석 결과를 근거로 각 유형에 따른 정책 설계 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하였음
  - 각 유형별로 정책 대상 집단을 선별하고 이들의 저출산 행태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설계하는 방식임
  - 그러나 이는 예시적인 방향일 뿐이며, 각 지자체마다 정책 대상별 행태 요인과 환경적 특성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정책 설계를 할 때에는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함
- 본 유형에서 제시하는 정책설계 방안은 각 유형별 평균적 특성에 근거한 것일 뿐, 유형 내에서 개별 지자체의 특성과는 다를 수 있음
  - 각 유형 내에서 시군구별 요인 특성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유형별 평균 특성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부록 <표 A-2>에서 <표 A-5> 참고)
  - 따라서 유형별로 주로 도시 지역에 해당하는 ‘시’와 ‘구’를 많이 포함한 경우에 ‘군’ 지역 -주로 농어촌 지역일 가능성이 높음-의 특성이 상쇄될 수 있기 때문임
- 각 지역의 특성에 좀 더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 설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환경 요인들을 포함한 유형화와 특성 분석을 포함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유형별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역 수준의 통계 데이터만을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음
  - 그러나 저출산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과 정책 환경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담 조사, 설문 조사 등을 통해 개인 수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에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 강경숙·변미희·정은미(2005). 시계열 자료를 활용한 저출산 요인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0(3): 127-145.
- 고영아(2015). 한국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 여성의 권리. 「아세아여성법학」. 18.
- 금창호(2017). 우리나라 저출산의 실태분석. 「지방자치」.
- 김나영(2014). 초저출산 농촌지역의 자녀필요성 결정요인 분석: 청도군 기혼여성 사례. 「농촌경제」. 37(3).
- 김민곤·천지은(2016). 저출산 정책으로써 출산장려금의 정책 효과성 연구: 서울 25개 자치구들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0(2): 163-190.
- 김승권(2003). 저출산 원인과 안정화 대책. 「보건복지포럼」. 86: 6-21.
- 김영록 외(2016).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의 적절성 평가 : 저출산 정책을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16-29.
- 김선녀(2014).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유아교육, 보육시설 현황분석 및 현황분석을 통한 개선연구. 「아동교육」. 23(4).
- 노승용 외(2016). 「중앙-지방 저출산·고령사회 극복방안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 2016-1.
- 문은영·권미애·전혜정(2016). 저출산·고령사회 이슈에 대한 정책대응 과제: 인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8(1).
- 민연경·이명석(2013).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문화의 출산을 제고 효과: OECD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3): 109-138.
- 박선영(2016).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가족돌봄유직제도의 발전방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서동희(2015). 저출산 극복의 새로운 길, 저출산 적응정책. 「공공사회연구」. 5(1).
- 서정연·김한곤(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38(3): 1-24.
- 석호원(2011).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5(2): 143-180.

- 신윤정(2013). EU국가의 출산율 및 가족 구조 동향과 시사점.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17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염명배·김영미(2011). 군집분석을 통한 저출산 원인 및 정책수요 도출: 핵심정책대상 집단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9(2): 163-190.
- 오유진·박성준(2008). 저출산의 경제학적 분석. 연세경제연구. 15(1): 91-112.
- 유계숙(2009). 저출산 대응정책이 출산순위별 출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2): 191-201.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최근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에 갖는 의미. 「보건복지포럼」. 102: 25-35.
- 이명석·김근세·김대건(2012).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정책 효과분석. 「한국행정연구」. 21(3): 149-174.
- 이명석·장한나·이승연·민연경·최상준(2012).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인식 조사: 주출산연령 여성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4(2): 29-64.
- 이미옥·명성준(2015). 출산장려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9(1): 331-351.
- 이삼식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석환(2014). 한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의 효과 평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6(1): 23-51.
- 이소영 외(2016). 「2015년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충환·신준섭(2013)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정책 현황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지방행정연구」. 27(1): 97-124.
- 장승희(2014). 한국의 저출산 요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1(2): 1-21.
- 장지연(2005). 여성의 경제활동과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02: 45-56.

- 장진희·박성준(2015). 「서울시 여성의 출산영향요인 분석을 통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정상천(2014). 저출산 문제 극복사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5(2).
- 정성호(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35(1): 31-52.
- 정수열(2013). 국내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논의와 쟁점: 지리학적 접근을 위한 소고 「국토지리학회지」. 47(2): 129-141.
-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조성호(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정책. 「보건·복지 Issue & Focu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효진·곽경희·조주연(2010). 사회·경제적 요인과 정책적 요인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4(4): 211-228.
- 최분희·이창원(2017). 우리나라 광역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187-213.
- 최상준·이명석(2013).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정책의 효과: 광역자치단체 출산·양육 사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3(1): 93-114.
- 최은희·조택희(2016). 패널분석을 이용한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8): 59-70.
- 최정미(2011).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수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정책과학연구」. 20(1): 138-161.
- 최지현(2014). 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기혼 여성들의 인식 및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연구. 「홍보학연구」. 18(2).
- 허만형·이정철(2011). 출산장려금의 정책효과 연구: 제도도입 전후 출산율 증감경향 비교 분석. 「한국정책연구」. 11(3): 387-411.
- Joëlle, E. S.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 대한민국정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시행계획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보완판)
- 시도 및 교육청.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총괄)
- 보건복지부(2016).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보건복지부(2015).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
- 매일경제(2017.6.8.)<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7&no=384510>
- 후쿠이 현청 홈페이지 <http://www.pref.fukui.jp/doc/joseikatuyaku/marriage/kekconsoudan.html>
- 스웨덴 연구소(Swedish Institute) 홈페이지 <https://sweden.se/society/10-things-that-make-sweden-family-friendly>
- 영국 정부 홈페이지 <https://www.gov.uk/child-benefit/overview>
- 프랑스 가족수당 공단 (www.caf.fr)<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connaitre-vos-droits-selon-votre-situation/vous-louez-ou-vous-achetez-un-logement/vous-demenagez>
- 프랑스 정부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education.gouv.fr/annuaire/75-paris/paris-13e/etab/ecole-maternelle-publique-longues-raies.html>
- 프랑스 정부 홈페이지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3132>
-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https://www2.health.vic.gov.au/primary-and-community-health/community-health/population-groups/children-youth-and-families/healthy-mothers-healthy-babies>

【부록】

<표 A-1> 유형별 지자체 구분: 시도 및 시군구 구분

구분	1유형(71개) : 저출산지역		2유형(53개) :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51개) :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51개) : 초저출산지역	
	시(32개)	군(32개)	시(7개)	군(8개)	시(38개)	군(29개)	시(15개)	군(13개)
서울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기장군			서구, 동구, 부산진구,			중구, 영도구, 남구
부산								

구분	1유형(71개) : 저출산지역		2유형(53개) :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51개) :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51개) : 초저출산지역						
	시(32개)	군(32개)	시(7개)	군(8개)	시(21개)	군(29개)	시(15개)	군(13개)					
대구					구(38개) 동래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인천		달성군			구(7개) 중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			중구, 서구		구(7개) 동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강화군	남구, 계양구	서구
					시(7개) 광주남구, 광주북구								

구분	1유형(71개) : 저출산지역		2유형(53개) :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51개) :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51개) : 초저출산지역				
	시(32개)	군(32개)	시(7개)	군(8개)	구(38개)	시(21개)	군(29개)	구(1개)	시(15개)	군(13개)	구(23개)
대전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울산		울주군			중구						
경기	평택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시	연천군	수원시, 고양시			동두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용인시, 파주시, 안성시, 화성시, 양주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의왕시, 하남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릉시			태백시			춘천시,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양양군	



구분	1유형(71개) : 저출산지역		2유형(53개) :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51개) :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51개) : 초저출산지역	
	시(32개)	군(32개)	시(7개)	군(8개)	시(21개)	군(29개)	시(15개)	군(13개)
충북	청주시	보은군, 진천군, 증평군		옥천군, 단양군	제천시	음성군	충주시	영동군, 괴산군
충남	천안시, 서산시, 논산시, 당진시	태안군		부여군, 홍성군	보령시, 아산시, 계룡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공주시	예산군
전북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전남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해남군, 함평군, 장성군, 진도군			목포시, 광양시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무안군, 영광군, 완도군, 신안군		고흥군

구분	1유형(71개) : 저출산지역		2유형(53개) : 초저출산탈출가능지역		3유형(51개) : 초저출산진입우려지역		4유형(51개) : 초저출산지역	
	시(32개)	군(32개)	시(7개)	군(8개)	시(21개)	군(29개)	시(15개)	군(13개)
경북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울진군	경주시	청도군, 울릉군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경남	창원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산청군	진주시, 밀양시	남해군, 하동군	통영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주: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외

&lt;표 A-2&gt; 1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1유형				전유형 평균
		전체 평균	시 평균	군 평균	구 평균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수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	41,887 (21%)	68,298 (23%)	10,604 (18%)	64,165 (26%)	56,677 (22%)
	초혼연령	29.15	29.17	29.04	29.54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284,181	7,355,789	998,802	6,708,807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9	30	24	46	38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명당)	161.49	276.03	30.89	238.17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명당)	6.82	10.01	3.54	7.37	10.29

&lt;표 A-3&gt; 2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2유형				전유형 평균
		전체 평균	시 평균	군 평균	구 평균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	81,237 (24%)	140,777 (25%)	8,772 (17%)	85,525 (26%)	56,677 (22%)
	초혼연령	29.85	29.65	29.25	30.01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4,880,524	8,594,012	1,012,647	5,014,269	4,753,332
	월평균 주거비	45	29	22	52	38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명당)	233.31	553.60	21.75	218.85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명당)	12.76	15.46	2.60	14.40	10.29

<표 A-4> 3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3유형				전유형 평균
		전체 평균	시 평균	군 평균	구 평균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	31,201 (20%)	57,403 (24%)	95,486 (17%)	108,889 (28%)	56,6776 (22%)
	초혼연령	29.09	29.18	29.01	29.38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3,369,080	5,873,598	1,404,344	7,751,561	4,753,332
	월평균 주거비	27	31	24	35	38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명당)	132.85	257.50	31.30	460.20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명당)	6.33	10.89	3.10	4.20	10.29

<표 A-5> 4유형의 저출산 요인 분석: 시군구 구분

(단위: 명, 세, 만원, 개소)

구분	요인 (지표)	4유형				전유형 평균
		전체 평균	시 평균	군 평균	구 평균	
인구 구조적 특성	가임여성 수 (인구 대비 가임여성 비율)	77,221 (24%)	108,073 (26%)	9,739 (17%)	95,242 (26%)	56,677 (22%)
	초혼연령	29.88	29.74	29.27	30.31	29.46
경제적 요인	지역총생산	6,605,838	7,419,050	949,059	9,272,791	4,753,332
	월평균 주거비	54	51	24	73	38
사회 문화적 요인	보육시설총계 (가임여성 10만명당)	217.44	378.84	22.65	222.29	184.52
	국공립어린이집 (가임여성 10만명당)	16.49	17.35	3.03	23.55	10.29